

발간등록번호

11-1103000-000008-01

# 코로나 19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국무총리비서실

#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

사회적 갈등해결과 미래 준비를 위한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국무총리비서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한 지 어느덧 9개월입니다. 그간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사적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국무총리에 취임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대화, 즉 ‘목요대화’입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더이상 늦출 수 없었습니다.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난 4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목요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요대화에 참석해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부에 힘을 주고자

다양한 분석과 제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귀중한 목소리들을 자양분 삼아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동’이 불가피하다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사고의 혁신과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선제적으로 변화를 이끈다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목요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른 의견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사회 변화를 준비하는 정부 정책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좋은 통찰을 제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값진 결실을 더 많은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자 대담록 형식의 책을 선보입니다. 그간 목요대화에 참여하여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각계 전문가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대화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가겠습니다. 민생이 살아나는 경제를 일구겠습니다. “국민의 큰 뜻과 지혜를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리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정세균

## 차례

### 발간사

2

### 1장 | 총론 ①

####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

7

코로나19 감염병 예측 모델링을 통한 미래전망과 과학적 대응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 | 코로나 이후 세계화 후퇴와 스마트한 정부 조직 | 코로나 시대 이후 지속 가능한 연대의 중요성 | 집단지성을 통한 위기 극복과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변화 | 코로나 이후 경제 효율과 국민 통합 | 확대 재정 정책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 |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 랫비 랫잇고 | AI 시스템을 장착한 세계 최초의 이동병원 개발 | 치료 전략보다 방역 전략을 통한 코로나 위기 대응 | 공공의료 및 사회 안전망 확대와 경제 살리기 | 반세계화 현상 속에서 미중 관계와 한국의 역할

### 2장 | 총론 ②

#### 과거의 통념 및 관습과 결별하기

55

After Shock :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 미래창조의 길, 4+1 Future 뉴딜 | 온라인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2차 대유행과 예방접종 | 국가, 정치, 지방정부의 강화 | 공공적 도토리 나눠주기 | 글로벌 밸류의 분열과 재구성 | 다기능성, 연결성을 갖춘 회복력 도시 | 코로나 정책 조정기능 강화 | 국가대개혁위원회, 동아시아 재난구조본부 설치, G9체제 모색 | 한국형 뉴딜의 근간을 그린 뉴딜로 | 스마트의료를 기반으로 한 돌봄 | 인간 안보와 국제적 역할 | 소비자의 데이터 소유권 | 상시적 위기에 준하는 미래형 거버넌스 |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 소리 없는 피해자, 취약계층 보호

### 3장 | 방역·보건

####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

93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체계 및 방법 | Post COVID-19와 보건의료 | 위험 등급별 시설 관리 및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 | 경제난과 공포로 인한 자살 |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의 기능전환 | PHDNA, 공공보건의료인 예비군 | 백신 주권 사망감 | 비대면의 안전성과 불신해소 | 마스크와 검사

### 4장 | 경제·산업

####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 전환

129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 이후의 경제 | 코로나19 이후 산업 변화와 대응 | 정부와 기업차원의 소비 증진책 | 확장적 재정정책의 속도조절 | 정치과정 속의 코로나 | 디지털 생태계 K-인더스트리 | 디지털 통상규범 | 코로나 이후 비즈니스 변화 준비 | 재난의 비대칭적 효과 | 코로나 세대 낙인화 방지 | 생명안전보건과 휴먼 뉴딜 | 외국인 국내기업인수 위원회 |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추진

### 5장 | 문화·교육

#### 온택트(on-tact) 사회를 향한 미로 걷기

167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 |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으로 | 재난 시대의 사회문화 거버넌스 | 창의적 문화컨텐츠 지원 | 미래교육에서 학교의 역할 | 학벌구조의 고용관행 타파 | 기술과 민주주의 | 코로나가 바꾼 세계의 교육 | 사회전환과 그린 뉴딜 | 민간주도 에듀테크

### 6장 | 공공·외교

####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과 국가 경쟁력

207

코로나 이후 재난관리방향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 | 원칙이 굳건한 외교 | 세계 비전 제시와 ODA 확대 | WTO 2.0, 국제통상질서의 재편 | 회복탄력성과 탈한국화 | 코로나로 인한 대혼란(The Great Disruption) |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기후위기 |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충돌 | 애자일(Agile) 조직과 유연한 클라우드 공무원 | 위기극복과 시민사회 | 코로나시대 대외경제 상황인식과 정책방향

### 7장 | 토론

####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과제와 전망

255

### 부록 | 소감

#### 목요대화 後

295

총론 ①

# 1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

“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사회 전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의 각계의 뜻을 모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세균 총리

## 목요대화의 문을 열며,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사회 원로와 석학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목요대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 숙고와 준비 끝에 오늘 첫 시작을 하게 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총리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모델’을 구상해왔습니다.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모시고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협치를 이뤄내고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자!” 오늘 시작하는 ‘목요대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위기는 역설적으로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발목 잡혀 있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배려와 연대’의 미덕을 발휘해주셨습니다. 착한 임대료, 헌혈 챌린지, 릴레이 기부, 철저한

발제	코로나19 감염병 예측 모델링을 통한 추이와 전망 데이비드 피스만(캐나다 토론토대 병역학 교수)
발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 성경룡(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 승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윤정로	UNIST 기초과정부 석좌교수
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 석좌교수
전영일	통계개발원장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자가격리 등 ‘배려와 연대’의 사례는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칩니다. 의료인·방역대원·자원봉사자들께서는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요대화’는 이미 코로나19 국면에서 성숙한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역 모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적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도 차분히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단순히 바이러스라는 병리학적 위기가 아니라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정도로 사회·경제·문화 등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이후(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19가 불러올 파장의 폭과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하였고, 우리 경제에도 마이너스 성장(-1.2%)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이미 코로나19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양에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Never wastes a good crisis)”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 원로와 석학 여러분을 모신 것도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값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6차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내딛는 걸음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따라 걷는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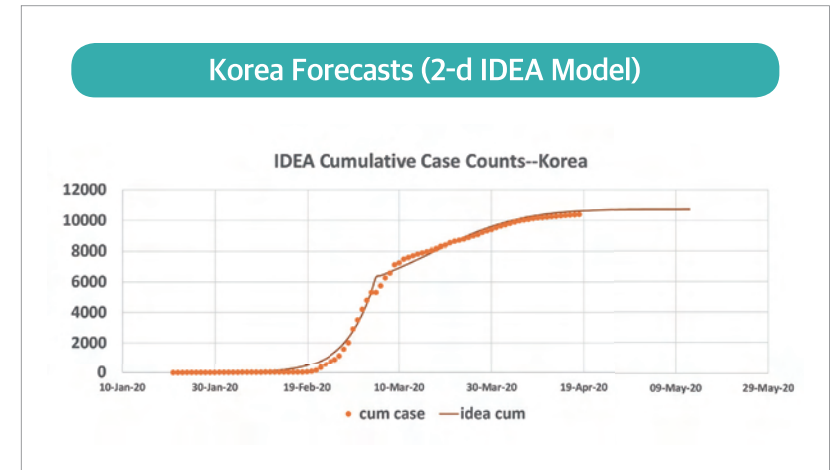
## 코로나19 감염병 예측 모델링을 통한 미래전망과 과학적 대응

**피스만** 한국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캐나다 토론토 대학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측 모델링과 코로나19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월 말 세계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약 250만 명에 다다르고, 그 가운데 약 7%의 치명률, 다시 말해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캐나다 공동연구진」은 지난 3월 초부터 아이디어(IDEA)라는 과학적인 예측 모델링을 통해 전체 확진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 예측하였고, 실제 3월 초부터 4월까지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보고한 구체적인 통계와 유사성을 보입니다.(표1-1) 코로나19 감염병 주기의 예측, 즉 그 정점의 시기 그리고 감염병의 안정기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2020.4.23 제1차 목요일대화 | '코로나19 감염병 예측 모델링을 통한 미래전망과 과학적 대응' - 피스만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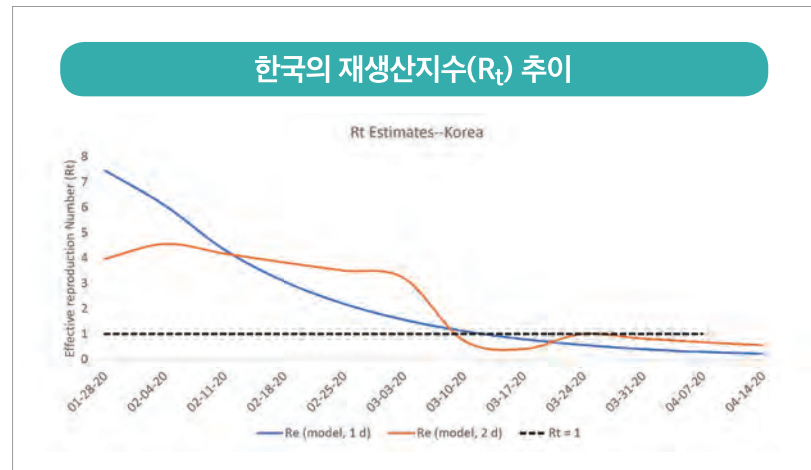
<표1-1> 한국형 IDEA 예측모델(Korea Forecasts : 2-d IDEA Model)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말 1만 1천 명 정도 확진자 발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예측모델(2-d IDEA Model)은 방역의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3일 국가 위기 공식 선포 뒤부터 종합적인 방역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예측모델에 따르면 여러 개인과 사회,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통해 약 340만 명에 다다를 수 있었던 확진자를 사전에 예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선제적 방역이 없었다면 5월 중순 무렵에 감염 곡선의 정점에 이르러 가을까지 위기는 지속되어 약 340만명이 감염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종합적인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4월 중순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생산 지수( $R_t$ )를





<표1-2> 한국의 재생산지수 추이 : 2020년 1월 -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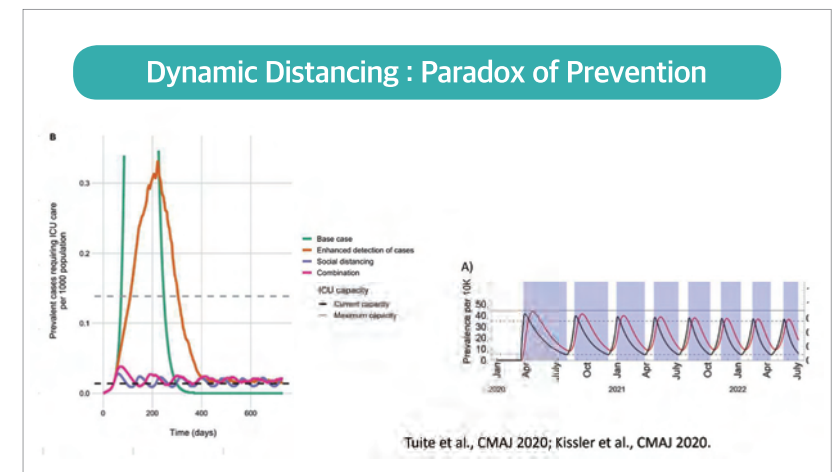
측정하는 것입니다.(표1-2) 한 사람의 확진자가 감염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측정한 재생산지수에 따르면 3월 11일부터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안정기로 들어섰습니다. 즉 한 사람의 확진자가 다른 사람을 1명 이하로 감염시키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재생산지수는 0.3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안정기로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약/완급을 조절하는 ‘다이너믹 거리두기’를 제안합니다. 이미 「한국통계개발원」과 함께 제안한 이 ‘다이너믹 거리두기’라는 과학적인 조치를 사용한다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기까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과 토론토대학이 각각 연구한 ‘다이너믹 거리두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다이너믹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표1-3)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체계적인 조기 위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재생산 지수’를 계속 낮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면역 또는 항체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필요한 감염 확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셋째, 유아 등 어린이와 노인 요양원 등을 특별 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공항 등을 통해 유입하는 외국인 방역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 확진자들의 병실을 별도로 준비하여 중증 감염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시설로써 운영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과 캐나다가 동일한 목표 아래 투명성을 갖고 코로나19



<표1-3> 다이너믹 거리두기(Dynamic Distancing)의 효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캐나다 부수상께서 공감한 제안들입니다. 먼저 양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양국의 과학자들 또한 동일한 목표 아래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의료와 방역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업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세균** 피스만 교수님이 예측하신 아이디어 모델에 의하면 한국은 4월 즈음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의 변곡점에 이를 것이고, 실제 그런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특히 예상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있을 때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스만**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코로나19의 특성상 보이지 않는 감염에 대한 대비책이고 둘째, 재생산 지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관련 데이터를 측정해야 합니다. 어떤 인구나 지역의 특성상 재생산지수가 ‘2’가 되거나 ‘3’이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수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첫째, ‘스크리닝’이 중요합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항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그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등의 장소에서 무증상 환자들을 선별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한 사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세균** 강도 높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한국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또한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해도 ‘2차 대유행’이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스만** 먼저 두 번째 질문인 ‘2차 대유행’ 관련입니다. 지난 1918년 ‘팬데믹’이 왔을 때 3년 동안 4차례 대유행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은 캐나다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코로나19 검진 시스템이나 확진자 치료와 자가 격리 체제를 잘 구축하여 왔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서 조기 경보할 수 있다면, 한국은 현재처럼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

**성경릉** 총리 취임 당시부터 구상하였던 목요대화는 대화와 협치에



관한 노력 측면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모색하는 데 이정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 전망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신천지 사태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였으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피스만 교수는 세계 전체 동향이 안정화될 수 있음을 예측했는데, 저는 현재 드러난 데이터 이면의 상황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 중남미 등에서 어떤 변수가 작동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2차 웨이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므로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전역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대응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민주적 개방, 포용, 국가와 시민 역량의 결합을 통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토마스 프리드만, 유발 하라리, 빌 게이츠, 트럼프 대통령 등 국제사회의 리더들도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계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도전은 실로 엄청납니다.

우선 고용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BBC는 ILO의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억제로 인해 4월 초 전 세계 33억의 노동자 81%의 직장이 전부 또는 일부 폐쇄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노동자 20~40%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최대

2억 명이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고용 전망 속에서 미국은 3월 중순 이후 최근까지 4주 동안 4천7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자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대공황 시기의 실업률 24.9%를 7% 이상 상회하는 엄청난 고용절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2%로 전년 동기 대비 1%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문제는 임시 휴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6만 명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다수의 실업자가 도소매·음식·숙박·교육서비스 등 우리 경제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서 발생한 점이 우려됩니다.

경제 분야의 전망도 어둡습니다. IMF는 지난 4월 초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로 급락하고, 특히 독일·스웨덴·영국 등



2020.4.23 제1차 목요대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 - 성경룡 이사장

유럽권 국가들이 미국과 일본의 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1.2%를 예상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이 6.1%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리라 예상됩니다. 한국은 -1.2% 정도 예상하지만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 우리에게 미치는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고용 절벽, 정치 사회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까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방역과 경제회복의 병행, 개방적·포용적 국제협력의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3단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text{재생산} \cdot \text{감염률 지수}) = p(\text{개인적 감염확률}) \cdot c(\text{사회적 접촉 빈도}) \cdot d(\text{감염기간})$ 라는 공식을 기반으로, 개인방역을 통해 개인적 감염확률( $p$ )을 낮추고, 정부방역을 통해 감염기간( $d$ )을 최소화하는 조건 하에서 사회적 접촉빈도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p \cdot d$ (개인적 감염확률\*감염병 지속 시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생활방역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틀 속에서  $R$ 의 수치 또는 2주간 1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별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방역과 경제회복의 병행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초까지 우리나라 재정지출규모는 0.9%로 G20 국가 가운데 최하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8조 달러의 재정지출계획 중 무려 7조 달러가 G7 국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9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고, 국무총리께서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고용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본 틀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방·포용적 국제협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비전으로 채택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리에 따라 내국인 지역 봉쇄나 외국인 국경 봉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내·외국인을 모두 포용하고 차별 없이 검사와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포용국가의 정신을 잘 발휘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협의 확대에 대비하여 기술혁신 등 다양한 정책으로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포용은 혁신을 필요로 하고, 포용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임을 모두가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불투명하고 불확실성도 높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미래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O2O 통합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오프라인의 온라인화’ 흐름 속에서 ICT 기술의 최고 전성기가 도래하고, 생산, 유통, 소비, 상담과 거래, 회의, 교육 등 많은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대로의 도약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셋째,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저성장과 저고용 시대가 장기화되고, AI, 로봇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계층이나 국가와 그렇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

### 5대 전환적 뉴딜의 추진

- 1 미래의 예상되는 위험 (대량실업, 대규모 기업부도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전환적 뉴딜 추진
- 2 휴먼 뉴딜 사회보장 확대, 국민역량 증진 투자, 교육혁신 투자
- 3 디지털 뉴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전환을 위한 투자와 인재 양성
- 4 그린 뉴딜 재생에너지 생산, 건물과 생산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개선  
\* 특히 포스트 코로나 반영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적 전략 수립 → '21년 P4G 정상회의 연계
- 5 한반도 뉴딜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및 인도주의적 지원과 평화경제 건설
- 6 글로벌 뉴딜 신흥국/개도국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보건의료 및 환경개선 분야 지원, 인재양성 지원, Eco-Health Smart City 투자

###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 투자를 통한 미래지향적 신경제 구조 형성

- 1 경제회복 및 재정기반 확충 →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교육혁신 전략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경쟁력 구축
- 3 Global Value Chain의 복원과 Reshoring 추진

### 국제협력 증진 혁신적 포용국가와 세계 포용국가의 비전

- 1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한국이 인류 공동의 위험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확대
- 2 세계 여러 나라들과 코로나19의 역학 데이터와 치료과정에서 생성한 임상 데이터 공유
- 3 특히 경제적 역량과 보건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집중 (검진 키트, 마스크, 의약품, 역학/임상 데이터 등)  
→ Global Soft Power 활용과 세계 포용국가 연합 구현

### 사회적 관계 강화 및 공동체 복원 전략

- 1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 공동체의 약화 등 '인간 위기'와 '사회적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실천 추진
- 2 이를 위해 Real/Offline Community와 Virtual/Online Community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표1-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

많은 계층이나 국가 사이에 불평등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고 사회적 배제와 대결이 확대되어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차별과 인종주의, 국수주의적 경향이 증가하고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갈등과 충돌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쇠퇴와 함께 세계 평화가 더욱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술과 경제면에서 더욱 고도화되고 첨단화되지만, 사회·정치적 측면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두 얼굴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표1-4) 첫째, 대량실업과 대규모 기업부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한반도 뉴딜, 글로벌 뉴딜 등 전환적 뉴딜을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투자를 통한 신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국민의 창의적 역량과 협동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고용·복지·교육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기술혁신이 지속적 고용 및 사회보장 체계와 잘 통합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와해되거나 약화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복원하고, 스마트 전략과 결합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은 물론 많은 개도국들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협력의 범위를 경제회복, 공동연구개발, 인재양성 등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포용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세계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적 방역이 생활화되는 현실 속에서 인간관계의 단절이 심화되고,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변화무쌍한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전반에 걸쳐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일은 엄청난 위험과 자원의 재배분이 수반되므로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과 갈등을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와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경제적 번영, 사회적 연대, 개인적 행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바꾸고, 세계평화와 세계공익을 증진하는 사명을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코로나 이후 세계화 후퇴와 스마트한 정부 조직

**하준경** 저는 경제학 교수로서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난 20~30년간의 경제성장 흐름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화의 후퇴입니다. 중국(China)과 미국(America)을 합한 ‘차이메리카’라는 시스템은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국경이 과거처럼 점차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글로벌 공급 사슬에 의존해서 효율성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안정성이나 백업하는 기능도 주목받고, 시장 접근성이 좋은지, 즉 시장에 가깝게 공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지는 생산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산업 특히 디지털 유통·원격 의료·자동화 등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정부의 역할 변화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끝나면 가장 큰 채권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정부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위기 이후의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료주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한 정부로 갈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경제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2달 동안 거대한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학습 경험을 헛되이 날리지 말고, 이를 잘 키워서 새로운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같은 방식은 여성의 경력 단절이나 노동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하면서 얻은 규제 혁신 경험을 발전시켜 정부가 더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방역에 비유하면 록다운(Lockdown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역은 단 한 명이라도 추적·선별해서 격리하는 스마트한 방식으로, 경제 대책은 아직 이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을 정확히 선별해 스마트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메커니즘 디자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피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스마트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규모가 커질 때도 이런 메커니즘 디자인을 잘 활용한다면, 관료주의가 아닌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합니다.

## 코로나 시대 이후 지속 가능한 연대의 중요성

**윤정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속 가능성과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는 현대적 상황에서 다분히 정치적 폭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잠재적 리스크에 예민한 편인데, 리스크가 현실화 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높은 수준의 시민 정신과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정부가 취한 냉철하고도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이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부 통계와 대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

입니다.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처 능력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뢰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려움과 희생을 감당한 국민에게 공감을 표시해야 하며 희생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닌 정직하고 진실한 공감 방식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받는 전문가들이 앞장서야 하며 여야 정치인들도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특히 시민사회 의식이 중요하고 진단키트와 마스크 생산에서 보여줬듯이 산업계도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가진 최선의 정보를 냉정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일 채널로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20.2.15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퇴소 및 격려 방문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폭발력이 높은 것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 기업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핵심적인 분야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분야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관건이 되는 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약과 전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집단지성을 통한 위기 극복과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변화

**조한혜정**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학습을 하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며,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하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갑자기 ‘대한민국의 위대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진국이 너무 형편없이 대응하니까. 한국을 띄우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적어도 방역 면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편인데 어떤 면에서는 거품이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분석해 보면, 우선 우리는 파란 많은 근대사를 거쳐오면서 위기에 체질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중심의 자원 봉사의 전통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사태는 코로나19를

확산시키며 전국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치료 공간도 부족했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참여가 물밀듯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기술 개발에 관한 급진적인 수용이지요. 지나친 과학기술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밀하게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과 국가, 시민 등 3자 협력 체제를 제안합니다.

시장 주도 형식도 좋지만 정부, 전문가, 시민들이 제대로 협력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탑다운 형태를 지양하고 국가와 시민, 전문가집단, 시장 등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정리해내는 집단지성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의사만이 아니라 방역 연구자들, 보건소, 간호사, 돌봄 교사 등 긴급상황에서 가장 많은 수고를 하고 전력투구하는 이들을 포함한 연구진과 협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들이 지치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대응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방식 수업을 잘하는 교사들의 활약을 잘 담아내야 합니다. 교사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직 온라인 수업이 준비가 안 된 학교가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획일적으로 가면 안 가느니 못합니다. 첨단 실험을 하는 교과과목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무엇인지를 묻는 교사가 많아져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젊은 교사들이 참신한 방식의 수업들을 고안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고안들이 새로운 교수법이라기보다 좋은 의미에서의 기법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좁은 의미의 전문가주의로 가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이 전문가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문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때이니깐요. 디지털화를 잘 한다고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의 판 자체를 바꾸고 그간의 상식 자체를 뒤집을 수 있어야 하지요.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교사는 학생들을 한명 한명 보살피는 능력을 가진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생각하면서 가르침과 돌봄을 해갈 수 있는 교사들이지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고수 하는 돌봄과 교육이라는 이분법부터 사라져야 합니다.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들라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아이를 지배하지 않으면서 성장시키는 돌봄의 능력과 다른 동료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창의적 공공지대를 만들어내는 능력일 것입니다. 경쟁과 적대의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이런 것을 불가능하죠. 소통과 상생의 감을 가진 교사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공부 잘 하는 모범생 교사는 지금과 같은 급변의 시대에는 적합한 교사가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을 읽어내고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과 어울리는 것과 보살피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이들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무원사회도 상호 돌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탈봉건 근대화 세대부터 포스트 모던, 포스트 휴먼 세대까지 문화적 문법 자체가 다른 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충돌, 계급 간 충돌, 여성과 남성 간 충돌이 극심하다못해 적대와 혐오로 흐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험의 격차가 아주 큰 것이지요. 그것을 다양성으로 연결해내면서 이 팬데믹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위험 사회를 인지하는 다양한 반응들을 파악하고 그 다양성을 다 포용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획기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인식론전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역사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 탈입시교육과 새로운 AI 시대의 교육, 온라인 교육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계의 디지털화는 그간의 입시 중심 체제를 EBS 과외처럼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의 입시체제를 유지하면서 가졌다면 정말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 탈근대, 탈휴먼 사회로의 전환을 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나침반을 찾아야 하고 새 길을 내는 실험을 적극 밀어주고 글로벌 협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침 오늘 캐나다의 사례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는데 저는 캐나다가 가려는 방향에서의 실험적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의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카이스트 부총장도 오셨는데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돕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만물이 서로 적대하는 사회가 아니라 만물이 서로 돕는 사회로 전환을 해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소식이야 말로 희망을 안겨 줍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유치원 아이들과 놀아주고 대학생이 중학생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면서 제대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배워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간 우리가 매우 폐쇄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 안에서 지역 방역을 하면서 개방적이고 관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시대에 온라인 상에서 글로벌 시민이 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안정적이고 교육적인 마을과 같은 환경에서 활동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손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낼 수 있으면 합니다. 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연변이가 필요하고 그런 돌연변이로 생긴 세포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상적 삶 속에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2020.4.23 제1차 목요대화 | 조한혜정 교수, 박승 교수

## 코로나 이후 경제 효율과 국민 통합

**박 승**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1년 정도는 지나야 경제가 다시 정상화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크고 수직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생산과 국민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건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경제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V자형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경제 효율과 국민 통합을 양대 축으로 하여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경제 효율을 높이려면 정책 방향은 친서민·친기업·친시장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실사구시의 실용주의적 방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정치·포용사회·포용경제를 지향하고 정치는 설득과 협치로 소수를 배려해야 합니다.

당장의 문제는 대규모의 실업 사태에서 국민 생존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의 경영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그 방법이란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정책을 써야 하고 재정도 확대정책을 써야 합니다. 돈을 푸는데 있어서 정부는 재정수지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 그리고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금 크지 않습니다. 자산 거품이 문제인데 과거 일본은 1980년대 저금리 하에서 축적된 자산 거품이 1990년대에 꺼지면서 20년의 장기불황을 유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특히 부동산거품이 문제인데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단호히 차단하여 풀린 돈이 생산시장이나 증권시장으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실패한다면 정부의 경기대책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차치하면 일본의 아픈 경험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안에 금리를 정상화하고 풀린 돈도 점진적으로 회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적자가 커지게 될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에 여유가 있는 만큼 우선 당겨쓰고 경제가 좋아지면 흑자재정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는 160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도산위기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했습니다. 공적자금은 정부보증채권을 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환경과 국민 생활은 크게 바뀔 것이며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기후와 자연재해 등 지구환경변화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도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산업 성장은 제조업 중심에서 4차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은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확대가 성장반경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결국 가계소득 증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수출증가에 따라 투자와 고용을 늘려 가계소득을 보장했지만 수출감소로 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기득권 소유자는 의사, 약사, 공무원에서부터 노조,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일치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 개혁은 진보 정부에서 추진해야 성공률이 높는데 이 분야는 현 정부 정책 가운데 성취도가 가장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많은 경우 고액급여를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보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복지 증대를 보장하고 노조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동유연성 등 개혁에 동참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혁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물가는 30배 올랐는데 집값은 3,000배 올랐습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먹고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 이른바 빈곤화 성장의 근본 원인이 여기 있고 날로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빈부세습이 여기서

발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면에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면에서는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젊은 계층의 신규수요를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국세로 전환하여 중앙의 종합부동산세와 통합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다른 방식으로 보충해 주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경제가 성공하려면 우파 정부는 집권 후 다소 좌클릭하는 것이 좋고, 좌파정부는 집권 뒤 시장 경제 쪽으로 다소 우클릭해야 효과적입니다. 이 말은 경제 효율과 국민 통합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이념보다도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확대 재정 정책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

**윤성식** 코로나19 대책은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돈과 사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향후 1~2년 이내에 국가 부채 논쟁이 일어날 듯합니다. 국채와 관련하여 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당장 돈이 필요한 국민은 향후 국가 부채 논쟁이 발생하면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무언가 정부가 사회주의 경제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예산을 보면 10~20%는 낭비 요소가 있으며,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견 또한 30% 정도 낭비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예산의 구조조정 기회이며, 이럴 때 국민 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단순히 돈만 뿌리는 형태로 인식하고 국가부채 논쟁이 발생하면 굉장한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 대처를 위한 신뢰 또한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일부 시행하면서 확대 재정도 병행하는 매칭 정책을 첫 번째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인력의 문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 국민의 생각은 공무원



2020.4.1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야당까지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제 역할을 잘하는데, 정부의 노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일부 분야는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보건위생과 방역 등은 특히 정부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편으로라도 공무원 조직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공무원 조직을 보면 한가한 곳이 눈에 띕니다. 특히 국민의 눈에는 노는 공무원밖에 없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종청사에 가보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아주 바쁩니다. 과로사할 정도로 숨 가쁜 공무원도 있고, 출근 시간 이전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인원’을 늘려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심지어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전문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분야는 반드시 증원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위기에 대처했듯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분야의 인원은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무원 증원을 화두로 삼으면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국민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줄여야 할 곳은 과감하게 감축하면서 확대해야 할 부분 또한 증원하는 매칭 정책으로써,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정부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건의 사항은 모든 정책과 제도에 있어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동안 확진자는 동선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까지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 렛잇비 렛잇고

**최재천** 저는 생태와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관계라는 프레임에서 바라보며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좀 큰 그림으로 제안합니다. K-방역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한 한국을 두고 세계인이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K-정치라는 말도 들립니다.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난국에 선거를 잘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칭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방역을 아무리 잘해도 굶어 죽느니 차라리 병에 걸리고 싶다”라고 말한 인도 사람 관련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를 아무리 잘 막아도 사람을 굶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다음 단계는 K-경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실행할 생각이라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패러다임을 ‘중심’이라 표현하여 이번 기회에 중심을 한번 이동시켰으면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티 기반이 먼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중심으로 확실히 옮겨가면

어떨까요?

이미 우리 사회는 국민이 정부보다 더 빠른 디지털 라이프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은 상당 부분 디지털화되었는데, 정부가 뒤따라가면서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중심을 아예 젊은 세대, 즉 디지털 세대로 확실히 옮겨 놓고 모든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까요?

포용 국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 한 순간이라도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 또는 모두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방식이라면 지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옮겨가되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분들을 교육하여 끌어안고 함께 가겠다는 의미로서 포용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가면서 뒤에 처지는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포용이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끌어안으려고 한다면 앞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미래학자들 중에 “미래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외국을 벤치마킹하는 구태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참에 정말 앞서가는 나라로 변화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담당자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기안해서 올리면, 국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추려서 장관에게 가져갑니다. 장관은 또다시 서류를 검토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대만의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은 ‘같은 형태의 기안서를 디지털 그룹’에 띄웠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으면, 하루 이틀 만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미 젊은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집단지성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좀 장난스럽게 들릴 수는 있지만, ‘렛잇비’하고 ‘렛잇고’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렛잇비는 ‘냅뉘!’이지요. 자, 이제 좀 우리 젊은이들을 좀 내버려 두자고요. ‘렛잇비’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좀 믿어 봅시다. 그래서 이들이 뭔가 할 수 있게끔 풀어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지 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수업도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아이들 스스로 배우게 그냥 놔두고, 선생님들은 잘 못 하는 아이가 있으면 돕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 각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렛잇고’하는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이세돌 9단과 알파고가 광화문 근처에서 대국을 벌였습니다. 모든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준 기막힌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세계적 대재앙을 기회로 삼는 것이 조금 씁쓸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싶어 가슴 벅차기도 합니다. 어영부영 조금씩 무언가를 고치거나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큰 틀에서 미래 혁신을 시도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나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이런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식의 선언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AI 시스템을 장착한 세계 최초의 이동병원 개발

**이광형** 저 역시 최재천 교수의 생각과 비슷한 맥락이 될 거 같은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은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재앙에 맞서 자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회의 여러 조직과 국민의 협조 또한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초기 위기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 의식 등 삼박자가 잘 맞아서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큰 수확은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의료기기 부문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5년 후에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것들에 관한 시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 개혁을 통한 규제 혁신을 코로나의 영향력을 빌어서 실행했으면 합니다.

둘째, 기술개발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구상 중인 것이 바로 이동병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인텔리전스 엠블런스인데, 이동이 용이한 차량에 진단 진료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원격 진료 등이 가능토록 만드는



2020.4.23 제1차 목요대화 | 정세균 총리, 이광형 교수, 전영일 원장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인이 차에 타고 있지 않아도 초보 수준의 간호 인력만 있으면, 원격 진료를 통한 초기 진단 치료가 가능하도록 AI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스템을 장착한 이동형 병원을 개발하면 아마도 우리가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 치료 전략보다 방역 전략을 통한 코로나 위기 대응

**홍운철** 코로나19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저는 의료 문제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피스만 교수가 하나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피스만 교수가 언급한 것은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면 강화와 완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관리하다가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코로나19가



2020.4.23 제1차 목요대화

종식되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큰 줄기는 백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과 항체가 백신에 의해 충분히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과학적 데이터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 후의 중화항체 형성률이 낮게는 3%이고 많아야 15%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감염병의 중화항체 형성률은 80~90% 정도 되어야 충분한 면역성을 갖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과거의 전염병과 다른 특성들을 보입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치명률도 높고 항체가 잘 형성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그동안 잘했던 검사(testing), 추적(tracing), 그리고 치료(treatment)라는 방역의 3T 전략의 흐름을 잘 이어가자는 말입니다. 즉 검사를 확대하고 추적을 잘해야 합니다. 현재

1일 확진자가 10명 미만이라서 상당히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 명이 100명을 만들고 다시 1,000명을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면 다시 재생산 지수가 올라 갑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진단능력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환자가 발생하면 의심 단계에서 검사하는데, 실제 발병일로부터 1~2주나 늦기 때문에 앞당겨서 진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적어도 한 1주일은 앞당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분들도 검사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나 요양원 등 타깃을 정해서 검사하고 또한 현재 검사 건수를 줄이지 않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메르스 때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이번 사태에는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의 역할이 그 뒤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들은 정부에서 긴급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대응에 쉽게 활용됩니다. 이번에 공공병원에서는 병원 내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고 많은 환자를 치료한 것도 사전에 준비된 시스템 덕분입니다.

만일 공공병원이 1차적 방어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위기 대응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 발생 시 뼈대가 되는 공공의료 체계가 있고 동시에 민간의료 체계는 협력 지원 관계로서 상생 구조로 가야만 안전한 의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공공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선제적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료 및 사회 안전망 확대와 경제 살리기

**조흥식** 저는 5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방역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변형되고 다시 재변형되어서 백신 시장에서도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역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현재 10%에서 30%까지 확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독일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원인도 병상 수에 있습니다. 공공의료 기관은 15%밖에 안 되지만 민간 의료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합니다. 향후 민간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생명을 다루는 곳은 모두 비영리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며 영리 법인화를 지양해야 합니다.

그나마 대구사태에서 보듯이 모든 병원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통제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영리 법인이라면 누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오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 위기 상태를 잘 극복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영리 법인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둘째, 취약 집단층을 포함한 서민들의 민생을 살펴보고 사회생활 전반적인 차원에 걸쳐 그들의 복지를 잘 챙겨야 합니다. 세계경제기구들도 21세기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용 성장이라는 개념도 결국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8년 경험한 세계금융위기보다 이번 코로나19가 준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가 취약 집단층을 살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비교적 사회보장체계가 잘 갖춰져 사회 안전망이 평소에 잘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을 강조해서 접근해도 복지 분야는 당장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의 양과 질적 수준이 충분치 않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드시 사회 안전망을 갖추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 살리기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산업의 하청과 재하청 구조 문제의 해결과 노동 개혁이고, 그 다음이 R&D 관련 변화입니다. 오늘은 R&D와 관련해서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산·학·연 순으로 R&D의 비중과 예산이 구성되는 사례를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먼저 학문과 과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연구의 핵심은 대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성이 약한 사립대학이 많다 보니 R&D의 많은 부분이 기업과 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R&D를 운영하거나 대규모로 연구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책연구원이 그 역할을 상당히 맡는데, 이런 경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연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어떤 외적 영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학에서 먼저 실행되도록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산·학·연을 선진국처럼 학·연·산으로 바꾸는 등 경제 살리기의 터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 시켜 분명히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화를 증폭시켜 갈 것이기에 언택트 현상은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젠 대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고독 속의 새로운 컨택트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나 가족의 역할, 시장의 역할, 시민 사회나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국가의 귀환’을 분명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관료주의는 또 다른 관리 비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시민 사회, 시장, 그리고 정부가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K-방역의 원칙대로 소통이 잘 되게 하는 ‘개방성’, 국민의 알권리를 채워주는 ‘투명성’,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성’의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일본 식민지적 발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법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법률의 만능화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법과 관련된 것들을 디지털화하여 스마트하게 운영하면 법의 형량이나 양형도 들쭉날쭉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의 만능화가 좀 줄어들어 서로 믿고 일하듯이, 마치 최재천 교수님의 의견처럼 사람들이 ‘렛잇고(Let it go)’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만능화와 법의 경직화를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반세계화 현상 속에서 미중 관계와 한국의 역할

**윤영관** 코로나19 사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하고, 4월 미국 실업률이 미국 일부 언론보도에서처럼 20%가 되면 1935년 대공황 수준이기 때문에 V자형 회복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자가 격리를 풀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윤철 교수가 설명해 주셨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전염력과 치명률이 높고 현재 백신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2차 대유행의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 또한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여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일반인 접종이 가능할 때까지 코로나19의 재앙은 계속 확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 1년 반 이상 동안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는 자가 격리 조치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매우 큰 사건이고, 치명적 충격을 받습니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세계화 현상이 중단되고 반세계화 흐름이 강화되는 경향입니다. 1870~1914년까지 1차 세계화 라운드가 있었 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20년 동안에는 반세계화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때처럼 코로나19가 가져온 위협은 세계의 모든 경제 활동을 암흑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전략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무역 및 수출주도 전략이었으며, 이것은 세계화를 전제로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화라는 대전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의 경제 전략을 세계 현실에 비추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의존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기업의 귀환을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기업 규제 개혁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하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 개혁 문제는 앞서 언급되었고, 사회 보장과 사회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성이 동시에 달성되는 경제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달성하려면 국민의 대타협이 필요한데, 이번 총선 결과가 그런 틀을 만드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외교 관련 사항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충격은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리더십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자유주의 질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친 원인은 미국의 국내 상황이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2020.4.23 제1차 목요대화 | 윤영관 교수, 윤정로 교수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경제 분야에서 불평등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한, 차기 대통령은 세계화 정책을 지지해 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리더십 역량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개방 사회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감시 국가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런 체제는 코로나19 대응 방법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는 모든 것을 숨기려 하고 권위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 때문에 “중국이 민주주의적으로 투명하고 개방성을 갖고 코로나 발병 초기에 대처했다면, 지금 세계가 처한 코로나19 피해는 5% 정도 선에서 이미 끝났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파로 인해 반중국 정서가 심화되고 있고, 자신들의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의료품 지원 등 외교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훨씬 전 1970년대부터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이 서구 민주주의적 정치·경제·사회·문화 방식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현상을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미 국제기구들 역시 모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국가적 재난 대비 능력을 아주 튼튼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질병 관련 대비 능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10~20년이란 긴 시간에 걸쳐 구축된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위협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과거 소련, 미국, 일본도 원자력 발전 관련 안전 문제가 터졌는데, 현재 북한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나 생태계 오염 등 환경 관련 재앙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안전에 대한 대비 능력도 철저하게 길러놓아야 합니다. 10~20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 성급하게 어떤 국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외교 정책입니다. 한·미 동맹의 대전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기존 외교 전략 틀도 당분간 유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사드나 AIIB와 같은 그때그때의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미국이나 중국과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권 사항에 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와 아세안 여러 나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채택해야 할 것은 남북 간 구심력 강화입니다. 구심력이라는 것은 남북 주민들간 관계를 회복하고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것을 강화시켜 놓아야 한반도 평화나 통일이 장기적 측면에서 가능해집니다. 남북 간 경제 협력도 핵심 사항인데 현재 북핵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보건 의료 협력이나 환경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남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코로나19의 뛰어난 대처로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로 부상한 한국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북 보건 의료 협력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국제 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세균



정총리의 '목요대화'를 인상깊게 보고  
캐나다판 '목요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다른 조치도  
배워가고자 합니다.

프리랜드 부총리

크리스티아 캐나다 부총리와 전화 통화 [20.5.12.]



총론 ②

2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 과거의 통념 및 관습과 결별하기

“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도전을 위해  
젊은이들의 '발랄한 상상력', '거침없는 도전'이  
십분 발휘되고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을 높여야 합니다.

”





**발제** After Shock :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송길영(바이브컴퍼니 부사장)

**발제** 미래창조의 길, 4+1 Future 뉴딜 이광재(국회의원)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김원수 여시재 국제자문위원장  
김원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 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기모란 국제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일반대학원 지역학 교수  
박용진 국회의원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지범 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세균 총리

## 과거의 통념 및 관습과 결별하기

목요일대화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면, ‘위기를 넘어, 더 커진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번 1차 목요일대화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 이동(Paradigm Shift)’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심이동’된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불확실합니다. 다만, 불확실성에 응전하는 우리의 자세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협력>과 <도전>이 그것입니다.

노동자, 기업인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도전을

통해 과거의 통념과 관습과 결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언택트문화, 비대면접촉 등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현상들은 개인과 기업 모두 기존의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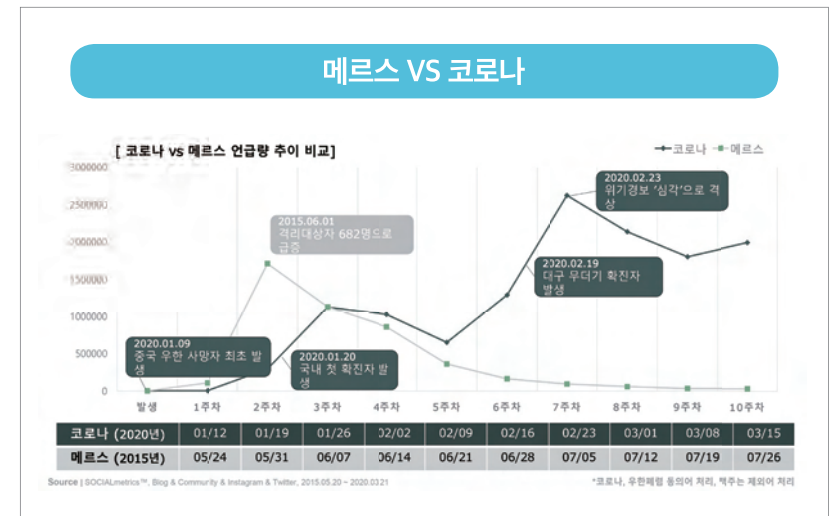
먼저, 젊은이들의 ‘발랄한 상상력’, ‘거침없는 도전’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십분 발휘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전환, 스마트 교육 등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기반 마련에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이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각계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와주셨는데, 가감 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준비 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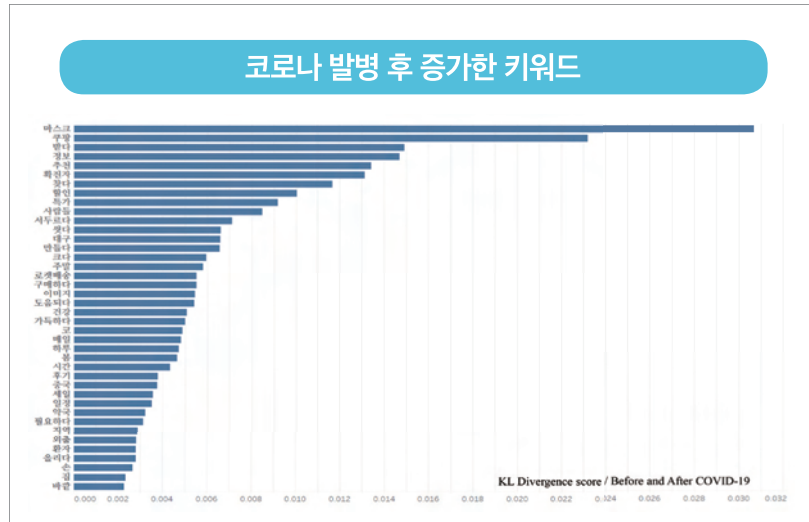
## After Shock :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송길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라는 말 자체의 무게가 달라 지고 정말 안녕함에 대한 부분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활변화관측소’를 만들고 삶의 변화를 계속 바라보는 일을 하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어떤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공유 하겠습니다.



<표2-1> 메르스 VS 코로나

인간은 원래 회고적(retrospective)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런 형태의 질병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래프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표2-1) 천양지차입니다. 메르스는 8주 만에 끝났고요. 지금 코로나19는 전체의



<표2-2> 코로나 발병 후 증가한 키워드

흐름에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이미 3~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현생인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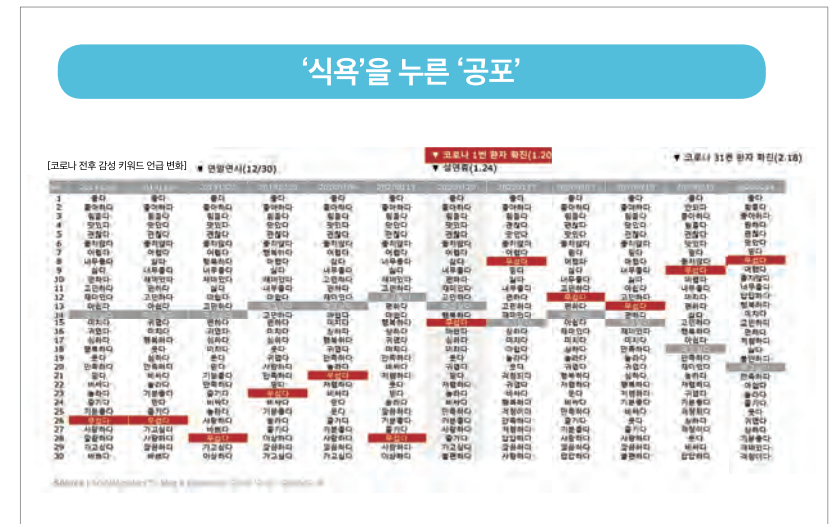
최근 4개월 동안 가장 많이 변화된 키워드를 뽑아 봤더니 마스크나 온라인 쇼핑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표2-2) 이 중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로 마스크, 확진자, 집, 시간이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집에서 가족과 지내면서 첫째, 시간이 확장되고 둘째, 바깥으로 널리 돌아다니던 상태에서 집이라는 좁은 공간으로 공간이 축소되고 셋째, 관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좁은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이혼 같은 정보들이 자주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 감성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표2-3) ‘무엇을 먹고 싶다’보다 ‘무섭다’가 자주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식욕을 누를 정도의 공포이며, 본인 감염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나로 인해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사회적 연대에 대한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측과 억측이 나오고 잘못된 정보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4월부터 평범함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두려움이 조금 무뎌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정보가 공유되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니까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기뻐하거나 안심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야 하는 멀고 먼 길에서 어떤 형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상이 여행을 역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여행을



<표2-3> ‘식욕’을 누른 ‘공포’

굉장히 주요한 나의 삶의 쉼표 같은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 더 그리워하는 것이 보입니다. 달고나 커피, KBO 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 콘텐츠가 세계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체온 측정이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실내에 못 들어가는 등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업무·온라인 쇼핑·온라인 강의 등 대안적 행위였던 온라인이 주력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모든 것이 바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안적 의미였던 것이 주력으로 오면서 발생하는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노베이터(innovator)나 얼리어답터(early-adopter)가 새로운 기술을 써보고 그 다음에 수용성이 높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될 때까지 많은 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가 동시에 온라인을 경험하면서 사회변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촉매제로서 변화의 저항을 낮춰줌으로써 변화의 방향으로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그를 통한 사회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재난의 계층화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에 대한 공포, 실업급여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판이 더 없어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 강의를 이해하지 못한 다거나 자동차가 없는 분은 드라이브스루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큰 이슈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였습니다. 예를 들어 열차예매도 앱이 있으면 순간 예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창구까지 가야 하고 그러다가 예매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디지털이 있으면 좋은 거였다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형태의 기본적인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편함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생존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음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찰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전 세계 산업이 전부 연결되면서 다른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소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연결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코로나에 있어 가장 큰 수혜주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나 지역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확진자 동선 등에 대해 전부 다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시스템화되었고 이를 시각화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유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의 안위나 지역사회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합의에 대한 효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의 힘이 커진다는 것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공표할 것인가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때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가치관의 액상화를 뽑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액상화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 지반이 흔들려서 지반이 유동화되기 때문에 건물이 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충격이 오면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믿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기준이나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합의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나은 형태의 삶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처음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2020.5.7 제2차 목요대화 | 'After Shock :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 송길영 부사장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이성적 사고(Data Driven Decision Making)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유추는 우리가 모르던 것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유의성과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Data Driven Policy Making)을 해야 합니다. 그냥 누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경험과 나의 지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형태의 이성적인 판단을 조금 더 정책을 만드는 데 사용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data)와 시스템(system)과 리터러시(literacy)가 합쳐지면 지성(intelligence)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명이 아닌 집단지성이 연결되어 합쳐진 intelligence가 발휘될 수 있는 합의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미래창조의 길, 4+1 Future 뉴딜

**이광재** 저는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발견해서 미래를 당기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선도, 시장 강화, 공동체 회복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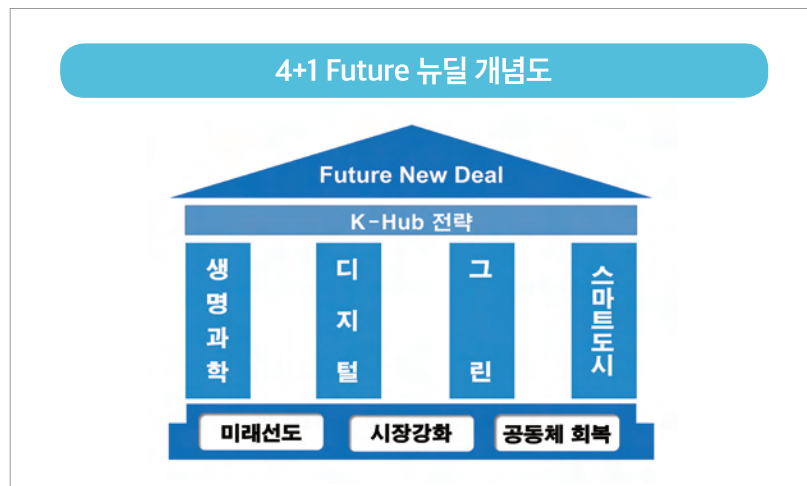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 코스닥 추진, 건강보험 통합 및 생산적 복지를 추진했고 참여 정부는 IT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FTA와 연기금 투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소련과의 핵무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하자, '나는 달에 가고 싶다'라는 전설적인 생각으로 나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절대 과학기술의 최강자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선도하는 것, 와 있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투자를 하고 둘째, 그 투자가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새로운 변화로 생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표2-4)

그러면 우리에게 와 있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첫째, 생명과학입니다. 앞으로 지구 인간 100억 명이 12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생명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디지털이라는 세상은 이 사회가 피할 수 없고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점점 더 환경이 중요해집니다. 넷째, 재택근무와 원격 의료, 스마트 의료 등이 함께 어우러진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미래의 핵심적인 삶의 방식이자 산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외교, 평화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모범국, K-Hub를 만드는데 주력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말한 4+1 뉴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2-4> 4+1 Future 뉴딜 개념도



2020.5.7 제2차 목요대화 | '미래창조의 길, 4+1 Future 뉴딜' - 이광재 국회의원

첫째, 생명과학 뉴딜입니다. 생명과학 시장규모는 20조 달러로 ICT 시장(4조 달러)의 5배입니다. 현재 우리의 최강 능력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데이터입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굉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큰 노력을 들여 국립 바이러스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 수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것이 미생물인데, 약 100조 개가 되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면 인간의 건강 및 생명에 관한 무궁무진한 새로운 기술적 진전이 기대됩니다.

둘째,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공공재를 먼저 장악하는 자가 결국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공재란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그리고 콘텐츠입니다. 여기에 플랫폼 구축도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을 나눠주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집 정보 하나만 하더라도 국세청 정보, 국토부 정보, 행안부 정보가 다릅니다. 이를 가지고서는 미래를 열기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데이터부 또는 데이터청을 만들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모으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우리 정부 홈페이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24개 정부 부처, 300개 공공기관 등 총 2,000개 공공 홈페이지를 통합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전부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김대중 정부 시절 전자정부에 4조 원을 투자해서 대대적인 IT 일자리를 만들었듯이 이제는 AI 정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핵심은 지식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달하느냐입니다. 이 지식 도달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도서관,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이 지식을 생산하는데 연간 20조 원의 R&D를 쓰는데, 이를 활용하여 어렵지 않게 찾고 볼 수 있도록 하면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국가지능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앞선 지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린 뉴딜입니다. 다가올 위기는 식량부족, 물부족, 자연재해, 질병 창궐 등입니다. 기후는 온난화되고 인간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 국토의 65%인 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25%의



2020.3.25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간담회

농경지는 보조금 없이 경작이 가능할까? 3면이 바다인 우리가 육상양식 등 오염을 줄이면서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재천이나 태화강이 삶의 질을 높였듯 춘천 같은 곳에 국가 호수정원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팔당댐 물의 67%가 강원도에서 흘러오는데 상류가 깨끗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래 자동차입니다. 저는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것보다 미래로 빨리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래 자동차로 가야 한다면 전기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왕창 주고 소비세도 부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그린 뉴딜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도시입니다. 서울 주택 공급률이 105%인데 왜 집 구입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과거 주택과 현 주택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주택구조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5천 달러, 만 달러 때의 집 구조라서 당시의 연립주택이 지금은 안 맞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홀로 1인 가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가옥구조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야 하는데 학교, 병원 등을 패키지로 하는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혁신도시·산업단지 2.0을 만들어야 합니다. 베드타운에서 출퇴근하던 산업시대의 모델에서 벗어나 직장과 주거, 교육·의료·문화가 종합적으로 건설되어야 근로자가 쾌적하게 살 수 있고 이동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미래도시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K-hub 전략입니다. 국회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 세계를 연구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홍콩, 싱가포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다국적 본부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 두 곳에 있던 아시아본부가 대략 7,400개인데 이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가운데 삶의 질이 1위인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것이 제 결론이고, 이미 와 있는 미래에 선도적으로 투자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온라인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김성열**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이라고 하면 면대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학습 공백을 메우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교육활동 중 일부는 비대면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모 62.6%가 ‘학습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고 ‘향후 원격교육활동을 하겠다’는 교사들이 76.4%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교육현장에서 교육 시스템 또는 패러다임이 바뀌도록 여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서 ‘디지털 디바이드’ 말씀을 했는데, 학습 공백을 메우는 데 온라인 교육, 원격교육이 크게 역할을 하지만 디지털 디바이드에 따른 학습격차가 생기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도 썼습니다만, 디지털 플랫폼 기반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산업으로 되면 파급효과도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디지털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면, 교육에서도 우리나라가 디지털 교육의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개인별 맞춤형 교육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2차 대유행과 예방접종

**기모란** 지금 많은 분이 2차 대유행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유행이 올 때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오는데, 증상으로는 코로나와 독감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감기 증상을 보이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고 코로나19 음성인 경우에만 독감 검사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감은 다행히 백신이 있고 국가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매년 약 1,100만 명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필수 예방접종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국비 지원 50%와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 비용을 우리 지역 보건소가 찾아서 정산해 주느라고 행정 낭비가 매우 큼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을 연령 기준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독감에 의한 폐렴은 만성질환자가 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독감 예방접종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백신접종을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도록 하여서 지역별 행정 낭비도 막고, 만성질환자처럼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약을 처방하듯이 필요한 사람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준다면 매우 환영할 것입니다.

## 국가, 정치, 지방정부의 강화

**우석훈**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굉장히 오래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보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다가 완화하기를 반복하면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세계화 이후 시장은 죽고 국가는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가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방역의 단위가 국가이다 보니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정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국가를 움직이는 것이 정치기 때문입니다. 진보와 보수 이런 것보다는 누가 방역을 잘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지방 정부도 그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직접 방역의 주체가 되고 보니 전 국민의 시선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의 매출이 우리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무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우리 영화산업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2020.5.7 제2차 목요대화 | 박용진 국회의원, 우석훈 공동대표, 기모란 교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공공적 도토리 나눠주기

**박용진** 저는 이미 우리 생활에 포스트 코로나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엄마가 깨우면 1분 전에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들어가서 동시에 10개 화면을 열어놓고 수업도 하고 딴짓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드디어 원격시대로 가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갈 거야, 그동안 우리가 마이너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주류가 될 거야’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공정·불평등·비민주가 그대로 이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국민건강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이익을 보면 이 이익을 어떻게 전 국민적으로 분배할 것이냐를 미리 법률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예전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에게 도토리를 나눠주는 참여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하거나 공공데이터를 참여해서 쓰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얻게 되면 어떻게 이 공공적 도토리를 나눠주게 만들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법에서부터 설계할 것이냐, 그리고 사회적 대차영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아마 우리 정치권에 던져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 밸류의 분열과 재구성

**김원준** ‘세계화(globalization) 2.0’과 ‘위기는 혁신의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얼음이 얼어있는 강 위에 돌을 던졌을 때 얼음이 깨지듯이 그동안 글로벌 사회가 지난 몇 세기 빠른 성장을 하면서 피로감이 쌓여왔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로감이 폭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협력 중심의 글로벌리제이션 1.0이 분열과 재구성이라는 글로벌리제이션 2.0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글로벌 밸류의 분열과 재구성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로컬 밸류 체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글로벌 위기 체인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위기는 혁신의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기술혁신의 성과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는 혁신 관점에서 본다면 혁신의 수용성이 올라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가장 근접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서 서비스 산업을 얼마나 잘 트랜스포메이션시키느냐가 다음 단계의 산업적인 역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한국이 얼마나 글로벌한 사회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가가 앞으로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하면서, 직접적으로 글로벌 항바이러스 협의체라든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면 분열되고 있는 세계화를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다가능성, 연결성을 갖춘 회복력 도시

**정지범** 재난관리가 어찌 보면 토목공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요즘은 정치적 측면에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때 ‘슈퍼 스톱 샌디’라고 매우 큰 태풍이 왔습니다.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난 대응을 잘하면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해서 재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등을 겪으면서 재난관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경우도 재난의 문제가 얼마나 정치적인 문제로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관리의 핵심 키워드는 ‘리질리언스’, 회복력입니다. 10년 전에는 재난 관련 보고서를 쓸 때 ‘원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고,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완벽하게 예방하고...’ 이런 말을 썼었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다음에 바로 또 광화문 잠기는 등 재난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재난은 기본적으로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미리 예방하는 ‘방재(防災)’에서, 피해를 줄이는 ‘감재(減災)’로, 그리고 최근에는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재난을 경험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사회(Build back better)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력 차원에서 재난관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재난이 오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은 ‘다가능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병원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들고 산소 호흡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하나의 시설이 붕괴되더라도 그 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대체시설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한 지역이 봉쇄되더라도 그 지역이 자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듈화라든지 분산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어떤 시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이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미리 준비해서 열어놓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코로나 정책 조정기능 강화

**장덕진** 오늘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의제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실제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 중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과거 제조업 기반의 복지국가에서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로의 재설계,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국가안보

체계 재설계, 국제질서 전략의 재설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 성과와 관련된 것인데, 정부성과의 핵심은 정책의 조정기능에 있습니다.

차선의 정책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과가 굉장히 높지만 정책 하나하나가 좋더라도 조정기능이 떨어지면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시되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단순히 방역을 잘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야당과의 협력 및 조정과정에서 왜 우리가 민주주의인지,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학계와 산업계가



2020.5.7 제2차 목요대화 | 장덕진 교수, 박명림 교수

데이터를 함께 공유해서 속도감 있게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일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 국가대개혁위원회, 동아시아 재난구조본부 설치, G9체제 모색

**박명림** 우리 사회는 그동안 위기 시에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전쟁, 오일쇼크, 외환 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그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위기 시점에 결집된 시민참여와 연대, 위기 극복능력, 국가역량 제고를 예외상태가 아닌 일상시기 대한민국의 국가 능력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약자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마치 이전과 이후 사회 모습이 극적으로 나뉠 것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와 같은 표현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전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은 대략 세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이 혼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존 흐름에 대한 강화와 가속화의 방향이 있습니다. 빅 데이터, 로봇, AI, 1인 가구, 1인 방송, 이웃과 거리두기, 직접 구매, 비대면... 등 최근 인류의 기존 흐름은 더욱 빨라지고 증대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환이 아니라 강화일 뿐입니다.

둘째, 오염물질 배출, 환경오염, 미세먼지, 자연훼손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방향을 전환하여 분명히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 재택근무 및 비대면 교육을 포함하여 가정과 작업장과 학교는 부분적으로는 근대 매뉴팩처 시스템의 등장 이전의 근거리 공간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즉 이 영역은 부분적 전환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마치 인류와 세계의 방향이 하나의 엄청난 방향 전환이 있을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즉 어느 한쪽으로만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에 대한 정밀분석이 있었으면 합니다. 입구인 국제공항 관리부터 국제 협력 부분은 물론, 정책 결정 권한과 과정, 의료와 방역시스템, IT 기술 및 정보 보고체계 등에 있어 부분적 한계와 상당한 성공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부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부분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부분과 민간-국민 부분을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정부 대응에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 현장에 상주하며 진두지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은 것인데 잘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리 주도하에 현장까지 챙길 경우 성공이나 실패냐에 따라 총리 개인을 넘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가 좌우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외와 공유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감염상태와 상시 재난시대에 대비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비상경제대책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가대개혁 위원회’나 ‘국가대개조위원회’를 경제 부분을 넘는, 환경과 AI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가 집현전’ 같은 기구가 만들어져서 각 부문의 지혜를 다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응합이 있으면 문에 부흥과 같은 상당한 도약과 창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제 부문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입니다만 ‘동아시아 긴급 재난구조본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본과 중국과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계로부터 받는 나라에서 세계로 주는 나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세계 모두가 일상의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체 집합 자료를 분석해보면 코로나19 이전부터 오늘의 세계는 세계대전의 시기보다도 더 많은 난민 규모, 더 심각한 불평등 정도, 환경요인으로 인한 더 많은 누적 사망자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로 아주 비참한 대처가 필요한 인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UN, WHO, G7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거의 국제역할과 책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팬데믹 위기의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발전을 반영하여 식민과 분단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가 유일하게 G9(작동 불능의 G7을 G9으로 재편해서)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들어가서 유럽 중심의 세계질서도 바꾸고, 동시에 한국이 세계의 중진국이나 빈곤국가들에게 어떤 희망의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방역 성공을 넘어 국제질서의 G7 체제를 G9 체제로 바꾸는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형 뉴딜의 근간을 그린 뉴딜로

**권태선** 코로나 위기는 생태위기에서 초래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돼,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생겨난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생태위기인 기후위기 역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려면 이 생태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판 뉴딜의 기본 방향은 그린 뉴딜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5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린 뉴딜의 목표는 단순히 에너지 전환이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우리의 인식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97년 외환 위기나 08년 금융위기를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했지만, 양극화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헬조선’이란 말이 회자되고 출산과업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에 대한 대응은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유럽연합 주민 대상 조사에서 71%의 응답자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기본소득은 결코 단순한 시혜가 아닙니다. 요즘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돈을 벌지만, 데이터의 원 소유주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듯 정부나 기업이 보상 없이 쓰고 있는 재화에 대한 대가가 기본소득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또 가족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가족단위로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개별 개인들의 삶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스마트의료를 기반으로 한 돌봄

**홍윤철** 저도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태적 관점, 사회발전 방향, 문명의 변화, 문명의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가 의료발전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는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고 많은 분이 말씀해 주셨고 또 실제로 많은 노력과 피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차 대유행은 다시 온다고 봐야 하고, 지금 성공했다고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페인 플루’가 1918년에 왔을 때 2차 대유행은 3배 정도 컸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준비가 되었느냐? 재난 의료는 의료자원을 동원하고 감염된 사람들과 일반 환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만을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2차 대유행을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에서 드러난 사실은 노인들의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코로나19가 상당히 임팩트 있고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를 생각하지만, 그 전에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정된 사회에서의 임팩트가 아니라 인구구성이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임팩트입니다. 그 임팩트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변화가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미래를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대면 의료의 기회가 온 것인데 이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돌봄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만나서 돌볼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어떠한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좋은 의사와 연결해도 정상적인 의료라 되지 않고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돌봄이 일어나면서도 비대면 의료의 이뤘지려면 지역사회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동네 의원인 1차 의료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비대면 의료의 추진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의료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격의료라는 용어 자체가 스마트 의료라든지 좀 다른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간안보와 국제적 역할

**김원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민낯이 드러

났습니다. 최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치부와 사회·의료시스템에서 낙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론 분열은 심각하여, 두 개의 다른 미국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과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 겹쳐지면서 미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이 우리에게도 도전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정에서 축적된 우리의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면서 에볼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글로벌 보건안보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국가안보의 개념을 확대해서 봐야 합니다. 전통적인 국방, 군사 중심의 국가안보에서 더 나아가 인간안보, 개인과 사회의 보건안보, 그리고 자연과 생태계 안보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무분별한 생활방식이 초래한 생태계 파괴와 지속 불가능 위기에 대해 자연이 보내는 반격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잘 읽고 새겨서 인간의 지속불가능한 생활방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크고 심각한 위기들이 계속 올 것입니다. 이제 인간안보를 중심에 두고 자연안보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역할의 확대를 위해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찾아내어





2020.5.7 제2차 목요대화

국제 협력을 선도(leading)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정에서 강점을 보여준 디지털, 생명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뉴딜과 아울러 스마트시티 뉴딜이 그러한 예입니다. 밀집, 과도한 개발에 기초한 과거의 대도시 중심 개발 모델은 지속불가능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연 친화,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시티 뉴딜이 시급합니다.

둘째, 우리가 잘해야 함에도 뒤처져 있는 분야에서 따라잡는 (catching-up) 노력을 배가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대외공적원조 (ODA)의 두 가지가 시급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유엔에 있었던 10년 동안 한국의 지표는 정부의 거듭된 공약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 훨씬 많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어 이제는 급기야 환경단체들에 의해 4대 기후악당 국가에 포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그린 뉴딜을 적극 추진해서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ODA 공여순위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명예롭지 못한 또 하나의 기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수가 줄어든 것이고,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 ODA 예산을 제일 먼저 줄이려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더라도 ODA 비율은 최소한 GNI의 0.33%를 향해 가는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발전과정에서 그러했듯이 ODA가 자선이 아닌 저개발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정치권에 환기시키는 노력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소비자의 데이터 소유권

**하준경**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뉴딜이 중요한데,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국가재정에서 제일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생명과학 뉴딜입니다.

의료분야의 기술혁신, 비대면일 수도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소유권입니다. 사회주의식 디지털 레닌리즘은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소비자의 데이터를 기업이 다 소유하게 되면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이 모든 것을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데이터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다면 소비자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소비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또한 정보가 세세해지면 보험이 작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민영 의료보험의 경우 애플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는 아예 광고 노출을 안 시키는 식으로 차별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데이터 경제가 발전하면 이런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포용성 차원에서 데이터 경제를 발전시키면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상시적 위기에 준하는 미래형 거버넌스

**서용석** 저는 ‘미래환경 속성의 변화’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야 할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연구자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중 하나가 ‘와일드카드’입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발생 가능성도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파급력이 엄청난, 예를 들어 9·11테러라든가 98년 외환 위기,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와일드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위 극단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실 와일드카드의 일상화, 상시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우리가 상시적인 위기관리 체계로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준비태세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미래형 거버넌스로서 선제적인 사고와 조치, 그 다음에 회복력을 갖춘 대응 시스템이 정부 조직이나 정책의 운영방식에 내재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서 이번 기회에 국가사회 시스템이 코로나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김 윤** 우리가 결과가 좋으니까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태에서 2차 대유행을 맞아도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감염병 진료체계가 없어 대구 경북지역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2차 대유행이 와서 대량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도 지금 TV에서 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뉴욕에서 보던 일을 대한민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감염병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고 그 핵심은 국가가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공공의료체계, 공공병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높은 사망률의 절반은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건강상태가 나쁘고 이런 취약한 점들은 감염률이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면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 소위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조금만 지역에서 돌봐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실 필요가 없는 분들을 지역에서 살게 해드려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감염으로부터 취약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부와 사회가 새로운 제도와 규범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의 상병수당, 유급 병가 등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환경을 조성해 주어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소리 없는 피해자, 취약계층 보호

**김유선** 저는 고용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0만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전인 2월과 비교하면 취업자가 68만 명 줄었고 일시휴직까지 감안하면 일자리가 20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외환 위기 때는 한 달 사이 취업자가 87만 명 줄었는데, 일시휴직까지 감안하면 외환 위기 때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외환 위기 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최근의 일자리 감소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여성과 노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2020.5.7 제2차 목요대화 | 정세균 총리, 김유선 이사장

드러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서 전국민고용보험법 논의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약 계층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동법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뉴딜을 이야기하셨을 때 매우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보면 디지털 뉴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는 불평등 위기와 기후위기가 한데 맞물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이나 안전보건투자를 통한 재난대처와 더불어 최우선적으로 그린 뉴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 정부는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둘째,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신속 추진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국중단 해제·완화조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세균

방역·보건

# 3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

“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정세균 총리

##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

오늘은 방역·보건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특별히 대구 방역 현장에서 직접 코로나와 싸우신 현장 영웅이신 두 분의 의료인도 함께 모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핵심은 ‘디지털 사회로의 중심이동(Paradigm Shift)’입니다. 언택트 문화, 비대면접촉 등 코로나19 이후 새롭고 광범위하게 목도되고 있는 사회현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고의 혁신’, ‘과감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리에서 시선만 돌리는 ‘관점의 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재 자체가 옮겨가는 ‘중심이동’이어야 합니다.

오늘 화두인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같은 정책과제에도 혁신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 의료·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첨단 ICT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초래한

**발제**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체계 및 방법 기모란(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

**발제** Post COVID-19와 보건의료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권기태 칠곡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 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맹순주 국군수도병원 간호과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용진 국회의원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성공적 방역의 세계적 모델이 된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협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지난 1차 목요일대화가 계기가 되어, 그제(5.12) 캐나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와 통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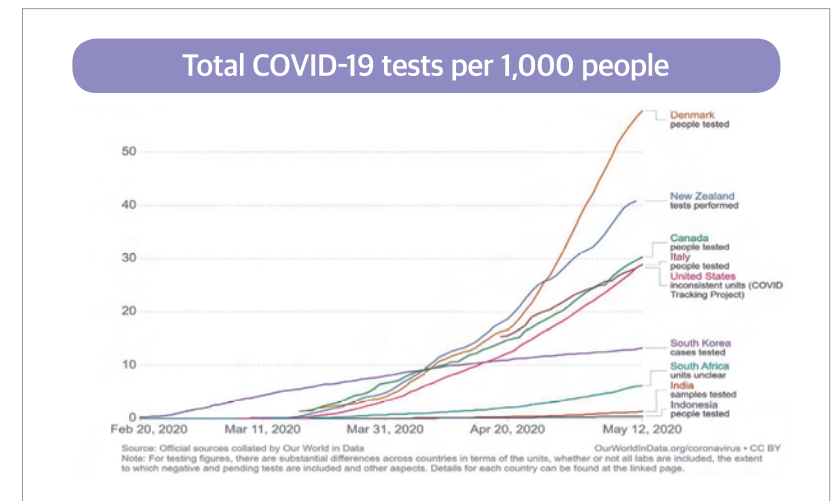
프리랜드 부총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방역 모범사례를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과 미래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인 <목요일대화>를 인상 깊게 보았다고 평가하며, 캐나다에서도 지난주부터 ‘캐나다판 목요일대화’를 시작했고, 다른 조치들도 배워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글로벌 중심이동’을 <세계적 한국화 (Global Koreanization)> 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방역·보건 분야 의료인, 현장 전문가 분들은 방역·보건 분야의 글로벌 중심이동을 앞장서 이끌어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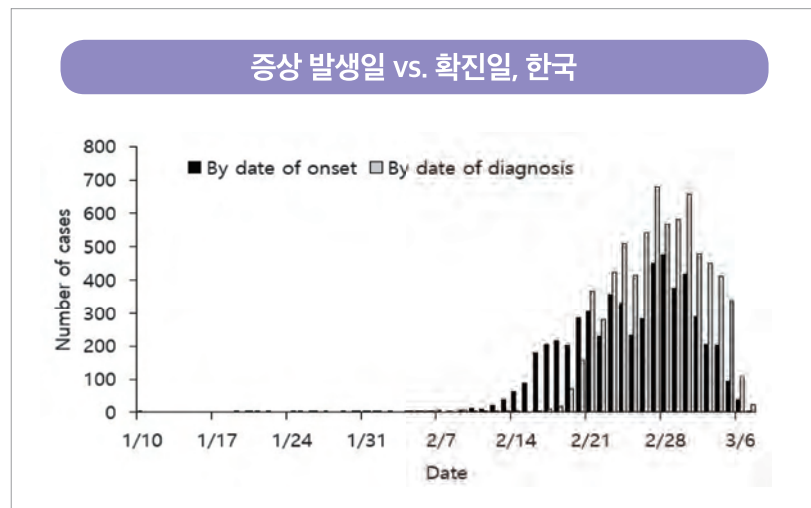
##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체계 및 방법

**기모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체계 및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감염병의 역학적 연구와 수학적 모델링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표3-1>은 일자별로 인구 1,000명당 검사를 얼마나 했느냐를 보여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아주 독보적으로 높은 검사율을 보였고 4월 초부터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자고 하면서 검사를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학적 특징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향후 감염병의 발생 수준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표3-2>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것으로 일자별 환자수인데 진한



<표3-1> Total COVID-19 tests per 1,000 people



<표3-2> 증상 발생일 vs. 확진일, 한국

색은 환자들의 증상발생일을 기준으로 본 것이고 회색은 확진일을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확진일 기준으로는 31번째 환자가 2월 18일에 나왔지만, 그때 이미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1,000명 넘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31번째 환자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한 것은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유행이 크게 확산되어 이미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구 신천지 유행의 첫 환자는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가 확진되었을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치명률(Case fatality rate, CFR)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케이스 페탈리티 레이트’라 할 때 케이스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중국에서 치명률을 보고할 때 무증상자를 제외했습니다. 그러다 치명률이 너무 높은 것 같으니 중간부터 무증상자를 분모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 왜 무증상자를 넣어서 마치

치명률이 낮은 것처럼 보고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또 뺐습니다.

코로나19는 약 10~30% 정도는 증상이 없는데 만약에 증상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분모에 넣고 계산하게 되면 감염사망률 (Infection fatality rate)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증상자를 모두 찾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CFR도 2.36% 정도로 보고하고 있는데 분모에서 무증상자를 빼면 이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감염을 봤을 때 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잠복기(Incubation period)입니다. 즉 감염 시점부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호흡기 감염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전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은 우리가 격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이미 전파시킬대로 전파시킨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화기 감염은 반대로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감염을 전파시키지만 증상이 사라져도 대변 등에서 균이 계속 배출되어 전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콜레라나 이질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증상이 없어진 후에 대변 검사를 해서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합니다.

이렇게 호흡기 감염은 잠복기 때, 소화기 감염은 회복기 때 증상이 없어도 전염시킬 위험이 큼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바이러스와 싸우는지 아실 것입니다. 같은 바이러스여도 사스와 메르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파를 했습니다. 즉, 잠복기 전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열 체크하고 격리하면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감염병 대비와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병원체와 병원소를 관리하고 ②전파과정을 차단한 다음에 ③숙주를 관리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병원체는 미생물이고 병원소는 그 미생물이 생존하는 장소입니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감염관리는 1차 원인인 병원체와 병원소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하고 동물이 병원소면 살처분하고, 사람이 병원소면 미생물을 죽이는 약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약이 없으니까 격리를 해서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게 하는 방법 말고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검역(Quarantine)과 격리(Isolation)입니다. 우리가 둘 다 격리라는 용어를 써서 조금 헷갈렸는데요. 구분하자면 검역은 접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염에 노출된 시점부터 최대 잠복기까지 자가 또는 시설에서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막는 것입니다. 격리는 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하면서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막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전파과정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씻기, 환기 등의 위생관리,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주 관리는 면역을 높여서 웬만하면 감염에 잘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이 백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먹고 잘 쉬고 영양분 있는 것을 먹고 혹시 기저질환이 있으면 잘 관리해서 병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감염병 관리 수준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관리(Control)’ 단계는 감염병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등이 지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퇴치(Elimination)’는 우리가 정해 놓은 아주 낮은 목표 수준으로 질병 전파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WHO의 결핵 퇴치 목표는 인구 100만 명당 1명의 유병률입니다. ‘박멸(Eradication)’은 세계적으로 더이상 없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인류가 박멸한 감염병은 사람에서는 두창, 동물에서는 우역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비는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률을 개정해서 감염병 감시나 예방 주체 인력, 예방접종, 정보공개 범위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인적 자원이죠. 보건의료 종사자를 양성하고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하고 부문 간 협업, 위험 소통 등입니다.

특히 요즘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는 적절한 위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 수준에 비하여 경각심이 낮아서 ‘괜찮을 거야, 난 안 걸릴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돼’라는 사인을 주어야 하고, 경각심이 너무 높아서 불안해하면 조금 안정시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 수준도 높고 경각심도 높아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 심리가 아주 크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우리 함께 이겨내 보자!’ 이런



메시지를 자꾸 줘야 합니다.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발생을 막는 대응이 있고 사망을 막는 대응이 있습니다. 사망을 막는 대응은 주로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발생을 막는 대응이 우리 방역당국이 하는 일입니다. 발생을 막는 대응은 사람보호, 환경보호, 사회보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위생, 즉 손을



2020.5.14 제3차 목요대화 |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체계 및 방법' - 기모란 교수

씻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보통 감염병의 위기는 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를 하고, 감염병 유행이 벌어지면 대응을 하고, 유행이 가라앉으면 회복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대비하고 대응했는데 유행이 안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전 대비를 해야 합니다. 회복이 아니라요.

그럼 장기전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유행상황에 대해서 복기하고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미세 조정을 한 다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평가는 누가 해야 하느냐. 물론 정부도 하고 민간도 해야 하지만 전문 연구소, 즉 감염병 연구소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병 역학연구나 수학적 모델링 연구입니다.

그리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검사를 확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이 유연하지 않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대해야 하고 독일 같이 자가검사까지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밀집시설에 대한 관리에서도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방문자 관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 부분도 공공의대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공공이나 기초 분야 의사를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사실 도시지역 개원 의사는 좀 경쟁이 과다한데, 대도시 인구 1천 명당 개원 의사 수를 제한하는 논의라든지, 의대 입시부터 등록금이나 수련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필요할 때 국가가 요청하여 공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의 또는 군의관으로 3년을 일합니다. 장기적으로 남자의 공중보건의 기간은 줄이고 여자도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로서 일할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비대면 의료의 시작되면서 그동안 알려진 단점과 달리

장점을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감염을 예방하면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에 더해서 단골 의사 주치의 제도라든지 방문 의료, 방문 검사, 약 배달, 또 방문 간호와 연계하는 방법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치료 중심으로 되어있고 예방은 건강보험의 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이나 금연 이외에 예방접종, 건강관리 분야를 건강보험공단 업무로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Post COVID-19와 보건의료

**권순만** 저는 보건경제학과 보건정책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경제나 정책적 측면의 단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좋은 삶은 기술 혁신과 비대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 비대면 강의를 처음 해 봤는데 교수들이 걱정하고 우려한 것에 비해 학생들은 비대면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면 강의는 강의내용이 한 번 지나가면 반복할 수 없지만 영상강의는 다시 재생해서 보면서 이해도 높이고 친구들과끼리 앉아서 토론도 하는 등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대면이 대면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비대면이 대면을 보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진부터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환자도 싫어합니다. 당연히 초진 때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가능하면 이야기 나누고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화될 때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만성질환은 비대면을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술에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보건의료부문에 스마트 헬스(smart health)나 기술을 활용하는 면에서 촉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 문제를 예로 들면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많은 감염이 생겼던 곳이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을 가고 싶어서 가신 분은 없고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지내기를 좋아하시는데 할 수 없이 요양원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스마트 헬스나 비대면 진료나 모니터링시스템이 많이 발달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이 요양원에 안 가시고 집에 있으면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고 비용 효과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저도 보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1차 의료기관이 중요하고 동네 의원을 살려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대규모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 커져서 개인 병원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회 부작용 부분을 최소화하는 대신 굉장히 큰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대규모 병원들이 개원의 시장을 잠식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대면과 비대면 진료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개원의와 대규모 병원 사이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환자들이 대규모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더 많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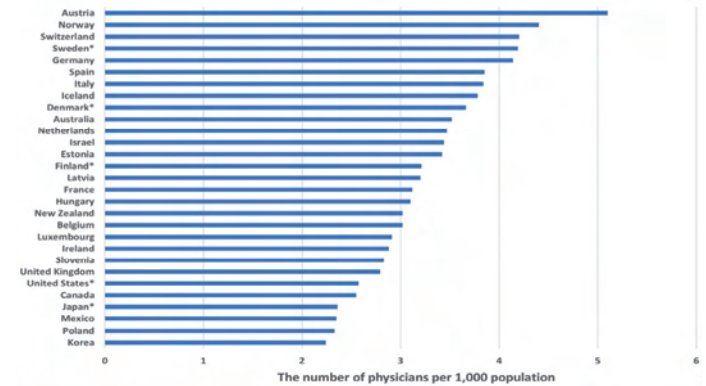
환자는 예방 서비스도 필요로 하고 동네 의원의 1차 의료도 필요하고 많이 아프시면 큰 병원에도 가야 하고 끝나면 재활도 해야 하고 재활이 끝나면 요양원에도 가고 더 나으면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케어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는 그 환자, 어르신 또는 개인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입니다. 예방 서비스를 주는 공급자, 1차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병원 서비스를 공급자 등으로 모든 것이 분절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1~2가지 질병만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훨씬 많은 수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데 지금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비대면 의료를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 의료기술을



2020.5.14 제3차 목요대화 | 'Post COVID-19와 보건의료' - 권순만 교수

### 인구 1,000명당 의사수(2015)



<표3-3> 인구 1,000명당 의사수(2015)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의료분야가 잘했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고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국민당 의사 수가 가장 적습니다.(표3-3) 반면 병상 수는 두 번째로 많고 의사 방문 횟수는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가장 적은 의사 수로 가장 많은 의사 방문을 한다는 것은 의사가 거의 살인적으로 노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의 질이 좋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공공의료가 부족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감염 전문 병원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지방병원 원장님과 이야기해 보면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의료를 강화하면서 의사 수를 안 늘릴

것인가요?

그다음에 지금의 감염병 대책을 보면, 지나치게 질병 중심의 의학적인 관점에 치중되어 있는데, 코로나 대응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편익을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목표 집중적 접근(targeted approach)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염의 위험이 높은 밀집시설의 경우 많이 닫아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을 닫는 대신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발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하고 수용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유급휴가나 수당 제도가 취약한 나라는



2020.5.2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집에서 쉬라고 하죠? 아프면 쉬라고 했으면 그 대안을 주고 쉬라고 해야 합니다. 휴교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술집은 닫아야 하지만 학교는 빨리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가 학교 개장을 결정했을 때 정부 방침은 부모들의 재택근무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닫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도 학교를 닫고 열고 할 때는 아이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닫겠다고 하면 일하는 부모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터넷 수업이 길어질수록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민을 같이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정책의사결정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지금 초동 대응을 해야 하니까 국민 합의를 거치지 못한 정책들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인가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확진자 수나 의학적 판단만이 아니라 제반 정책적 대응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강한 대응은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도 제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똑같은 월급을 받고 산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시렸습니다. 아마도 소상공인이나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이 분들의 말씀도 들어봐야 합니다.



10년 전 유럽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유럽의 상공이 완전히 닫혔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분야의 과학자들은 끝까지 하늘을 열면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결국 깬 것은 항공업계이고 경제적 고려였습니다. 어차피 화산재 분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분진이 항공기 엔진에 영향을 미쳐서 사고가 날 확률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감염도 역시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의 리스크(감염의 위험)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로 고민해야 하고 이는 다양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억제정책이 강할수록 국민의 소비심리가 열기 때문에 서비스업계는 매출액이 더욱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급한 불을 끄고 좀 더 장기적으로 대비하려면 저는 ‘회복과 국민참여(resilience and participation)’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구자로서 과학적 근거를 최선으로 만들어내지만 궁극적으로 일정 부분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국민의 가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과 규제 완화 필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의 수만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료원이 국민에게 외면받는 상태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적어도 공공의료가 그 지역에서 주요 아젠다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지역의 중산층이 아팠을 때 이용을 생각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특수분야 역량만이 아니라 공공병원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료인력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보건의과대학을 만들든지, 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늘리든지 의료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법과 규정을 완화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한테는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요양보험은 요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어르신이 등급 신청을 하면 대면으로 가서 보고 인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요양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등급인정평가를 못 받습니다. 일반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요양보험에서 노인들에 대한 인정평가에서도 비대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위험 등급별 시설 관리 및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

**김 윤**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나 항체검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 확진자의 수십 배의 감염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개 대량 감염이 일어나기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의 조용한 전파자들이 축적되는 기간을 지나면서 대량 감염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미 4월 초부터 국민의 대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꽃구경도 하고 동해안도 놀러 가고 가족들하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쌓여서 조용한 감염이 아마 광범위하게 깔려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지침이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학교, 유흥시설, 식당 등 개별 시설들을 감염의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A부터 Z까지 관리의 강도를 달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재개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많은 분이 이야기하신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의 문제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시스템을 종합병원 정도로 강화해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을 통제하는 일상적인 체계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는



2020.7.29 사회복지시설 방역 현장 점검



2020.5.14 제3차 목요대화 | 김윤 교수, 안재용 대표이사

커뮤니티케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전체 지역 돌봄이 필요한 노인 12% 정도 중에서 3%만 관리하고 나머지 9%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대상 범위를 요양병원에 가 있는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인 국민까지도 포함해서 전체를 하나의 재정체계, 하나의 서비스체계로 관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온라인 대면 진료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의료의 질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이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프라 역할, 즉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려면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인력 증원 문제, 공공병원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잇는 연결고리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의과대학이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료원을 국립의대에 위탁하고 늘어나는 정원을 국립의대에 주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병원 및 종합병원에 가도록 해서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국민이 2차 병원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책들이 효과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인력 정책 따로, 보험 정책 따로, 공공 정책 따로 갔기 때문이고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인력과 체계와 재정정책을 패키지로 묶어서 가야 공공의료도 강화하고 의료인력도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경제난과 공포로 인한 자살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장애인을 담당하는 5개 기관 중에 가장 큰 정신과 전문 센터입니다. 2월 19일 이후 31번 환자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던 사람은 청도대남병원에 있던 정신장애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바로 파견을 보내서 정말 아수라장이 돼 있는 정신병원 내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가장 위험군인 기저질환자, 그리고 ‘3밀’이라고 해서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하게 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 그리고 오랜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면역 저하도 돼 있는 분들이고, 의료계 내에서도 가장 소외된 층이고, 더군다나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2월 20일에는 회의를 하다가 하늘을 보는데 아무런 대책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감염내과 교수와 전화를 해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음압병실이 몇 개 있다는 조건만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대구에서 환자분들을 모시고 국립정신건강 센터에 버스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 협오가 있다 보니까 지역 민원이 폭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같이 용기를 내서 협심하고 경험을 하면서 얻은 교육은 ‘환경을 탓해야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만들어야겠다’입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자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장기요양병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커뮤니티케어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정책이 입원에만 비용을 지불해 주는 체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이 아닌 사회적 치료,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에서의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의료 수가가 동반된다면 입원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코로나 양성인 정신장애인을 겪었던 일과 대안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한편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이나 공포로 인해 자살 심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 경험했지만 당장에 공포 반응이 많을 때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데, 이것이 1년 정도 지나고

만성화가 됐을 때 아니면 경제가 약간 회복되려고 할 때 우울증에서 약간 회복되려고 할 때 자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내년 초나 아니면 올 연말에 자살률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장기적으로 자살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혐오 문제들이 계속 도처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면 아까 공포 반응과 연결시키자면, 사람들이 서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공포와 공간이 연관되고, 그리고 선행을 하려고 한 사람들과 혐오를 악행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분열되고요. 결과적으로 혐오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공포를 더욱 크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 자살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의 기능전환

**맹순주** 저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 2월 24일부터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분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애로사항 등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국군대구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월 23일경 국군대구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당시 병실이 부족해 입원을 하지 못하는 대구 코로나 환자분들이 계셔서 단 하루라도 빨리 개소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 의무사 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대책본부, 지자체, 민관군이 공조해서 최단기간에 기능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군대구병원이 300명의 확진자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으로 공간을 배치했고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국군지원단, 2작사 공병단, 대구시 관계자와 협업을 했습니다. 입원환자 수용을 위해 모든 운영 전반에 대해 도상훈련도 많이 하고 리허설도 수차례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환자 최접점에서 직접 간호를 해야 하는 간호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군수도병원 등 전 군에 있는 간호인력을 긴급충원했고 국군 간호사관학교 신임 소위 75명도 임관하자마자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원래 국군대구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했었습니다. 감염병 환자를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감염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감염 관리에 적절한 인원을 긴급 투입받아서 저희 간호인력의 10%를 감염팀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국군대구병원 자체에 맞는 감염관리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누적 환자와 환경 관리, 모든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국군대구병원 근무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감염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고, 4월 28일에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준비 기간이 짧아서 사실 많이 힘들었지만, 중대본을 비롯하여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같이 하자, 할 수 있다’는 협업으로 임무수행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감염병 대응 위기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각 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받는 침상 수를 더 쉽게 기능전환 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PHDNA, 공공보건의료인 예비군

**이왕준**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있어 제2의 발생(outbreak)이나 수도권 재확산이 되면 그 규모가 대구·경북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대단히 큼니다. 사실 대구·경북은 신천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명단을 다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로를 알 수 없고 대상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면 어느 순간 대규모로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우리가 대구·경북에서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권역별, 지역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장 통제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만, 시나리오별로 실질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쯤은 한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지역에 하루 1,000명씩 해서 누적 환자 3,000명이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특히 임상적 차원에서 어느 환자를 먼저 빼고 어느 환자를 뒤로 뺄 것이며 이것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등 개별 병원이 아닌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에서 실질적인 임상적 관점을 갖고 진두지휘하는 사령관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중환자 케어입니다. 평상시에도 중환자실이 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었는데, 중환자 수가 등 여러가지가 열악하여 큰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을 많이 늘리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중환자 병상에 비하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메르스의 교훈으로 응급의료 시스템이 개선된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중환자실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메르스 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환자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을 수 있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중앙 임상위원회도 임의단체로 법적·제도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임상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대구에서 보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2020.4.11 대구 의료진(동산병원) 격려 현장 방문

직장도 그만두고 공공의료에 헌신하는 입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차제에 우리가 공공의료대학을 만드는 데 10년이 걸리니, 과도기적으로 ‘공공보건 의료인 예비군 제도’를 창의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PHDNA(Public Health Doctor & Nurse Alliance)’라고 명칭을 만들어봤는데, 대구·경북에 가셨던 자원봉사자들을 모태로 해서 공공보건 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의료인들이 등록하고 1년 내 몇 시간 이상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을 운영하듯이 인센티브도 주고 유사시 차출해서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도 하고 훈련도 하면 유사시 의료인들이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제도를 통해 대구·경북의 경험을 소중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백신주권 사명감

**안재용** 저는 K-바이오 그중에서도 백신이라는 테마에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아주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극복하고 향후 또다시 올지 모르는 팬데믹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팬데믹 상황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코로나 백신 개발을 만약 비즈니스 부분만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주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측면이 매우 큽니다. 그것이 강력

했으면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조금 더 기업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 백신을 개발할 때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임상, 생산, 더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접종하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지금 글로벌 파트너십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처럼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가 또 올 것이기 때문에, 자국 국민의 우선주의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백신회사의 체력이 평소에 강화돼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백신 주권을 강조하면서 백신을 준비하는 초석이 돼 있습니다. 훨씬 더 큰 쓰나미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비하려면 국내 체질이 강화돼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공조의 강화입니다. 지금 국내기업이 백신을 다른 나라보다 늦게 만들면 저는 다른 나라 백신을 사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세컨드 아웃브레이크’가 왔는데 국내에서는 개발을 못 하고 외국에서는 개발을 했는데 외국이 충분한 공급량이 없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못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꼭 국내 백신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비대면의 안전성과 불신해소

**송승재** 비대면 의료서비스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T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인데 비대면 의료서비스라는 게 딱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립 자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전문가들이 정리하고 정확한 용어로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대면 의료서비스 자체가 보면 사실 결국에는 경제논리인데 그것이 명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안정성이나 안전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임상적 효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됐던 전 국민 의료보험 그리고 의약 분업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부터 원격 진료에 대한 정부의



2020.5.14 제3차 목요대화 | 조흥식 원장, 송승재 회장

꾸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 이상 투자가 됐었고 정말 많은 빅데이터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만 건 이상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진행됐고 3,5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부작용 보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의료단체와 정부 또 이해단체들 사이에 안타깝게도 불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이 분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체온을 기반으로 하는 질병관리시스템을 정부 재원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만들어놔던 산출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미리 확보해 놓고 산업체들이 어느 정도 체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마스크와 검사

**권기태** 저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어떻게 병원을 지켜왔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생활치료센터도 운영해보고 음압중환자실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동을 비워서 음압 병동도 만들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도



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많이 입원했지만 원내 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확진자에 의한 병원 내부의 노출이 23건 발생하였습니다. 2월 22일 편의점 직원이 확진되었는데, 그분이 접촉한 직원과 환자, 보호자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분이 증상이 있는 채로 나흘간 근무했는데, 다행히 마스크와 장갑을 계속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CCTV를 분석하여 접촉자를 찾아 검사하고 격리시키고 했는데, 다행히 접촉자 중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23건의 원내 노출 사례에서 전파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코로나19 방역의 키워드는 “마스크와 검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호장구 수준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좀 더 강화해서 원내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족한 보호장구를 적절히 배분해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외래, 병실, 중환자실, 응급실에 대해 별도로 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침을 만들 때 생각했던 것은 설사 확진자가 다녀가더라도 직원이나 옆에 있는 환자 보호자한테는 전파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검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환자 중에 내시경 검사를 하고 CT를 찍고 가셨는데 코로나 검사했더니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저녁 6시 30분에 위 환자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다급하게 이미 퇴근한 내시경실 직원을 모두 불러서 저녁 9시까지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에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것을 확인하였고 내시경실



2020.5.14 제3차 목표대화

을 정상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니까 정상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시경실을 폐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일 내시경 검사 예약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내시경실에서는 환자를 끝까지 마스크를 씌우고 있다가 내시경 검사 들어가기 직전에 마스크를 벗깁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마치고 환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눈을 뜨자마자 바로 또 마스크를 씌웁니다. 제가 내시경실에 가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 회복실에 같이 있었던 환자분들만 접촉자로 하고 격리를 14일간 했는데 그분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마스크와 검사인데 이걸 학교에 적용해보면 학생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마스크 안 벗고 학교에 있을 수 있게 하느냐. 결국



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코로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제안드리는 것이 1시간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순서대로 운동장에 데려가서 거리 띄우고 마스크 벗고 기분전환 시키는 시간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혁신은 항상 현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연구에 관해서 어려움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임상시험이나 검체채취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자필서명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는 코로나19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소독 절차를 거치거나, 환자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서 그걸 의료진 휴대전화로 전송을 하고, 그걸 또 전자차트에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었고, 보호자가 접촉자로 격리된 경우가 흔하여서 임상시험 하는 직원이 들고 가서 격리되어있는 보호자한테 사인받은 예도 있었습니다.



2020.4.9 해외입국자 지역관리(대전역) 현장 점검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문자나 앱을 활용한 인증 동의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받고 말로 설명을 하고 임상시험이나 연구를 진행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9번째 확진 환자 발생 -

사진출처: news1


## 정부는 엄중한 인식으로 추가 감염사례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건 당국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정부 방역망 내에서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세균

코로나19 대응 확대중수분회의 [20.2.16.]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산업

# 4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 전환

“

세계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같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발제**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 이후의 경제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발제** 코로나19 이후 산업 변화와 대응 김인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용범 기획재정부1차관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용진 국회의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이 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센터장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  
 최정표 KDI 원장

정세균 총리

##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 전환

지난 4.23일 시작한 목요일대화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귀한 의견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되는 ‘중심 이동’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될 만큼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엔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어제 KDI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0.2%로 크게 낮췄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급감하고, 서비스업의 위축과 제조업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은 실직의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파고가 얼마나 클지, 또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진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ICT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시대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더욱 챙기겠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위기는 일자리와 복지 등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그리고 이중의 사회안전망!”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양대 축입니다. 한편, 급격한 사회변화는 사회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각계가 함께 만나서 뜻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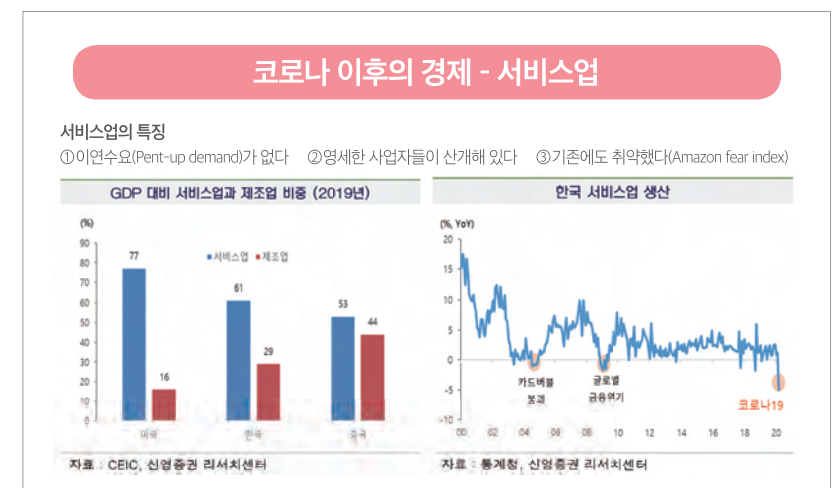
오늘은 경제와 산업 분야에 내로라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귀한 말씀을 들을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고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 이후의 경제

**김학균** 금융시장이 경제를 100% 복제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의 큰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관점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조망해 보면, 올해의 역성장, 내년·후년에 빠른 회복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상황은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2차 대유행이 오면 굉장히 낮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더 나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경제 영역 중에서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이 가진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표4-1) 첫째, 이연소비(Pent-up demand)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회사가 지금



<표4-1> 코로나 이후의 경제 - 서비스업



생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코로나가 진정 된 후에 잔업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동차와 가전 같은 내구재는 지금 구매를 미루더라도 나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은 날아간 수요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이발을 못했는데요.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4월에 이발을 두 번 하지는 않습니다. 3월 이발사의 수입은 날아가는 겁니다.

둘째,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기가 수월한데 서비스업은 지원받기도 힘듭니다.

셋째, 서비스업은 이미 코로나 발병 이전부터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과 같은 공룡기업들이 주도하는 비즈니스가 약진하면서 기존 자영업자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서비스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이고 동네 사장님이고 주 소비계층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사회 전반의 소비 여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교역은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미중무역분쟁 등으로 교역량이 위축됐는데, 분산화된 생산이나 리쇼어링으로 교역은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내수인데, 내수는 정부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하게 정부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IMF는 확장적 재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재정건전성이



2020.5.21 제4차 목요대화 I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 이후의 경제' - 김학균 센터장

높은 나라는 정부가 돈을 적극적으로 쓰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IMF 권고의 정신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에 의한 인위적인 저금리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전례 없는 저금리 환경에서 막대한 경제적 자원이 실물경제가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갔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주체들에게 선택을 맡겼더니 자산시장으로만 돈이 흘러가 향후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게 IMF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부 역할이 더욱 커지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민간이 못하거나 민간이 안 할 때입니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구축효과'라고 불립니다.(표4-2)

## 정부의 역할 증대

금리는 국가부채 증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

-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면 '구축효과' 발생
- 민간과 정부가 한정된 경제적 자원에 대해 경쟁을 하면 돈의 가치인 금리 상승
- 정부 부채 증가에도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민간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



<표4-2> 정부의 역할 증대

구축효과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곤 합니다. 민간이 사용해야 할 경제적 자원을 정부가 국채발행이나 세금을 거둬 가져가면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게 돼 돈의 가치인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금리가 잘 안 올라가고 있으니 민간의 자금 수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이 돈을 안 쓰면 정부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금리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채를 발행할 때 시장에서의 평가인 금리를 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정부의 부채를 누가 소화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37% 정도 되고 얼마 전 국가부도위기를 겪은 그리스가 17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부도가 안나고 그리스는 국가부도가 났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누가 샀느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세대 때 정부가 부채를 지면 자식 세대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우리 국민들이 사면 우리 자식 세대는 그 채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 때 세금을 더 내더라도 자산도 상속받았기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누가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금융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국채를 매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 좋은 일이지만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게 되면 효율적으로 쓰고 혁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무난하게 이야기가 되는 게 소위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혁신을 불러오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론 기존 플레이어를 잠식하는 배타적 성격도 존재합니다.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약진하면서 돈을 벌지만, 기존 기업들이 도태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이익 총량이 잘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존재합니다. 산업에서의 혁신과 함께 고용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비우량기업들이 경제의 효율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에서 불황이 주는 미덕이 있다면, 비효율적인 경제주체가 퇴출되고 살아남은 경제주체들이 경제를 효율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 중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작년엔 698개가 됐습니다. 전체 상장사의 34%입니다. 이렇게 낮은 저금리 환경에서도 이자를 커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느냐?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기업들이 잘 안 망하는 겁니다.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보낼 때 중요한 특징이 낮은 부도율이었습니다. 불량기업들도 계속 살아남으니까 경제가 큰 탈은 안 나지만 좋아지는 탄성도 약해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큰 기업들은 다 지원을 받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원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떤 프로그램 하에서 언제 빠져나와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해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잘라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이후 산업 변화와 대응

**김인철**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경제나 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예측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요 변화를 예측해보면 첫째는 탈글로벌화, 둘째는 디지털화의 본격화, 셋째는 소비의 선호 또는 생산방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탈글로벌화인데요.(표4-3) 일단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글로벌화가 굉장히 진전됐어요. 운송비용도 낮아지고 정보비용도 낮아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전 세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생산과 관련된 과업을 잘게 쪼개서 과업별로 세계 곳곳 가장 효율적인 곳에 뿌리는 생산방식입니다. 이를

### 코로나19 이후 주요 변화 예측

#### 탈글로벌화(De-Globalization) 가속화

- Globalization : 1990-2008 글로벌화 황금 시기, 글로벌 가치사슬(GVC) 급속 확대
  - 생산 전과정을 기능별로 분절(fragmentation), 기술우위와 비용우위 따라 전세계 배치
  - 생산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운송비용 하락; 소득 확대, 교역이익 확대
- Slowbalization : 세계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둔화 및 위축 시작
  - 글로벌 저성장, 비용우위 쇠퇴, 생산합리화 진전, 중국자급도 상승, 서비스화 확대
  -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첨단제조업 중심 선진국 리쇼어링 확대
  - 美-中 갈등, 무역-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 고조; 다자주의 쇠퇴
- De-Globalization : 코로나19 이후, 탈글로벌화 추세 가속화 전망
  - 전략품목, 핵심소재부품, 기간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중시
  - 주요국의 공급망 전환 및 다변화, 리쇼어링, 온쇼어 생산 전환 가능성 증대
  - 美-中 갈등 안보-지정학-자본 경쟁으로 비화 가능성, 한동안 대치상황 지속
  - 글로벌화 종말? 국가간 제품, 서비스, 기술, 투자 이동과 교역의 이익 소실?

<표4-3> 코로나19 이후 주요 변화 예측

통해 많은 국가들이 혜택을 받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국가 중의 하나가 한국입니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경제 저성장과 세계화가 퇴조하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이 왔습니다.

세계금융위기 이전 시기에는 중국이 상당한 중간재 수입을 통해 글로벌화에 기여했는데요. 이후 중국 내부 중간재 생산이 높아지면서 글로벌화가 서서히 퇴조하기 시작했고, 2010년 후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과 충돌이 심해지면서 글로벌화가 훨씬 더 퇴조하는 방향, 그리고 다자주의가 줄고 자국중심주의, 보호주의가 만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러한 탈글로벌화를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합니다. 공급망 조정이 있을 것이고 리쇼어링이 있을 것이고 국가전략 상품이나 기간산업에 대한 보호가 해외 자국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힘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디지털화입니다. 글로벌화가 퇴조하는 시기에도 디지털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됐습니다. 디지털 기술 자체가 빠르게 발전했고 디지털화를 통해 얻는 이익과 잠재적인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디지털화가 탈글로벌화나 탈글로벌화의 대응, 그리고 소비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속히 발전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은 소비선호와 생산방식의 변화인데요. 소비선호가 온디맨드, 즉시성, 편의성, 개인화, 비대면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코로나가 그 모든 것을 가속화시키면서 소비선호의 변화를 충족시키는 기업이나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누릴 전망입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변화된 선호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소비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생산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코로나와 코로나가 유발한 변화를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게 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코로나로 인해 국내 수요하락, 그리고 글로벌 장기침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봐서는 침체나 공황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 짧은 기간 내에 경기가 반등하리라는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유발됐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재발하거나 확산되면 세계 경제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장기 저성장 또는 공황 상태로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둘째, 산업에 대한 영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둔화는 산업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주었는데요. 앞으로도 국내외 수요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탈글로벌화는 우리나라처럼 세계 경제에 강력히 통합되어있는 국가에 굉장히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보다 탈글로벌화가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나라의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탈글로벌화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공급망 변화 또는 리쇼어링입니다. 공급망 변화나 리쇼어링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경제 논리에 의한 공급망 변화나 리쇼어링의 자리가 매우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국가적으로 공급망 변화와 리쇼어링에





2020.5.21 제4차 목요대화 | '코로나19 이후 산업 변화와 대응' - 김인철 본부장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각국이 국가전략 하에 공급망 변화와 리쇼어링을 진전시키게 되면 국가 간 산업정책이나 국가전략이 상호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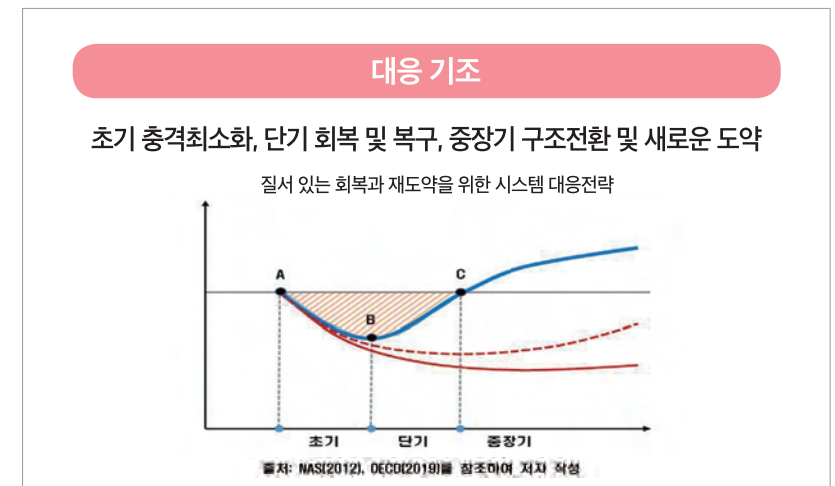
셋째, 고용에 대한 영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화 세 가지. 탈글로벌화, 디지털화, 그리고 소비와 생산 변화가 고용 상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하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탈글로벌화를 통해서 자국 내 양극화, 국가 간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2017년을 기점으로 추세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총부양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까지도 감안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응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표4-4) 초기에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단기적으로는 회복 및 복구를,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전환 및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이후 궤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취약 계층이나 기업을 초기에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여기 해당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회복과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 궤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잘 진전되어야 이후 질서 있는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시기에는 위기 탈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물위기가 실업이나 기업도산을 통해 금융위기나 부채위기 등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기진작, 고용 회복을 위한 총수요 정책도 함께 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공급망, 리쇼어링 측면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국내외



<표4-4> 대응 기조

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를 풀고 서비스업, 특히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마트공장인데요. 우리 산업이 지닌 제조업 강점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단계의 구조전환과 새로운 도약입니다. 산업과 고용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실행해야 합니다. 디지털화를 핵심 기회요인으로 삼아 1·2·3차 산업을 디지털화하고 정책을 혁신하는 겁니다. 1·2·3차 산업 어느 업종도 디지털화를 통해 4차 산업·혁신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크게 보면 교육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기업이나 산업의 좀비기업 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또 이것을 재정과 가치 창출에 연결시키는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서로 질문하고 협의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중장기 구조전환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일자리의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김인철** 한편에는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발전이 일부 분야의 고용을 축소시키지만 결국 다른 분야의 고용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어느 쪽 힘이 더 강할지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줄고 총부양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화를 통해 질 좋은 고용을 확대

해야 시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연구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석훈** ‘88만 원 세대’ 연구하다 보니까 IMF 충격이 지날 때는 산업간 조정이나 산업 내의 조정이 더 큰 줄 알았는데 길게 보니까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일 컸더군요. 그래서 IMF 전에 졸업을 한 사람하고 그때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운명이 소득 같은 걸로 확 갈렸 습니다. 그래서 충격도 세대 간 충격이 클 것 같아서 그런 분석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에만 있는 관행이 공채입니다. 매년 공채를 실시 했는데 지금 공채를 못하게 되면 이 기회에 어쩌면 공채라는 제도



2020.7.8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면 고용이나 노동 쪽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철** 코로나 세대의 청년층은 고용이나 직무 관련이나 인적자본 형성 기회가 모두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평생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있었던 청년층은 장기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세균**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급락했다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젊은 개미들이 금융·주식시장에 새로 참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투기장에서 투자장으로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배당율이 향상된다든지 여러 가지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건강하게 우리 금융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겠는지요? 또 젊은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무르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금이 산업자금화할 가능성은 있겠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융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 바이코리아 펀드, 인사이트 펀드 이런 것이 있었지만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 성공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순환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지배 구조 관점에서 다수의 소액주주들과 오너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작은 기업들은 오너의 지분율이 높으니까 다수 주주와 오너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데, 큰 기업들은 오너의 지분율이 낮다 보니 다수 주주와 오너들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주요 재벌들의 배당성향은 비재벌사들보다 낮습니다. 대주주와 기타 다수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배구조를 다수 주주들에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민간이 경쟁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는 걸 막으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물고를 터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이는 우리도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다만 지금까지 양도차익과세를 안 하다가 부동산을 조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자금이 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도 조이고 주식도 조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조금의 속도조절 같은 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합니다.

**시청자**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김학균**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협소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데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영리의 목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인프라를 깔아주는 겁니다. 인프라를 깔아주고 민간이 거기서 경쟁을 하게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인프라는 물리적 인프라입니다. 도로 닦고 도시를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인프라 투자인데 도시화가 완성되면 토목에 돈을 넣는 게 자원의 낭비가 되어 하기가 굉장히 힘들습니다. IT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직후에 김대중 정권에서 벤처붐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코스닥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해 많이 봤지만 기술버블은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당시 주식 투자인 사람은 손해를 봤지만 인터넷 전용망은 남아서 IT강국 코리아의 발판이 됐습니다.

현시점에서의 딜레마는 4차 산업혁명에 3차 산업혁명에서 개발된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어서 인프라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적용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기술이 사업이 되는 국면에서 제도의 정비라든가 상이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중요한 합의점들을 도출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표** 경제학에서는 실물이 우선이고 금융은 보조 수단인데, 지금은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성장률이 1%를 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완전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 코로나 이후로 가도 1% 이상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야 활성화되는 것인데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하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내부에 거품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가 서너 가문이 지배하는 봉건시대 같은 구조로 되어있어 한계가 많습니다. 이런 체제로 세습을 해가면서 나라 경제를 이끌고 가는 선진국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목소리가 나오다가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국면이 되니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튼튼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균** 장기적으로 주식의 성과는 그 나라 경제의 명목성장률에 수렴합니다.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당연히 기대수익률도 낮아 지리라고 생각되고요. 성장률이 둔화됐을 때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배당입니다.

경제가 고성장을 하게 되면 사실 배당을 할 필요가 없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재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일이지요.

반면 성장이 둔화되면 기업이 돈을 회사에 쌓아둘 명분이 없습니다. 한국 상장사들은 배당을 덜 줍니다. 낮은 배당은 한국의 나쁜 지배



구조와 연결이 되어있고 배당을 늘리는 것이 주식투자에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액주주들, 주주들이 지분에 맞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면 그런 흐름으로 한국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와 기업차원의 소비 증진책

**박용진**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기업이 주도하는 원격의료에 우리는 하위파트너가 될 것이고 단순 노동,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 되고 자동화되는 시스템 속에서 노동자는 단순한 보조업무를 하기때문에 소득이 자꾸 감소하죠. 그러면 사회 전체로는 소비력이 감소합니다.



2020.5.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현장 방문

기계가 소비를 해주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 소비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긴급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차원에서 소비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금을 말씀하시는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배당하거나 혹은 쉼어하는 방식을 디자인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 사회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소비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별도로 기업 차원에서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소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 확장적 재정정책의 속도조절

**성태윤** 저는 최근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코로나19 자체의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기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익이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재정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나 지원의 대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초점을 두는 것이 정책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 논의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0%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정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서 김학균 센터장께서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제 총량적인 구축 효과는 제가 보기에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축효과를 우려하는 것은 질적인 부분의 구축 효과입니다. 왜냐면 최근 들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신용스프레드가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은행 같은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작년 대비 거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금리가 낮아 우리나라 민간 부분의 자금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상당히 경색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어려운 기업을 아예 이번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일자리 타격이 너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증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지배구조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결국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가가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도 해야 하고, 배당 문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은 불가피하나 최대한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추진하려면 핵심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가격변수에 대해 고려해야 하나 가격변수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 정치과정 속의 코로나

**우석훈** 제가 보는 전망은 내년 말까지는 전세계적으로 백신이 나오거나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경제적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방역을 완화했다가 강화했다가 소규모 사이클로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감도의 경제를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의료도 용어가 무엇이든 간에 이미 정책영역을 넘어서 정치과정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는 것들을 유발시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식량문제를 겪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하지 못해 농촌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1년 동안 우리 농업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디지털 생태계 K-인더스트리

**김태환** 저는 최근 K-인더스트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K-인더

스트리탄 우리 주력기업에 ICT 기술을 융합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하고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K’라고 붙인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있는 주력산업들이 있습니다. 주력 산업의 생태계를 십분 활용해서 디지털로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수직 통합하는 산업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같이 한다면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디지털화가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AI 데이터를 논한다는 것은 산업현장에서는 사상누각입니다. 현장을 더욱 디지털화하고 좀 더 자금 자족적으로 선순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디지털 통상규범

**신승관** 통상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인 패스트트랙입니다. 기업인들이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 모델이 기업의 이동에 있어서 표준모델로 제시되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유용한 모델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상규범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80여개국이 WTO 복수 국가 디지털 무역 협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추진



2020.4.6 사회적 거리두기 우수기업 방문

되지 않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의료와 관련해서 개인 비실명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생기고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의료 관련 정보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WTO 복수 국가 디지털 무역협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부처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잘 조율되기를 기대합니다.

## 코로나 이후 비즈니스 변화 준비

**박미경** 중소벤처기업의 직간접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하반기에 도산기업이 급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정부가 고용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휴업이나 휴직 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비즈니스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어떤 형태로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지원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출로 인해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대출 심사 기준이나 보조금 요건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도 한시적 면제나 기간유예, 분할 납부 등 추가대책이 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가져야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비즈니스 방향성이 온라인 형태로 바뀌고 디지털화도 상당히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환경에 충분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R&D, 제조 설비투자, 디지털 마케팅 등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재난의 비대칭적 효과

**이호영**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사회 전반으로 미치고 있는 와중에 혹시 플랫폼이 점점 더 커져가는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의구심을 가진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위기가 닥치면서 불평등과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포용정책이 경제정책으로 인해 후행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뉴딜 정책을 하기도 하고 경기를 부양하기도 했습니다만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해보면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외환 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의 결과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비정규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 가지고 오는 비대칭적인 효과들을 정책을 설계할 때 감안해서 이번 위기에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디지털 기술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이용한 매칭과 추천에 매우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검색 결과가 상위권에 랭크된 것만 첫페이지에 보여주듯이 디지털 기술은 이미 눈에 띄는 것을 더 잘 눈에 띄게 만들기도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점점 더 보이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청소년들은 먼저 출발한 사람들의 트랙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미 원격 수업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비대면 상황이 혹여 알고리즘이 매개하는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교육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현장교육의 미스매치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공급 측면에서 학력 과잉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문제는 노동수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PIAAC 조사 결과를 보면 2-30대의 스킬은 매우 뛰어나지만 50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스킬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키는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을까요.



다시 플랫폼 문제로 돌아가면 플랫폼 기업의 활동범위는 국경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켜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과세나 사회적 책임 등을 부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이런 미스매치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그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난이 보여준 비대칭과 불평등의 문제들을 회복기에 축소시킬 수 있다고 믿지 말고 한국형 뉴딜과 같은 대책 안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현행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 세대 낙인화 방지

**배규식** 모든 나라들이 경제위기 충격에 대응해서 일시적이지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위기가 낮고 고용이 줄어드는 비율도 낮지만, 대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고용위기가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방식이 확산하면서 사업주들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책임을 면하고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부문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플랫폼을 독점한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법의 적용이 쉽지 않는 점을



2020.5.21 제4차 목요대화 | 배규식 원장, 김용범 차관

고려하여 새로운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코로나 세대라는 낙인이 찍혀서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들이 조금 더 일정한 책임있게 인턴 제도 등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민간부문이 벌여놓고 책임지지 못한 채 놓고 간 것을 뒷정리만 하는 식의 국가 역할에서 벗어나 공공의료서비스라든지 소방서비스라든지, 돌봄서비스,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택트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하는데 이에 따라서 새로운 규율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생명안전보건과 휴먼 뉴딜

**김유선** 정부의 단기 대책을 보면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두 가지입니다. 2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유지라는 큰 목표를 내세웠음에도 두 달 사이 취업자가 102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은 정책의 집행 속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집행과정에 빈 구석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뉴딜을 발표하셨는데 그린 뉴딜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가 하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만으로는 뭔가 비는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명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휴먼 뉴딜이라든가 하는 범주로 묶어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외국인 국내기업인수 위원회

**이 군** 최근 리쇼어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리쇼어링이 많이 되긴 어려울 것 같고 신규투자나 글로벌 GVC 재편 과정에서 조금 더 국내적인 요소를 고려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일자리가 관건인데 우리

나라 기업과 애플 같은 기업의 차이는 둘 다 오프쇼어링을 했지만, 애플은 자기 공장이 없고 외국기업에 완전히 위탁하죠. 삼성 같은 경우는 자기 공장을 가지고 해외에 갔다는 면에서, 삼성은 오프쇼어링이지만 아웃소싱은 아니고 인소싱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오프쇼어링이고 동시에 아웃소싱이죠. 그것이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국내 일자리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리쇼어링을 가능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결국은 기업들의 유연성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잘 되는 기업은 극복을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52시간 탄력근로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유연하게 해주지 않으면 리쇼어링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요즘같이 재택근무하는데 주 52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주 52시간은 과거 전통적인 공장제 방식인데 요즘같이 일하는 방식이 다양한 형태에서는 경직성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대기업 같은 고급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부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 쪽으로 가 있어서 미스매치인데, 저는 재벌 같은 대기업에 대해서 갑질이라든가 투명성 같은 것이 해결된다면 대기업 자체가 커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선순환 구조인데, 즉, 대기업 사람들이 많이 뛰어나와 창업하는 것이 활발해야 하고, 동시에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쉽게 인수되면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도 대기업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대·중·소 간 이중구조가 해소됩니다.



2020.5.21 제4차 목요대화 | 이근 교수, 최정표 원장

코로나 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M&A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처럼 M&A에 대해 자유롭게 개방되어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외국인의 자국 기업 인수에 대해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있어서 인수를 허가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문제가 우리가 적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배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배당으로 지불한 외화액이 23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20억이 없어서 IMF 위기로 갔는데 그 10배 되는 돈이 한 해에 배당으로 외국에 나갑니다.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주식을 일주일 보유한 주주와 일년 보유한 주주가 똑같은 배당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유럽의회는 2008/9년

금융위기 이후, 단기투기자본을 견제하기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결권과 배당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세균** 어제 KDI에서 금년도 성장률을 0.2% 정도로 전망해서 반가웠습니다. IMF가 -1.2%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최정표** 사실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많아 예전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변수가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K방역이 성공하는 케이스로 가고 지금 상황에서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0.2%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외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국가들은 중국하고 미국, EU인데 그곳들이 방역을 잘 해주고 우리 수준으로 가면 하반기에는 수출이 증대되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대유행이 다시 온다면, 올가을에 한국도 다시 유행이 오고 외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1.6%까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고 외국도 크게 악화되지 않고 나아가면 한 0.2%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세균**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서 국회가 안고 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21대 국회는 20대에 비해 성적표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추진

**박용진** 21대 국회에서는 상법개정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소액주주 혹은 다수 주주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이사회 구성을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위한 아주 초동적인 조치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기업이 책임 있게 문어발식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인수하는데요. 다만 우리처럼

순환출자하고 은행 대출받아서 자기 돈은 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100% 지분인수부터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구글도 유튜브 말고도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아예 통째로 인수를 해서 미래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상당히 힘들도록 법률을 만들어 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약간의 투자만을 통해 전체를 지배 하거나 순환출자 하거나 기술 베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산업 전체, 우리 경제 전체를 도약시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2020.5.21 제4차 목요대화





사진출처: news1

##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금에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국민들께서 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세균

문화·교육

# 5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 온택트(on-tact) 사회를 향한 미로 걷기

“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는 비대면(un-tact)사회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뜻하는 온택트(on-tact)사회로의  
재편을 위해 비대면 인프라 조성 등 디지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속에서도 인간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



**발제**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 유현준(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발제**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으로 김누리(중앙대 독일어문학전공 교수)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김재홍 CJ ENM 전략지원실장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청해 서울 창덕여중 과학교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용진 국회의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현구 클래스팅 대표이사

정세균 총리

## 온택트(on-tact) 사회를 향한 미로 걷기

코로나19는 보건과 경제를 넘어, 사회 전 분야, 우리의 일상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미 ‘온라인 공간’은 사람들이 일하고 만나고 생활하는 주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장치’는 모든 세대에게 기본적인 생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통산업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뜻하는 ‘온택트(on-tact)’사회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잘 잡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디지털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입니다. AI,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육성하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디지털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교육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비대면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제도 혁신과 규제개혁으로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 해체, 개인정보 오·남용, 디지털 소외와 불평등 심화 등 디지털 사회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보장,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디지털 환경도 조성해야 합니다.

‘온택트(on-tact)’사회를 향한 미로를 걸으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휴머니즘)’입니다.

“디지털의 길에서 인간을 재발견하다!”

우리 목요대화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사회·문화·교육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어떨지 아무도 모르고 정답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

**유현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됐죠. 이런 변하는 시대일수록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간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은 종교 분야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최초의 종교건축을 보면, 큰 높은 탑 같은 건축물을 쌓아놓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고요. 쳐다봄을 당하게 되는 제사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크게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당 같은 건축을 보면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쳐다보게 하고 실내공간에 똑같은 장소에 시간을 맞춰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의자 같은 것을 보더라도 긴 의자를 놓게 해서 10명이 앉게 되면 좌우에 끝에 있는 분 말고 가운데 앉아계신 분은 예배 중간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앞을 계속 봐야 하는 공간구조를 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간 자체가 권력을 많이 만듭니다.

공간구조를 통해서 권력을 창출하는 곳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항상 모일 수가 없게 되고 많은 조직이 와해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흑사병이 돌았을 때 중세가 끝났고요.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공간도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반의 모든 학생이 다 앞을 쳐다보게 되어있고 그 앞에 선생님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간구조를 통해서 만들던 학교의 기능도 약간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교는 보통 3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집니다. 지식전달의 기능과 아이를 맡아주는 탁아소 기능, 같은 세대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훈련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식전달체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지식전달만 보게 됐을 때는 유명 강사가 전 국민의 절반 정도 학생들의 수업을 가르쳐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의 역할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실도 지금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실도 빈 교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부셔서 테라스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에도 실내공간에서 나가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온라인수업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가 대체되든지 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한 장소에 모이는 것도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 학교가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상업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도시 공간구조에서 상업을 하는 공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재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등 비워지는 공간에 위성 학교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도시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도시에 살고 3일 정도는 지방에 가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 아버지와 같이 가서 아버지는 랩탑으로 지방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은 그 근처에 있는 위성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랩탑으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0.5.28 제5차 목요대화 |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 - 유현준 교수

주거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 중산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30평대 방 3개짜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아파트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라이프스타일이죠.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도심 속에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두 세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는 라이프스타일에 기초를 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중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일하는 어른들은 바깥 직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주중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에 주로 쓰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거의 다 집에 모여있게 되면서 사실상 30평대 아파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50%가 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온전히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금 면적이 늘어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주택 기준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도시 속의 문제는 많은 분이 겪어서 알겠지만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바깥 공간이 공원이라는 공공공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60~70년대에는 마당이라는 것이 있었고 80년대만 해도 아파트에 발코니라는 야외공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공간들은 마당이든 발코니든 다 사적인 외부공간입니다.<sup>(표5-1)</sup>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발코니 확장법 등으로 인해 모든 공간이 다 실내화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적인 외부공간이 필요한가를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주택을 볼 때 기본적으로 발코니와 테라스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건축 관련 법규가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테라스 공간도 분양가에 포함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면, 가격책정방식을 면적 중심에서 체적중심으로 바꾼

주거형태의 변화	
1970년대	30평형 아파트 평면
1980년대	발코니 임시 확장
1988년	발코니 1.2미터에서 1.5미터로 확대
2005년	발코니 확장법
2010년대	일인주거 확대, 셰어링하우스 등장
2020년	"주거+오피스"의 새로운 일인주거 필요
테라스 활성화 위한 새로운 건폐율, 용적율 법규 필요	

<표5-1> 주거형태의 변화

다던가, 건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바꾸는 등 시장에서 사적 외부공간을 많이 제공할 수 있게끔 법제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는 많은 가정 기구의 크기가 커졌는데, 20~30년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에서는 이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파트들이 다 벽식구조로 만들어져서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유연하고 가변적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벽구조 중심에서 기둥구조 중심으로 변형을 줘서, 이번 코로나뿐 아니라 향후 기술발달에 따라 바뀌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좀 더 유연하고 가변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변하는 것을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는 보내지 않아도 학원은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권력이든 욕망이든 자식이든 이런 부분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많은 전문가가 앞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12시 방향으로 가던 세상이 6시 방향으로 180도 회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2시 방향 정도로 방향을 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전염병 문제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병과 도시는 항상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등은 대체로 건조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건조기후대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발생한 이유는 환경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전염병 전파에 불리한, 전염병에 강한 기후 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밀화된 도시가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좀 북쪽으로 올라가 로마가 번성했을 때는 새로운 상수도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했고, 그다음 파리 같은 경우는 하수도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염병 관련 ‘인프라 스트럭처’를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그것이 국가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국가경쟁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만 명 넘는 도시들은 이런 상하수도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7~18세기 백신이 나오고 천만 명 넘는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천만 명 넘는 도시는 28개고 백만 명 넘는 대도시가 460개 정도 됩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시냅스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똑똑한 이유가 작은 뇌지만 이 안에 뇌 회로가 병렬로 연결되면서 거의 천억 개의 뉴런이 100조 개의 시냅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냅스를 늘리기 위해서 인간은 도시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는 시설을 넣어서 ‘고층·고밀’화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뉴욕이 가장 고밀화된 도시죠. 그래서 가장

시냅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면적당 시냅스의 개수가 제일 많은 도시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았고 그래서 유럽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랐을 즈음 80~90년대를 거치면서 인터넷 빅뱅이 일어나면서 시냅스가 온라인상으로 한 번 더 늘어나는 도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도시를 보면 시냅스 총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지난 오천 년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의 도시는 온라인 시냅스와 오프라인 시냅스가 함께 놓인 상태입니다. 온라인 시냅스와 오프라인 시냅스 두 가지 방법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도시가 경쟁력이 높은 것입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컨택트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집 앞에 찾아가고 손을 잡고 데이트하죠. 두 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도시가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고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연결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전염병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말이라는 교통수단이 있을 때 흑사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았고 배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때문에 항상 전염병의 위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많은 집단에 속했을 때 생존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로든 음식으로든 냄새로든 아니면 게임을 할 때도 집단으로

움직이는 소속감을 느끼려는 문화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도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배웠던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모든 국민이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공통의 추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도시를 보면 커피숍밖에 앉을 때가 없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스타벅스를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빵다방을 가죠.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모든 사람이 야외공원에 나갔기 때문에 공통의 추억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필요한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사회가 가속화될수록 SNS가 될수록 끼리끼리의 집단 소통만 늘어나게 되고 집단 간의, 계층 간의 소통은 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믹스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공짜의 공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포가 중요합니다. 백만 평 공원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만 평 공원을 100개 만드는 것이 낫고요. 백만 권 있는 도서관 하나보다 만 권 있는 도서관 100개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밑에 지하터널을 뚫고 자율주행하는 로봇이 다닐 수 있는 운송 시스템을 만들어서 30분 이내에 물류를 배달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sup>(표5-2)</sup>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뚫었을 때 경부고속도로에 아무런 차도 없는데 뭐하러 만드냐 했을 때, 그것을 뚫고 나서 새로운 자동차 산업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40m에 GTX를 뚫을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가 있다고 하면 이 도시가 훨씬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고 그 도시로 자본이 모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얻는 것은 도로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로 꽉 차는 도시가 아니라 공원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소셜믹스를 가능하게 하는 공원이 바로 앞에 있는 새로운 도시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축을 바꾸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염병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화인데 현재 두 가지 모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라고도 합니다.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비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전



<표5-2> 건축 변화를 이끄는 요소

을 함께 만들고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으로

**김누리** 저를 이렇게 초청해주신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입시를 철폐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경청한다고 해서요. 지난 100년 우리 교육을 돌아보면 ‘이게 과연 교육이 맞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제 지난 세기 교육과는 전혀 다른 그런 유형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교육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것은 비교육이 아니다, 이걸 반교육이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교육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교육에 반한다’ - 이렇게 좀 근본적으로, 자기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3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황국신민을 길러내는 제국주의 교육이었습니다. 해방 후 40년 동안은 독재정권 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10년 민간독재, 30년 군사독재를 경험해야 했지요. 당시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공 투사 혹은 산업역군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 민주화가 돼서 지금 민주 정부 30년인데요. 민주 정부의 일관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성숙한 인간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번도 존엄한 인간을 기른대거나 혹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르는 이런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은 한국에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 문제는 모든 문제가 입시 문제로 그냥 환원돼버리고요.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갖느냐가 유일한 교육개혁의 목표인 것처럼 돼버린 이런 사회에서 과연 교육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0년의 교육은 소위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라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능력주의 혹은 수월성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국주의가 말하는 능력주의든, 그 이후에 독재정권이 말한 능력주의든,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능력주의든 그 능력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관되게 수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교육을 끝내야 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능력보다는 인성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한국교육의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존엄한 존재로 보는 근본적으로 전환된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한국 사회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는 칼럼이 나왔어요. 스웨덴의 권위 있는 연구소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소위 ‘30-50 클럽’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7개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를만한 나라 중에서 제국주의의 역사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 과거에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 새로운 장을 우리가 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국주의의 과거가 없는, 이런 도덕적 품격을 지닌 나라에서 이제 세계를 선도할 만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방역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교육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투정이 아니예요. 출산율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출산율이 '1' 이하인 그런 기록이 2년째 연속된 역사상 최초의 나라예요. 2년 연속 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가 없었대요.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학생들 말이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예요.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처넣을 자신이 없다.” 너무 끔찍한 말이에요.



2020.5.28 제5차 목요대화 |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으로' - 김누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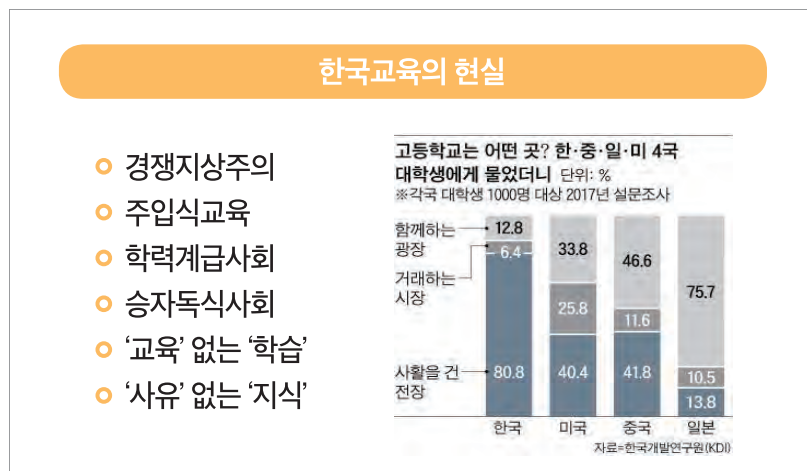
우리 세대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중 행복한 아이들이 없어요. 유년기, 아동기에 행복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봐요. 행복한 유년을 갖지 못한 아이가 성인이 되면 행복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또 행복의 경험을 갖지 않은 자가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이런 불행의식의 핵심에는 교육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지표 중에서 가장 놀라운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2017년 KDI 지표예요. 한·중·일·미 4개국의 대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 어떻게 기억되는가를 물은 거예요. 전쟁터로 기억하느냐? 시장으로 기억하느냐? 아니면 광장으로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국의 아이들의 경우 80.8%가 전쟁터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고등학교 시절을. 청년기를 전쟁터를 지난 것처럼 지내 온 자들이 한국인들이고 그다음에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본 게 한 6%, 함께 하는 광장이라고 본 학생이 12% 정도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표5-3)

이 4개국이 어떤 나라예요? 대체로 경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들이예요. 그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쟁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계속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내면은 너무나 황폐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이 일상화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의 강도가 높은 나라가 됐을까를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5-3> 한국교육의 현실

저는 여기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이유는 역사적인, 정신사적인 이유입니다. 일제 때는 보통 사회적 다위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상이 전일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정글이고 그 안에서 적자생존, 약육강식, 승자독식 이런 부류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사상이지요. 일종의 제국주의 사회학이죠. 이런 사상이 일제 때 정신사적인 주류였지요. 그 이후에 미국 교육이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시장이 중심이 되는 자유시장 경제 이데올로기 안에서 경쟁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심지어 고무되었습니다. 이 2개의 사상, 즉 사회적 다위니즘과 시장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겹치면서 경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심지어 긍정적인 가치로서 한국 사회에 자리 잡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경쟁이 강화돼요. 불평등 정도와 경쟁의 강도는 거의 비례합니다. 이건 학문적으로도 이미 상당 부분 검증이 된 것인데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불평등하면 미국과 멕시코를 떠올렸지만,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불평등은 몇 차례 정권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치사적인 이유입니다. 보통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전통적 지배층, 즉 이스테블리쉬먼트(establishment)가 완전히 붕괴된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이 극심한 거예요. 한국과 같은 이런 사회가 잘 없죠. 일제 때 한번 전통적인 지배계급이 와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지배계급이 와해되더라도,

그들의 정치·경제적 권력은 무너져도 문화적 권력은 대체로 오랜 기간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 6.25전쟁을 통해서 이 문화적 권력마저도 공간적으로 완전히 해체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평등 지향적 사회가 된 거예요. 그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의 원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한국 사회는 평등의 들판입니다. 바로 이 들판에 학벌이라는 괴물이 등장한 것이지요. 학벌이라는 게 전통적 신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학벌 계급사회만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으면, 한국 사회가 오늘날의 어떤 사회보다도 멋진 유토피아에 접근할 만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미래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 즉 학벌 계급사회의 문제를 풀어낸다면 한국 사회는 인류가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정의롭고 평등한 그런 사회의 모델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쟁 지상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 ‘교육이 없는 학습’만 존재하는 학교, ‘사유가 없이 지식’만 집어넣는 교육 -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교육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근대 교육을 각인한 일본조차도 이제는 이런 교육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위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하고 대학입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등 2000년대에 들어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습에 매달려 있는

형편이지요. 아직도 교육문제를 오로지 선발 과정의 공정성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공정성 문제를 좀 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결국 공정성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건 완전히 양날의 칼이에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을 비판할 때나, 특권을 비판할 때는 분명 유용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공정성 이데올로기가 차별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더 쓰이고 있어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로 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걸 푸는데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바로 이 공정성 잣대입니다. 공정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기실 정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의 수단에 불과한데, 오히려 공정성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에요.(표5-4) 한국 사회가 이제는 대학입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입시를 없앤다면 너무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학입시 보는 나라가 유럽에서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치릅니다. 이것을 독일에서는 아비투어(Abitur)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만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가도록 해놨어요.

그렇다고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는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1. 교육 원리 : meritocracy → dignocracy
2. 교육 목표 : 인적자원 → 민주시민
3. 교육 방식 : 경쟁교육 → 연대교육
4. 교육 효과 : 열등감 → 행복감
5. 대안 모델 : 영미식 → 유럽식

<표5-4>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경쟁을 너무도 당연시하고 심지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 이데올로기의 신화에 사로잡혀있는 일종의 포로들이에요. 경쟁 이데올로기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12년 내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거의 모든 아이들이 열등감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좌절감, 열등감, 불행감을 우리 아이들이 내면화하고 있다는 현실 - 이것에 대해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이 경쟁의 승자들이 행복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재작년 2018년에 서울대 심리연구소에서 나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상태라잖아요. 한편으론 놀라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들은 늘 1등을 해야 하니까. 늘 1등을 해야 한다는 그 불안감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 아이들도 결국은 희생자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교육제도는 모든 아이들을 예외 없이 희생자로 만들고 기형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불구화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교육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에서 경쟁을 금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경쟁교육에서 연대교육으로의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낸 사례예요. 한국 교육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입시정책을 좀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교육으로 새로운 인간을 키워내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4가지만 폐지하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 없애야 해요. 대학서열 폐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일단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화하면 됩니다. 대학등록금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등록금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가장 비싸요.

이것은 한국이, 이 정부조차도 고등학교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정부에서 고등교육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학등록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정부 예산으로 보면 큰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등록금을 폐지하면 비로소 사립대학들을 공영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사립대학을 점진적으로 공영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립대 네트워크화, 사립대 공용화를 통해서 대학의 서열구조를 깨야 합니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영미 계통의 국가들



이예요. 유럽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서열구조가 없습니다. 전통 있는 대학은 있지만 소위 엘리트대학이란 건 없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특권학교도 폐지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안 쓰고 교육혁명이란 말을 쓰는 것이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요구와도 맞는다는 겁니다. 우선 인구 사회학적으로 인구수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8세 학생들이 정치적인 권리를 얻은 것도 교육 분야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교육혁명과 관련하여 이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1968년 파리 거리를 휩쓸며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다’라고 외쳤듯이, 우리 학생들도 광화문에서 자신의 주장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차산업혁명의 요구도 교육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식쪼가리들을 외우고 그걸 그대로 되새김하는 걸 우수하다고 하는 이 교육은 이제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식을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사유하는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교육혁명은 그냥 단순한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명 중의 혁명입니다. 교육혁명을 함으로써 한 사회가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6.8혁명 이후에 교육혁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런 성숙한 민주사회가 된 거예요. 6.8

이전의 독일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소위 ‘민주개혁 정부’는 단 한 번도 교육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좁거나 시야가 얇았기 때문입니다. 교육혁명이 민주혁명의 시작이자 끝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교실은 민주주의의 묘판입니다. 거기서 기른 묘목이 전 사회에 퍼져 나가 숲을 이루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교실은 민주주의의 묘판이 못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쇼교육의 잔재가 지배하는 곳이 교실입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우열을 나눠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 정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사들은 어떤 처지에 있나요? 교사들은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한 정치적인 금치산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치적 미숙아’이고,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라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가르치지요? 그런 교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자가 되겠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재난 시대의 사회문화 거버넌스

**김종휘** 저는 문화영역 안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보건 방역, 경제 방역, 복지 방역을 통해 국민의 효능감과 자긍심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민과 정부의 일체감이 높아진 경험 위에서 이제부터는 문화 방역, 마음 방역을 준비할 때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에티켓이 됐습시다만 국민 개개인의 고립감과 우울감도 만성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책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사회 전체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할 때라고 봅니다. 거리두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문화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도출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 점에서 국민의 사회문화적 활동부터 개인의 심리까지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일상의 의례를 만들어가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재난 시대의 ‘사회 문화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양식을 좀 슬기롭게 전환시켜 나가는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겠습니다.



2020.5.28 제5차 목요대화 | 김종휘 대표이사, 김재홍 부사장

다음은 지금 코로나19로 생태계가 파괴된 문화예술영역의 해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애를 써서 긴급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의 다급함, 현장의 다양해진 욕구와 비교해 보면 현행 지원제도와 지원 구조와 방식은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때 틀지어진 것과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있었는데, ‘현행 행정 체계상 안 된다, 기재부 기준과 안 맞아서 안 된다’는 도돌이표가 반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가 ‘사람이 있는 문화’입니다. 이에 맞춘다면 이제부터는 사업보다는 사람을 지원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지원하고, 행정 단년주의를 넘어 최소 3년 정도 연속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호흡을 길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올해 하반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9~10월은 전국적으로 축제와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면 성공이라고 평가할 것인지, 알아서 그냥 거리두기 하면서 행사 하라고 할 것인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축제나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를 성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혀줘야 합니다.

### 창의적 문화컨텐츠 지원

**김재홍**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 창의적인 인재 발굴

및 육성은 사업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암기식, 주입식 위주의 현 교육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독창적 스토리들이 활발하게 창작되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존 제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많이 부족했던 서비스업,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등으로 K무비, K팝, K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제2의 봉준호, 제2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교육개혁을 통하여 단기간에 창의적인 인재들이 대거 육성되기는 어려우나, 문화 융성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미래교육에서 학교의 역할

**김청해** 학교에서 과학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말 질서와 계획을 기반으로 1년이 운영되는 곳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혼돈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혼돈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혼돈 속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변화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유의미한 변화들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학교에 잘 정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인데요.

코로나 전에도 유용한 교육콘텐츠나 교육플랫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그것이 교육현장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학교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시작된 온라인학습으로 인해 다양한 플랫폼들, 다양한 콘텐츠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생각보다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것들을 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일차적입니다. 제공하는 교사에게도, 학습하는 학습자에게도 단순하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초기에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화두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학생들과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 경험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피드백을 온라인상에서 유의미하게



2020.5.28 제5차 목요대화





2020.4.2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현장 방문

제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핵심은 콘텐츠 생성과 전달보다는 학생 성장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가 하던 역할은 교육과정부터 시작해 평가와 피드백, 혹은 입시, 선발 등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또 그 미래 학교에서 과연 이 모든 역할을 학교가 담당해야 할 몫인가? 학교의 역할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미래 교육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학생의 성장만이 아니라 교사의 성장이 동반해서 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교사의 의욕이나 몇몇 교사의 역량에 의존했던 교육 변화가 아니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학교 안에 테크 전문가가 있고 교사는 티칭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가정과 학교와 지역과 사회와 국가가 모두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벌구조의 고용관행 타파

**반상진** 코로나 사태에서 온라인 교육뿐 아니라 초단기적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순차적 등교, 학교 간 동선 제한 등 많은 부분이 정책으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이를 좀 더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공간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도 ‘ㄷ’자의 일자형의 공간으로 당연히 21세기 공간 ‘재구조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부가 학습공간 재구조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재정적 입장에서 소극적입니다. 교육계는 공격적 투자가 미래투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살피주셨으면 합니다.

시대변화가 일어났다는 부분은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교육개혁을 진단할 때 대학입시 폐지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상 학벌구조의 고용관행이 노동시장에 있는 한 대학의 서열구조라든지 대학입시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 성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립대학 네트워크고 더 나아가 ‘대학연합체제’라고 하는 안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지요.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병목현상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스카이’ 중심 고용 관행을 혁파시키는 노력입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제는 개인 간의 경쟁이 아니고 집단 경쟁을 해야 하고, 집단지성에서 그룹화된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앞으로의 교육입니다.

## 기술과 민주주의

**장덕진** 정부에서 미래전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초창기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미국패권과 대륙에서 들어오는 중국패권이 부딪치는 장소였는데, 2개의 패권 사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구조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설정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으로 ‘테크놀로지 디커플링(decoupling)’이 일어날 것이고 기술이 중요한 안보 사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산업적인 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줄어드는 탈산업화 시대고 줄어드는

제조업에서 창출하는 고용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의 이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제조업을 잘 보존하면서 무언가를 ‘미래 먹거리’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과학입니다. 산업적인 기반을 제조업에서 과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방역을 잘했다는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들이 방역에 성공해 나가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역 성공이 민주주의와 어떻게 결합했는가, 기술과 정치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술을 민주주의적으로 사용하는 보호 장치를 앞장서 만드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 될 겁니다. 한국이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넷째, 이러한 기반 위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포괄하는 복지국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존 복지국가는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입니다. 지금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과학 기반 시대에 맞춰서, 복지국가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인력에 대한 재평가,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등 사회적 합의를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를 것인가?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 보다는 기존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여 있지 않은,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과 과학 분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가 바꾼 세계의 교육

**김성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의 변화를 보면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라는 책 제목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바꾼 세계의 교육’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해 봤습니다. ‘교육은 정말 대면 상황으로만 가능한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만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의 유용성을 잘 활용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면적 패러다임과 비대면적 패러다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 듯합니다.

다음 질문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육이 정말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교육이 보다 이상적으로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개별 맞춤형 교육은 실제 교실 상황에서만이 아니고 온라인 상황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종이 교과서와 더불어 디지털 교육 자료들이 함께 사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압축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성공의 경험을 갖게 된 셈인데, 이걸 잘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격차가 온라인 상황에서 더 벌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온라인학습에서 제대로 학습하게 할 것인가 걱정이 많은데요.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학습격차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권태선** 먼저 오늘 시민사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전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의료와 의료정보의 수집 판매 허용 논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야기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기한 전자식별 방식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시사회로 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기업에 대규모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고용안정 유지나



2020.6.15 전자출입명부 도입 현장 점검

기업 정상화 시 공적 소득으로의 환원 장치를 더 확고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에 바탕해 우리 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기적 정책도 당장의 단기적 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미래비전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야만 지금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커다란 그림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그 방향으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교육개혁이든 기후위기도 해결해 나갈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전환과 그린 뉴딜

**이창훈** 코로나19가 미래사회를 심층 변화시킬 것이라고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꼭 코로나19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이고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그린 뉴딜이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이야기되지만, 이미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심층적인 구조 전환 차원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그린 뉴딜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통해 민간재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및 규제는 결국 민간이 직접 투자를 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추경을 통해 정부 예산을 녹색분야에 우선 투자하되,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한 목표 설정과 정책개발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민간주도 에듀테크

**조현구** 저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대표로서, 에듀테크에 대해 말씀드리



2020.5.28 제5차 목요대화 | 조현구 대표이사, 이창훈 연구위원

고자 합니다. 이제 산업과 사회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문제해결력과 설득력이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 입시평가와 우리가 추구하는 역량중심의 교육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지식을 평가하는데 지식은 역량을 교육한다면 학부모들이 수업을 반대하고 평가를 위한 지식을 주입시키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이 역량을 길러주는 수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사 한 명이 2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식 주입교육이 편하지, 역량을 길러주는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로부터 공교육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 테크



2020.5.22 등교수업 현장 점검

놀로지가 만난 것을 ‘에듀테크’라고 부릅니다. 지금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바깥에서 기술을 이용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이런 기술의 장벽, 그전까지만 해도 교사들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큰 심리적인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을 강제적으로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선순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듀테크’라는 분야가 상당히 특이하게도 정부 주도로 발전해왔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있지 않은 일인데, 우리나라가 교육 부문에 대해 산업을 결부시키는 것을 좀 터부시하는 관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만드는 기업 ‘스타트업’이 생겨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에듀테크 육성이 포함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정부가 에듀테크를 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듀테크’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5월 20일 고3 등교수업 시작

사진출처: news1

##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정부·학교·가정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와 학교는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 발생에 발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세균

공공·외교

# 6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과 국가 경쟁력

“

개방·투명·민주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체계는 K-민주주의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



**발제** 코로나 이후 재난관리방향 정지범(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발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 김흥규(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흥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 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이미경 KOICA 이사장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해정 중앙대 정치국제학 교수  
 조세영 외교부1차관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훈 뉴욕타임즈 서울지국장

정세균 총리

##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과 국가 경쟁력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개방, 투명, 민주라는 3대 원칙에 따라서 코로나 19에 대응해 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면서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해 66.2%라는 엄청난 투표율을 기록했으면서도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멈춤 없이 작동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K-민주주의라 불릴 만합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기회로 전환 시켰습니다. 우리가 투명성, 개방성, 신뢰성을 높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 과정에서 민주적 장치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점검과 자기 혁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 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립과 균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공공과 국제관계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목요대화는 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계신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이후 재난관리방향

**정지범** 코로나 이후 재난관리 방향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많은 것을 이룩해 왔습니다만, 이제 특히 고민해야 할 키워드는 회복력(resilience)과 포용력(inclusiveness)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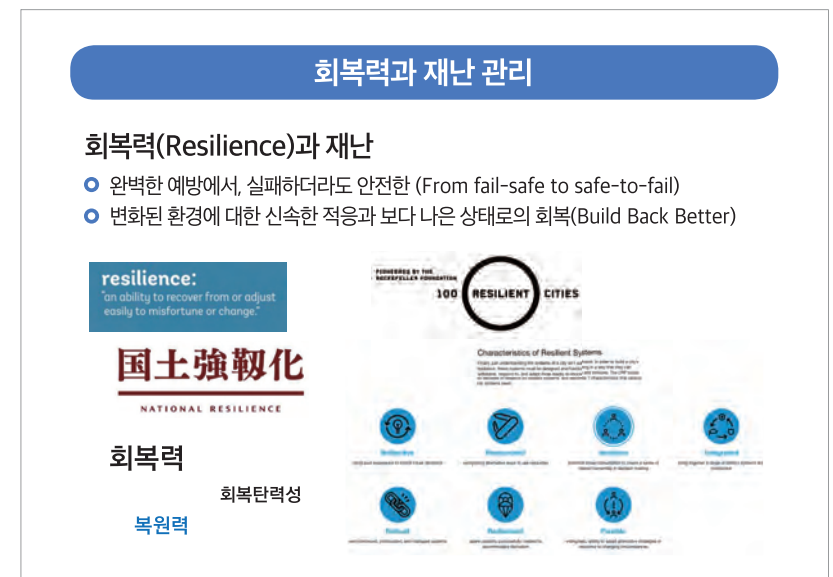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재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다지 재난이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자연재난 사망자 수는 매년 10명 정도였고, 사회재난 사망자 수가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망자가 많은 편입니다.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는 ‘책임지는 정부, 함께 지키는 안전 사회, 그리고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과 달리 “안전책임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계획에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세월호참사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포용이라는 가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차 계획 때는 재난관리 단계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4단계를 채택했고, 2차 때는 OECD 국가와 비교하는 형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3차 때는 세월호 이후, 특히 재난“대응”을 어떻게 잘할까 하는 점을 강조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4차 계획은 국제사회의 재난관리 동향을 따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많이 반영한 형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UN에는 재난관리에 관련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향력이 아주 큰 기구는 아닙니다만, UNDRR(국제연합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국제사회의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0년 효고 프레임워크라는, 각국에서 어떻게 재난관리를 해야 할지 하는 권고안을 만들었고, 현재는 2015년부터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각국이 재난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효고고 센다이냐면 그 당시 굉장히 큰 재난이 일본에서 발생하여 거기에서 모여 회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국제적 재난관리는, UN의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난관리 계획에서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은 회복력과 포용 등의 새로운 가치입니다. 예전 1~3차 재난관리계획 때는 국가가 모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항구적 예방’이니 ‘근원적 예방’ 등의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올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난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표6-1) 또한 다양한 재난의 위험이 수많은 곳에서 오기 때문에 정부 혼자 모든 재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재난 관리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모든 국민이 책임을 나눠서 지는 네트워크 형태의 재난관리가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회복력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단어입니다. 아직 우리말로 표준화된 번역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 리질리언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회복력이라고도 하고, 복원력이라고도 하고,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강인(強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하지만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강인한 민족’, ‘강인한 민족성’ 등 우리 민족의 특성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수많은 외세 침략이나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견뎌내는, 강인함, 이른바 회복력이라고



<표6-1> 회복력과 재난 관리





2020.6.4 제6차 목요대화 | '코로나 이후 재난관리방향' - 정지범 교수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사실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력 관점의 재난관리를 한다는 것은 완벽한 예방을 통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을 당하더라도,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build back better)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회복력을 보였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바꾸고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 원료로 활용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개발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코로나확진 역학조사지원시스템으로 활용했고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해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본격 도입했고 화상회의를 활성화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복력이라는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 가외성(redundancy), 연결성(connectivity), 유연성(flexibility) 등의 특징들이 강조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매우 잘 해냈습니다. 회복력이라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에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한편, 포용적 재난관리는 재난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포용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사망자가 백인 사망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전문직이나 고소득층은 소득감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감소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약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한 일 중 하나는 코로나 위험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송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5월 12일 기준으로 3만 명 이상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돌아온 해외 동포를 수용하는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했었는데, 여러 부처 공무원들, 장관님들이 노력해서 이 갈등도 슬기롭게 풀어나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포용적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력 중심의 국가재난관리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큰 재난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큰 재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국가재난복구 프레임워크(National Disaster Recovery Framework)라는 복구를 위한 국가계획을 따로 만듭니다. 장기적인 복구를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재난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특별법을 만들어 활용해 왔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세월호특별법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일반적인 국가계획을 통해서 모든 재난에 대한 장기적인 복구와 회복을 고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회복력 중심의 국가전략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을 X이벤트니 블랙스완이니 하면서 특이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에서는 “재난이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공통된 시각입니다. 모두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큰 재난이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은 매우 특별하고 드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바로 다음에 또 엄청난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고, 바로 이것이 현대 사회의 뉴노말(New Normal)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화된 재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 다부처 연합조직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입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종합적 대응, 협력적 대응, 융합적 대응, 협업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부처나 부서 경쟁평가가 아니라 얼마나 협업을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목요대화와 같이 민관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위기대응팀을 구성하여 민간에게도 실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부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조직으로서 재난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뉴노말 시대에서는 중대본을 일상조직으로 설치하여, 재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조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복력을 고려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은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힘을 유지하면서도 군대와 같이 위기상황에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계서제(hierarchy)와 네트워크(network) 형태를 같이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hybrid) 정부조직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용적 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sup>(표6-2)</sup>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 즉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확진자들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고,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사람들이 낙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방역활동을 잘해온 것처럼, 확진자를 보호하고 낙인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포용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6-2>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

**김흥규** 지금 천하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상으로 받아들여졌던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가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새로운 현상이며, 기존 천하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제 ‘뉴노말 : 새로운 정상’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뉴노말의 핵심은 중국이 이처럼 부상했으니까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에 기반해서 국제질서를 다시 재편하자는 의미입니다. 기존 천하질서의 약화는 국제정치에 엄청난 혼돈을 안겨줍니다.

그 와중에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중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미-중 간에 전략경쟁은 훨씬 격해지면서 소위 뉴-뉴노말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불안정하고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대단히 불확실한 시기, 즉 혼돈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담당했던 세계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포기하자, 세계는 마치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어떠한 리더십도 찾을 수 없는 G-제로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강대국도 세계적인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혹은 그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각국은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정책은 수교 이래 40여년 이상 중국을 포용하는 전략적 협력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응하면서 미국의 대중 정책의 원칙을 ‘전략적 경쟁’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번영 네트워크’, ‘태평양역지구상’ 등을 제시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중은 전방위적으로 대립하고 경쟁하기 시작했으며, 각각 자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가치 사슬을 구축하려는, 즉 세계를 양분화하려는 노력을 공공연하게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도 합니다.

바로 이처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5월 25일 현재 미국에서 사망자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도 200만 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당 확진율을 보면 5,091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숫자입니다. 현재 대응책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으로서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트럼프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인 가치사슬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가치사슬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에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하지만, 미국이나 세계가 트럼프가 희망한 대로 반드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중국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름의 자신감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의 생존을 결정할 역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생존이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은 중국식대로 발전해 가겠다는 생각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화전(和戰) 양면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戰)의 측면에서는 보자면, 미국과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전략 경쟁의 불가피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리커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서를 보자면,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발전역량 제고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중국은 화(和)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취약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자신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대미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까지 무려 세계 126개국에 대한 방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했던 3, 4월 시기에 세계 모든 교통, 통신, 운송 등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방역지원을 적극화하면서 중국과 유럽의 열차 물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와 중국이 추구하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물동량도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자신 스스로의 경제가치사슬 구조를 창출하고 중국 중심적인 영향력을 훨씬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에 코로나19의 영향은 큼니다. 첫째, 트럼프의 재선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향으로는 시진핑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봅니다. 시진핑은 2050년까지 중국이 초강대국화되는 세계 전략 비전을 제시했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는 시진핑을 제거할 만한 정치적인 대안 세력도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 주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20.6.4 제6차 목요대화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 - 김홍규 교수

미·중 간 국력 격차가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최근 IMF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영향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유럽에서 제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로 듣고 있는데, 유럽 내 최근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에 대단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독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독일 내에서 미국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은 73%, 중국에 대해서는 36%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중 관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냉전이라 할 정도로 깊어가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미·중 간의 가치사슬

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21세기 들어 상당히 깊이 진전되고 복합적으로 얽힌 세계화의 과정을 겪어왔고, 그 복잡한 가치사슬과 이해관계를 단번에 끊어내기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향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미·중 간에 탈동조화의 노력은 지속되고 경쟁이 위주가 된 관계도 지속되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테러, 그리고 코로나 같은 새로운 질병들은 미국이나 중국이 독자적으로 다룰 수 없는 글로벌한 사안들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미·중이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개연성이 큼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미·중 각국은 스스로 탈동조화를 전제하면서 계속 자기중심의 가치사슬을 만들어나가면서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협력을 같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쟁을 위주로 한 협력'을 담지하는 복합형 체제를 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와 견제정책을 예상보다 빨리 강화하면서, 수년 내에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구축이라든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라든가 이런 이슈를 끌고 나올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은 거대한 폭풍의 중심부로 돌변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나 주한 미군의 주둔 등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중 양쪽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입니다. 1962년 발생한 쿠바 핵미사일 위기의 악령이 이 지역에 맴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통상환경은 대단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가 당면할 국제정세는 장기적 미-중 대결 체제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표6-3) 미국은 중국 대 나머지 국가의 대결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G11을 소집한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다극화된 세계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상호 간에 이 엄청난 전략구도가 충돌하는 세계를 목도하면서 우리도 그 폭풍우 속에 처하게 됩니다. 새로운 천하질서를 만들 어떤 비전이나 그것을 이끌어 나갈 원칙, 규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는 대단히 혼돈스러운 시기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처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절벽의 중간 다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위태한 상황이 바로 한국의 모습입니다. 뉴노멀에서 뉴뉴노멀로 넘어가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런 국제정세에 대처할 외교·안보·경제 복합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 변화

#### 장기적 미중 대결 체제 예상

- 미국의 “중국 대 나머지 세계의 대립 구도” vs 중국의 “다극화 전략”이 충돌

#### 새로운 천하질서 비전이 부재한 혼돈의 시기

- 미국이 “미국 우선” “오직 미국” 동맹국에 대한 경시 정책으로 새로운 천하질서의 구축이 가능한가?
- 중국이 원하는 새로운 천하질서는 무엇인가?  
진한(秦漢) 모델? 송(宋) 모델? 명(明)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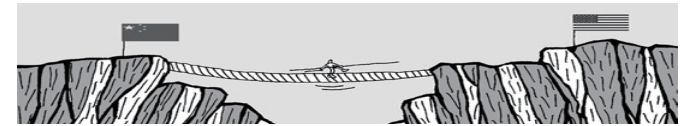
<표6-3>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 변화

### 십자로 선상의 한국

#### 코로나-19 세계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처할 ‘외교안보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청하고 있음

: 새우 혹은 돌고래? 차라리 미꾸라지나 복어의 전략 필요

- 미국 중심의 가치 사슬 vs.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
- 이 혼돈의 시기는 ‘위기’만이 아닌 ‘기회’도 동시에 제공
- K-모델 : 산업혁명, 민주화, K-pop, K-방역, K-IT, K-Governance



<표6-4> 십자로 선상의 한국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표6-4) 미-중이 자국 중심의 새로운 천하질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딱 그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린치핀입니다. 따라서 압력이 그만큼 크겠지만 동시에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한국과 같이 하고자 하는 동기도 대단히 강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중이 이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반도체라든가 IT칩 등 전략적인 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년의 공간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의 창을 어떻게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 K-모델이라 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성공시켰고 민주화를 성공시켰고 K-팝, 이번 K-방역까지 전 세계를 열광하게 했습니다. 초유의 위기 시대에 바로 이런 한국의 성공스토리를 모아서 우리의 외교, 우리의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집단지로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정치적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면한 혼돈의 시대를 이해하고 국론을 통합하고 대안을 제시할 훌륭한 리더십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과거 익숙한 패턴과 답안으로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태도와 편승형의 외교전략, 안보전략, 경제전략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답이라고 단안을 내리는 태도 역시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모르는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함께, 끊임 없이, 명민하게 현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동시에 결합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청자** 재난대응에 민간이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무엇인지요?

**정지범** 이미 정부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상황에서 꼭 필요한 자원들을 지정해 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 상황 등에서 보면 다양한 물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하고 민간에서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난 상황에서 같이 쓸 수 있을지에 대한 협약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까요?

**김홍규** 미·중 전략경쟁이 점점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저는 남북관계의 발전, 특히 비핵화 목표는 점점 더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8년부터 저는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파고에 비핵화 이슈는 실종될 것이고 앞으로도 비핵화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어느 국가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 이슈를 어떻게 미·중 전략경쟁에 활용할까가 더 관심일 것입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도전의 시기에 맞춰 전략 방향을 아마 수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비용이 크고 모험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압박을 넘어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극적이고 자신의 생존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상황이 개선되면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이미 전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력갱생입니다. 2018-19년 미국과의 교섭에서 어떤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없고 대단히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레짐을 넘어서서 북한을 지원해 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갱생 전략의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비대칭 역량의 확보를 추구할 것입니다.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이나 다연장 방사포 실험의 성공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방어적 역량은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 역량도 계속 강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처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현재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점차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의 변화를 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그들의 전략자산을 활용해 북한이 채택한 전략적 방향을 전환시키도록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해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수단으로써 활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원칙이 굳건한 외교

**안인해** 미국이 G11, G12라고 하면서 한국을 초대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그 목적이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11에 호주, 인도, 한국, 러시아를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14년 크림사태 이후 초대받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G7 모임에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읍저버로 참석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다자회의에 대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형태로 한국의 참여에 대한 메시지를 냈는데 그 의미를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회의 분위기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국이 가장 솔직하게 중국에 전달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 입장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조율, 특히 일본의 협조가 정말 필요한 시기로 한일 관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0.6.4 제6차 목요대화 | 최상훈 지국장, 이신화 교수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외교부가 소위 3불정책(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 MD에 속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에는 참가하지 않겠다.)에 대해 중국에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의 성능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약속했던 3불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방부가 중국에게 설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래 제가 중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전보다 중국이 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더욱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줌으로써 전략적으로 중국과 협력동반자 관계에 있어서 지렛대가 될 수 있고, 그런 만큼 한국의 입장을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킨들버거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셜플랜 설계자였던 킨들버거는 영국으로부터 실질적인 패권국 지위를 이어받은 미국이 먼로주의에 따른 고립주의로 인해서 글로벌 공공재 기여에 상당히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1930년대 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현재 상태로 투영해 보면,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중국은 ‘중국몽’, 소위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이후 세계 제1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G11으로 확대하겠다고면서

중국을 포위하듯이 고립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코끼리가 사랑을 하든 싸움을 하든 잔디는 망가진다’는 인도 속담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세계 패권이 요동을 치면서 우리 잔디가 지금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에서 분명한 원칙, 투명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실질적인 손해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고 잔디가 덜 밟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장이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세계 비전 제시와 ODA 확대

**최상훈** 외신 기자를 20~30년 했는데 제 기억에는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국가나 남이 칭찬하거나 비판할 때를 잘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영화를 보면 인류의 공적이 나타나거나 하면 소련이나 미국 등 강대국들이 그전에 싸우던 것을 그만두고 같이 싸우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공적인데 지금은 서로 공격하고 더 분열되는 모습이 격화되는 특이한 상황 같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이 더욱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 먼저 맞고 잘 극복한 나라라서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열면 뉴스가 나오고, 학교를 열었다가 문제가 되면 이것이 다시 뉴스가 되는 특이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국제적으로 엄청난 전 인류의 공적이 나타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국이 앞서가는 나라로 비전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중국이나 미국이 그것을 너무 잘못하고 있고 WHO 같은 국제기구도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복잡한 관계로 인해 예전의 역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칭찬은 칭찬보다 부러움 같아요. 자기 나라는 잘못하는데 한국은 내부적으로 잘하고 또 재외 국민 등을 잘 챙기니까... 그런데 실제 가만히 보면 한국이 다른 국가에 많은 도움을



2020.3.27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ODA 등의 능력을 넓혀서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어려울 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면 우리의 이미지가 제고되리라 생각합니다.

## WTO 2.0, 국제통상질서의 재편

**안덕근** 지금 미국은 국제통상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려고 시도하는 듯합니다. 일례로 미국 출신 WTO 사무차장은 2025년 WTO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WTO 2.0 출범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7월 1일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NAFTA를 재협상하여 출범한 USMCA가 발효되었고, EU와 일본과도 연대를 강화하면서 호주, 싱가포르 등 다수의 중견국들이 최근 미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가 중립이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통상체제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연대구도에서 다소 유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미 관계를 끌고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우리의 수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보호조치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운 속에서 수입을 막는 것을 설마 하겠냐 싶지만 오히려 국내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서 산업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코로나 상황까지 가세되면서 교과서적으로 제시되는

해결책이 “다시 돌아와라(Reshoring)”입니다. Just-in-time delivery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이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지역 중심의 공급망(Reginal Value Chain)을 운영하기 위해 리쇼어링(Reshoring)을 시키고 니어쇼어링(Near-shoring, 돌아오지 못하면 주변으로라도 와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산업 공급망체계가 가장 강하게 묶인 데가 북미와 동아시아의 팩토리 아시아라고 불리던 한·중·일의 산업관계입니다. 사실 한·중·일 산업관계는 글로벌 공급망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우리 정부가 한·중·일의 산업관계를 더욱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해야되는 시점이지만 정치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산업경제적인 상황과 정책적인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회복탄력성과 탈한국화

**이신화** 회복력도 중요하지만 바닥을 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회복 탄력성’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복력에 더해서 시련을 기회나 행운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체력’을 어떻게 키울까가 중요합니다. 또한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과 생존을 위한 상호의존·국제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국제무대에서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가 회복 탄력성으로 어떤 기회와 행운을 거머쥐고 생존을 위한 상호의존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동의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리더십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하지만 저는 차기 대선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강력한 봉쇄와 컨트롤로 확진자 수를 잡고 경제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근원지의 책임이나 그 후의 투명하지 못한 대응, 그리고 마스크 외교 등에서 나타난 부실함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중국이 코로나19 과정에서 나은 위치를 선점했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호주나 스웨덴의 특정 도시들에서는 중국의 특정 도시들과 맺었던 자매도시의 교류를 끊고 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등은 미국이 반중(反中) 연대를 위해 구성하고 있는 다자적 네트워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미·중 패권경쟁으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불안정성과 미·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이 다가온다는 현실적 상황에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위치를 담보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대응에 있어 권위주의가 나은가, 민주주의가 나은가 보다는 ‘누가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가’가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작아도(크지 않아도) 믿을 만한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K-방역, K-한류 등 ‘메이드인 코리아’ 프로젝트(Made in Korea Project)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외교전략에 대해 짧게 제언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블루 뉴딜 많은데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 역할을 늘린다 하더라도 민간의 활력을 절대 저해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 개입을 하지 마시고 스마트 관여를 해야 합니다. 둘째, 이제야말로 비군사적·비전통적 안보 이슈, 초국가적 이슈를 발판삼아 정치적·군사적으로 예민한 이슈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는 ‘기능주의적인 협력’(Functionalist Cooperation)이 포괄적 인간안보(Comprehensive Human Security)로 확대될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국제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려면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이슈’인 남북관계, 동북아 4강 외교 등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치외교 안보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제협력 이슈인 인간안보를



2020.4.10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말하면서도 북한과의 방역 협력 등을 말합니다. 그 순간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탈(脫)북한’, ‘탈(脫)한국’의 입장이 국제문제에서 선도적으로 국제활동을 하며 지구촌에서 진정한 한국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이룰 수 있고, 북한의 인권이나 인간안보를 위한 우리의 협력과 압력을 둘 다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도생의 시대지만 세계화된 세상에서 지구촌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합치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시각에서 세계화는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인간의 얼굴을 가진 세계화를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대혼란(The Great Disruption)

**이혜정** 저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대공황과 대침체에 빗대어 대혼란(The Great Disruption)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디스럽션(Disruption)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말로로는 중단, 단절, 분열, 붕괴고 영어로는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면역력에서부터 국가의 유대, 국제질서 전반까지 일단 디스럽티드(Disrupted)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재난 부분에서 회복력이 중요하고 상시적인 재난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부분들로



인해 우리는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와 방역의 충돌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국가 재정을 백신 개발과 국방비 중에 어디에 치중할 것인지 등 앞으로 싸움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 협력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왔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의 발전권을 막으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K-방역에 앞서 대통령을 탄핵한 국가입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 정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웃어넘겼습니다. 이제 미국이 살아남기 힘든 변곡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기후위기

**이미경** KOICA는 코로나19로 기존 업무는 차질을 빚었지만 전 세계 1,900명의 봉사단원·개발협력 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지원하고 개도국에 방역물자를 제공하는 등 팬데믹에 맞춘 새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아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주제는 ‘경제개발과 민주주의를 모두 이룬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우리의 자산으로 잘 지속시켜 나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최근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왜 한국이 잘 했는가’ 물었을 때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경제성장만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나라’라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역량을 인정받는 선진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 세계에서의 위상을 세우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비하려면 한국은 세계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인가? KOICA는 어떻게 이를 개도국 사업에 녹여낼 것인가? 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장 글로벌한 가치를 우리 것으로 실현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글로벌 관심사는 ‘기후위기’이고 기후위기 대처가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EU는 몇 년 전 온실가스 제로화 목표를 세우고 그린 딜(Green Deal)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을 하려면 CO2 감축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어떤 산업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을 밝혀야 합니다. KOICA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도국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나... 이런 것을 밝혀줘야 한국이 글로벌리더로서 지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린딜 계획을 밝힌 EU와 연대도 가능할 것이구요.

그린 뉴딜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를 경제와 연관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린 뉴딜이 대단한 인프라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로 닦고 다리 놓는 토목식 인프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효과적으로 행정과 예산의 누수를 없애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큰 틀은 던져졌지만 아직 그런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등에서 구체적 내용을 다듬어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 코로나 이후의 핵심 주제는 기후위기, 그린 뉴딜이고 글로벌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충돌

**오 준** 지난 100년간 이번 코로나 사태에 비교할 수 있는 인류에 충격을 주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질병보다는 1·2차 세계대전,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지금처럼 세계화가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며 살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보건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세계화된 시대기 때문에 질병보다는 세계대전이나 대공황에 비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는 인류가 각성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파괴적인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하는 Soul searching 모드에 들어가서 1차대전 이후 국제연맹을 만들었고 민족자결주의도 나왔고 2차대전 후에는 국제연합, 즉 UN도 만들었죠. 이러한 인류의 단합이 오래가지 않았지만 최소한 몇 년간은 잘해 보자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1930년대 대공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국에서 시작하여

위낙 경제적인 쇼크가 크니깐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에서 자기 경제를 보호하고 다시 살리려는데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1933년에 나치독일이 집권하고 그 이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하는 일이 2, 3년 단위로 계속 일어나도 세계 주도국가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국제연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아 각성모드로 들어갈지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인류 공동의 도전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중에도 비난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이 사태가 오기 전에 경기 침체, 불평등 증대, 기후변화가



2020.6.4 제6차 목요대화 | 안덕근 교수, 오준 교수

심각한 수준에 와 있었습니다. 국가들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단합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죠. 요즘 코로나로 기저질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제사회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도 단합모드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지난 40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동시에 포퓰리즘도 확산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민주주의고 어디까지가 포퓰리즘인지 구분해 보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 지도자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신의 선거만 생각하다 보니깐 서로 단합해야 할 시기에 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 저는 이것을 ‘국가 중심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국가의 역할, 무엇과 비교한 국가의 역할인가 하면, 하나는 세계주의와 비교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주의와 세계주의(Nationalism vs Globalism)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국가중심적 접근과 국민중심적 접근(State centered approach vs People centered approach)입니다. 국제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있고 국내적으로도 시민사회나 private sector, 기업이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시대가 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대위기 하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될까? 위기가 끝난 이후 국가는 계속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비국가 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UN처럼 국제적으로 국가들이 어느 정도 주권을 양보해야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대응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까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민간이 중요하다,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무엇이 중요하든지 간에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나부터 잘 살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도 우리부터 잘 살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세계가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애자일(Agile) 조직과 유연한 클라우드 공무원

**문명재** 오늘 목요대화의 방식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각기 다른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서 거의 동시에 해법을 찾아 나섰는데 다행히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초반부

우리나라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문제를 잘 푼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메르스 때 유사 문제를 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된 방식대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맞았던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감염 속도가 훨씬 빠른 코로나19를 대처하는데 주효했던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난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난제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정부도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도록 정부운영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다양한 난제를 잘 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문제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라도 상대적으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예측하여 다가올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견적 정부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미래 난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수록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CIA 공무원들이 가끔 제가 근무하던 텍사스주립대학교 부시 행정대학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그 교육과정의 특징은 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출간된 ‘소방관의 선택 (The Heat



2020.2.29 구급이송대원 출동 대기소 방문

of the Moment)’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영국 소방관들의 훈련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순간순간 내려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복기해보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소방관으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끔 강요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가능성을 완벽하게 고려하면서도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처럼 무증상 감염 같은 과학적 사실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가능성을



완벽하게 고려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려면 결정 지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정지체가 일어나게 되면 코로나처럼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결정하게 되면 책임문제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빨리 결정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빨리 수정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문제, 공무원과 민간의 협력관계 등 많은 분야에서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와 같은 난제는 정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잘 참여해 주고 사회가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조직과 정부개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첨언 드리겠습니다. 앞서



2020.5.19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방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정부가 더욱 유연해지고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부처 칸막이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모두 부처 단위로 배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직 경로를 보더라도 특정 부처에 입직된 후에 그 부처에서 쭉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 칸막이를 낮추고 부처 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직 후에 과장, 국장이 되기 전에 유관부처 두세 곳은 최소한 경험하고 승진하여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부처와 너무 자기 동일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세 개 부처에서 경력을 쌓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부처 간의 협력적이고 유연한 정책 결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공무원이나 애자일(Agile)조직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처에 속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미션이 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공무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자일 조직의 하나로 불리는 18F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지원이라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미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 수요가 있으면 이에 맞게 유연하게 업무팀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을 포함하여 유연하게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민간 자원, 개인 자원, 정부 자원이 유동적으로 동원되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 예비군이 있는 것처럼 의료부문에서도 예비적으로 공공의료 자원을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한 공공의료 자원을 공공부문에 포함하여 유지한다면 지나치게 큰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의 자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민간부문과 비영리 부문과 협력하여 의료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미리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난제를 맞이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아직 우리의 숙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의 베스트 셀러였던 “Good to Great”의 첫 문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것의 가장 큰 적은 위대하다(good is the enemy of great)’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잘했다고 박수치는 데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주어진 숙제를 최선을 다해서 계속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위기극복과 시민사회

**류홍번** 큰 담론 이야기보다는 작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공배경에는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매우 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와 비영리단체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책을 제시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단체이고,

사회복지단체이고, 보건의료단체이고, 마을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익활동 단체나 시민들이 마스크를 제작·배포하고, 취약계층을 찾아내어 지원해왔던 과정에서 이번 위기가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잘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잘한 것만 강조하면 그 밑에서 손발로 움직였던 수많은 시민사회 조직들의 헌신이 묻힐 수 있고 시민사회가 더 활성화되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앞서 말씀하신 회복력이나 포용적 재난관리가 시민사회 강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호참사 위기극복 활동을 하면서 회복력에 관한 문제, 포용적 재난관리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세월호참사가 터지고 나서 기존에 하던 시민단체 업무를 전폐하고 세월호 문제해결에 적극



2020.6.4 제6차 목요대화 | 정세균 총리 모두발언

나섰던 경험이 있고, IMF 위기 때는 실업극복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 실업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위기극복 활동 이후 제가 활동하던 시민단체로 돌아오니 단체는 굉장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회비 수입도 줄고 기부금 수입도 주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이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40억 파운드의 기부금이 줄어서 영국의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것이고 이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이 악화됨으로서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위기가 처할 것이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최대한 빨리 비영리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런던시장이 나서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27일에 코로나19 극복 지원법률을 제정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려주고 비영리단체에 대출해 주고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금을 감액시켜 주는 등 비영리단체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정부가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조직이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갖고 포용적 재난관리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고용안정특별대책에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만 있을 뿐 시민사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기준을 기업에서 사용하는 매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로 나타내기 어려운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의 힘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약화되면 될수록 정부의 공권력과 권위주의, 국민통제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건강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시민사회 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록 시민사회를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기부금품법의 개정이나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등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회시스템과 조건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 코로나시대 대외경제 상황인식과 정책방향

**김홍종** 미·중경쟁은 본질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아닌가 합니다. 플랫폼이 미·중 어느 나라의 기준으로 가느냐 인데, 이렇게 본다면 결국 갈등은 장기적으로 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중국은 보다 기술자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성을 확보하려면 가치사슬의 중간



단계에서 핵심적인 분야와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장치산업에서 기업들이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를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회복력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리쇼어링은 노동이 자본이나 기술로 대체 가능한 산업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동남아 옆에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이 어렵더라도 니어쇼어링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ODA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K-방역을 수출한다고 했을 때 물론 마스크와 개인보호장비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종합 패키지로 해서 시스템 전체를 이식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 될 것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코로나시대 확장적 재정정책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리쇼어링이



2020.3.19 특별입국절차 강화 현장 방문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최근 4차 산업과 기술혁신으로 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이 요인이 더 커서 물가 안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투자가, 특히 친환경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에서 강력한 정치적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그린 딜은 기존산업의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됩니다. 또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유럽은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린 딜이 에너지 자립을 달성케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보다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경제여건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우리나라는 끊임 없이 모여서 얘기하고 아이디어 개발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동물로 표현해 보면 ‘뱀장어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회를 만들듯이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강력한 대응조치로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조치와 경험을 공유받고 싶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사진출처: news1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정상화와 더불어 경제 정상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러시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양국 보건장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해 방역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러시아 총리와 전화통화  
('20.6.4)

토론

7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과제와 전망

“

지금까지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준비 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은 결과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과제를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을 섬기며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를 믿고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혜진	아나운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과제와 전망

**박혜진**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을 묻는 10차 목요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대화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대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석해주셨습니다. 현재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목요대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꾸준히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10회째인데요. 여섯 번째까지는 포스트 코로나 주제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일상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이 목요대화를 시작하게 되신 이유, 그리고 오늘 10회까지 성과라고 할까요?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정세균** 우선 목요대화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60~70년 전에 스웨덴에 ‘타게 엘란데르’라는 분이 총리를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그분이 목요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노사정 지도자들이 만나서 주제가 있으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도 만나서 소통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sup>1)</sup> 타게 엘란데르(1901년 6월 13일 ~ 1985년 6월 21일)는 스웨덴의 총리, 정치가이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리더였으며 46년부터 69년까지 23년간 총리직에 있어 '스웨덴의 가장 긴 총리'라 불리었다. 그는 실제로 키가 컸다.

## 코로나19 이후 시대 목표 및 전략

## 새로운 일상,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

4대  
목표12대  
전략

## 40대 핵심과제

-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li> <li>2.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li> <li>3.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li> <li>2.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li> <li>3.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li> <li>4.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정부서비스 제공</li> <li>5.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li> <li>2.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li> <li>3.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li> <li>2.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li> <li>3.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li> </ol>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li> <li>2.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li> <li>3.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li> <li>2.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li> <li>3.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li> <li>4. 디지털 포용성 강화</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li> <li>2.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li> <li>3.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li> <li>2. 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li> </ol>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GVC 재편에 대응한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li> <li>2.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한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li> <li>3.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한 코로나19 이후 대외경제 전략 수립</li> <li>4.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li> <li>2.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li> <li>3.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li> <li>4.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li> <li>2.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li> <li>3.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li> <li>4.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li> <li>2.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li> </ol>   |

문제를 풀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노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야 할 게 많은데,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도 소통과 협력, 대화와 타협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목요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리가 되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바로 왔어요. 사실 사회적인 문제, 노사정 문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하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는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변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처음 6차에 걸친 목요대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번 전문가를 열 분 이상 모시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의논했고, 그 결과로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표 7-1)

그래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직접 관계되는 부분을 소화해서 실천하고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과제들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자는 의도였습니다.

**박혜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진정이 되는 것인가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또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있고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아직은 끈을 놓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세균** 4월에는 상당히 안정화가 되었는데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그 이후 확진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수도권에 확산되다가 급기야 충청, 호남까지 번져서 굉장히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박혜진**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을 하는 데 있어 중대본과 함께 지자체 협력, 소통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께서는 대구 지역에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경남에 있는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도 했고, 지방정부 최초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고 실제 그대로 실행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경수** 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서 신천지 이후 갑자기 확산됐을 때 총리님께서 각 관련 부처의 장관님들과 17개 시도의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매일 아침 중대본 영상회의를 하루도 안 거르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속한 대응이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대응 관리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경남은 지금은 50일 이상 특별히 지역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응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제안도 했는데요. 경남에서 선별적으로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방식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 보니까,

선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든 복지부든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복지데이터나 과세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스위스나 독일처럼 신속히 처리됐을 것이었습니다. 신청 이후 스위스는 30분, 독일은 3일 만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이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여러 방향 중 보편적 복지와 함께 보편적 과세, 그것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고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국가 차원의 경제사회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혜진** 국내 코로나 확산은 31번 환자가 시작된 신천지가 분기점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이재명 지사께서는 신천지 시설 강제봉쇄에 들어가고 집회금지 행정명령도 발하고 정부와 협력해서 신도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강제 조사도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초강수라고 평가되는데 그런 대응을 놓고 일각에서는 종교탄압이다, 인권탄압이다, 포퓰리즘이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등 반발과 지지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직접 지휘해 오시며 상황이 어떠셨는지요?

**이재명** 우선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지금 잠깐 되돌아보면,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 우리 총리님께서 본부장을 맡으신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 관계가 매우 유기적이고 속도가 정말로



빨라졌다는 것을 실제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면 바로 내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중대본에서 결정이 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는 우리 총리님 역할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대응이 매우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방역을 실제 집행하는 지방정부 책임자니까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답답한데 이번에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요.

총리님이 대구까지 가서서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신천지가 문제되곤 다음에 명단을 구해야 추적조사를 하는데 명단을 못 구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냐·없냐, 해야 된다·말아야 된다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행정에서 속도를 매우 중시하는데 특히



2020.7.2 제10차 목요대화 | 강경화 장관, 이재명 도지사

코로나19 감염문제는 시간문제잖아요, 기하급수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법률에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는 다 한다는 주의여서 압수수색 할 필요 없이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 무리하다는 비난 때문에 안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저는 하루가 급하니까 어쨌든 ‘포렌식’팀 동원해서 가서 강제로 받아왔죠.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보통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집단이면 그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라는 종교집단 특성이 숨기려는 게 있죠, 명단에서 뺀다든지. 실제 이후에 명단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명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아예 서버에서 명단을 직접 확인해야겠다 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 정부에 준 게 일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집단 특성이 우려되었는데 실제 그랬던 것 같고요. 저희가 명단 구한 것은 다 사실에 부합했어요. 그 이후에 또 검사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해야 된다 해서 신도 한 사람씩 강제하기는 그렇고 총회장을 강제로 검사를 시켜야 신도들도 따라 한다고 해서 제가 강제로 시키려고 갔던 게 시끄러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감염병 대응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죠. 일부 비난이 있기는 한데 칭찬도 많아서 대단한 손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혜진** 외교부 장관께서는 지난 3월이었나요? 영국 유명 저널리스트 ‘앤드류마 쇼’에 출연하셔서 한국의 방역이 어떠했는가, 또 국제협력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한 인터뷰가 참 화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조희수가 250만 회가 넘었고 미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많은 나라에서 인용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 K-방역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강경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해외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내 방역, 보건 관계자분들, 그리고 의료진이 현장에서 너무 훌륭하게 해 주시는 것을 국제사회에 자신감 있게 이야기만 했을 따름인데 그게 호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중대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중대본의 리더십, 총리님의 리더십을 돌이켜 보면 매일 아침 총리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며 해 주시는 모두(冒頭) 발언이 있습니다.

모두 발언을 되새겨 보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공약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총리님의 모두발언만 모아서 여러 나라 말로 책을 번역해서 내면,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의 기본철학이 무엇인지 참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중대본’에 매일 참여하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외국 언론에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백신 없이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봉쇄 없이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러저러한 것을 문의하고 배우려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의 방역물품, 진단키트를 어떻게 신속하게 개발해서 널리 보급했느냐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자주 받는 질문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신속함,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에 많이 놀라고

있는데 우리 진단키트는 만드는 회사도 많아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해 왔고 지금까지는 90여 개국에 대해서 크게는 아니지만 진단키트, 마스크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 지원을 넘어서 우리가 쌓아온 경험, 정보,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웹 세미나, 비디오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국제회의, WHO 총회, G20 화상회의, 아세안+3화상회의를 통해 우리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말씀과 의지를 계속 피력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교부는 다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미국에 UN본부, 제네바에 WHO, 파리에 유네스코가 있는데 그룹 특성에 맞는 우호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보건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안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년 사이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전쟁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는 전쟁이 드문데, 그래서 이제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UN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감염병은 제네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인종차별 폭행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의 연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차별 사건이 나쁜 선례가 됩니다. 당하는 본인의 트라우마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연대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크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대해서도

각 정부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코로나19 대응이 각국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백신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나요?

**강경화** 그렇습니다. 백신 개발이 가장 첨예한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개발을 위해서 복지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지원단도 만들었고요. 또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 다음에는 대량 생산이 되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접근’이라는 것을 화두로 이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WHO 차원에서, 백신연합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나가는 상황이지요.

**김경수** 백신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치료제 개발이 더 급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세균** ‘경쟁과 협력 관계’예요. 각국이 서로 빨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각자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쟁하고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야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테니까요.

**박혜진** 우리 총리께서는 코로나 총리,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왜 이런 이름이 나왔느냐 하면 이런 이름이 붙을 만큼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거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대구로 내려가서 3주 동안 현장 지휘도 하고 중대본도 이끄셨습니다. 그때 마스크 대란이 있었는데 마스크 5부제도 시행하고 생활치료센터도 운영하고, 국가 간 이동제한이 생기면서 국내 기업이 어려워졌는데 국내 기업에 대한 건강상태확인서 등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했던 점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총리님께서 직접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정세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국민이 위대하셔요. ‘마스크



2020.3.9 마스크 5부제 시행 현장 점검



쓰십시오’하면 써 주시고 ‘손 씻어주세요’하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공직자의 헌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김경수 지사님이 계시지만 지자체 공직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가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적극 행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책임, 내 책임을 따지고 규정을 따지고 하면 한세월인데 원래 70일 만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일주일 만에 결정해서 진단키트가 빨리 나왔죠. 이런 공직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매일 아침에 소통하는 것, 경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즉시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결정을 속도감 있게 이루었던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스크 때문에 정말 혼이 났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불안하니까 마스크를 사시려고 줄을 계속 서 계시는데 간격을 두지 않으니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5부제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마스크 5부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정회하면서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국무회의 정회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마스크에 대한 방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회의가 끝날 때까지 결정을 못 해서 정회하고 중대본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결정했죠.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대구에 환자가 수백

명씩 나오는데 병실이 확보되어야 말이죠. 전국적으로 병실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일단 경증환자들은 연수원에 모셨습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기업 연수원에 의사와 간호사, 행정 요원을 한 팀으로 만들어 생활치료센터에서 경증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중증환자들을 병원에 모실 수 있게 됐죠. 이 생활치료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런 것 등등 국민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 그리고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이 굉장히 도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강경화 장관님이 국제사회와 소통을 잘해서 우리가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국제사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홍보라고 할까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0.3.4 제10회 임시국무회의



최근 국내 발생 환자도 많지만 해외 유입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외교부 역할도 매우 컸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박혜진** 코로나19를 과연 언제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초기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어렵겠지만 더 장기화될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 또한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당장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가 많기 때문에 시행한 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었죠.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경남에서도 자체로 경남형 긴급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각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한 이유를 듣고 싶는데 이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재명** 우리 경기도는 미리 지급했죠. 미리 지급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총리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일단 저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먼저 실증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증명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이번에 재난

지원금이든 재난기본소득이든 현금이 아니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했기 때문에 100% 매출로 이어지고 새로운 생산을 유발한 경제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4월 9일에 지급했고 정부에서 5월 중순에 지급했는데 그 한 달 사이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얼마큼 회복되었는지 비교해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보다 경기도가 10~15% 정도 더 많이 회복되었어요. 수치로 증명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정부 측에서도 색다르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보지 마시고 13조 원 정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진짜 좋아지는데...’하고 체감하는 정책이 과연 있었는지, 명절 대목이 한 달 반 이상 됐다고 할 정도로 승수효과가 있었던 정책이 있었는지 또한 있을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심각한 지경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박혜진** 그 이야기를 경남지사께서 조금 더 이어 가겠습니다.

**김경수** 코로나 대구·경북 확산 이후에 지역 전문가들과 계속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주문했던 게 코로나 상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이런 위기 상황에는 원칙적으로 정부는 가능하면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는 그렇게 해도 생기는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초기에 정부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일찍 실시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취약 계층이 확대된 거죠. 거기에만 지원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득 하위 50%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지원은 정부가 하고 사각지대는 지방정부가 최대한 찾아서 막아내고 했죠.

과정은 이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 그 이후 신용카드 매출도 늘어났지만 경남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가니까 그전에는 그런 곳을 한 번도 안 갔던 사람들이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역화폐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가게에 처음 가 봤다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되고 그중에서 다시 재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사람들이 약 80%, 앞에서 승수효과 말씀하셨는데 지원금 자체가 갖는 승수효과도 있지만 실제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지원금이나 지역화폐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실제 조사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정세균** 지금 행안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참고가 될 것입니다.

**김경수** 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잘 분석해 봐야 할 게, 코로나

상황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소비를 전혀 못 했던 사람들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지원금 지급 시기가 겹치면서 보복소비라고 표현하는, 기존에 소비를 못 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그때 소비했던 것도 있고 거기에 지원금이 겹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소비가 늘어난 것 같고.

지원금 중에서도 소득분위별로 어느 정도 소비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한번 행안부나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은 확실히 늘어난 것 같은데 고소득층은 기존에 하던 소비에서 지원금 때문에 늘어난 착한 소비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났는지는 한번 조사해 봐야, 향후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7.2 제10차 목요대화 | 정세균 총리, 박혜진 아나운서

**박혜진**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되었는지 행안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소비심리가 살아났고 효과가 있었다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벌써 2차 재난지원금을 바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예산 감당이 되겠느냐, 국가 재정에 부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거나 결정된 곳도 있고 경기도도 이 지사님께서서는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씩 2차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도 먼저 던지셨는데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경기가 급작스럽게 하강했다가 어느 정도 복구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견뎌줘야 하는데 지금은 계속 악화되는 국면이거든요. 이미 정부지원금이나 지방정부 지원금을 80~90% 다 써서 다시 매출이 정체에서 감소로 수치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경기회복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거죠.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시점에는 추운 겨울 초입이었다면 지금은 더 추워졌고 앞으로 더 추워질 것이다.

다른 나라의 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직접 지원금은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나? 이런 판단이 남은 건데, 저는 현장에서 실제 느낀 대로 재정 지출 중 이만큼 경제유발 효과가 큰 게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두 회 정도 더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악화를 막는 재정적으로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혜진**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추가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신다고요?

**김경수**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재난지원금이 고소득층의 소비에 미친 효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2차 지원금 논란에도 정부가 정책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은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고용이 어려워져서 무급휴직 또는 실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시기를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게 해 줘야 기업이 쓰러지지 않고 코로나 극복 이후 신속하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2차 대유행 전이라도 이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대규모로 쓰러지고 그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이 계속해서 어려워서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줘서 경제 활성화도 시켜주고 사회보장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포퓰리즘 정책이다,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는 우려와 비판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일단 두 지사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김호기 교수님 예상치 못하셨죠?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호기** 질문을 하신 게 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니까 기본소득에 국한시켜 말씀드리자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전부 모아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예산 51조가 필요하거든요,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보다 빈곤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리는 이것이 결국은 국가재정의 증대로 국가부채를 늘리게 된다는,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내놓는 대안이,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기성 복지제도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이런 논리를 내세우지만 기성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시할지는 현재 적어도 저희 학계에서는 논쟁 중입니다. 그 까닭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제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기계가 미숙련 일자리를 대체하고 자본이 노동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나타나기는 하지만 재능이 뛰어난 이들이 부를 독점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사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분명하면서도 급진적인 대안을 도입해야 하지 않냐는 견해가 제시됩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기본소득은 제가 공부하는 사회과학에서는 미래역사였는데, 미래역사가 현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관건은 국가재정에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겠습니다만 증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목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께서 4년 전이죠.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수당을 먼저 도입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재명** 저는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정직하자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보통 국민이 반대하거나 반감을 가지면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일은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OECD 평균 조세부담률 대비 조세부담률이 현재 현저히 낮고 사회복지 지출도 낮아 OECD 절반밖에 안 되고, 저부담 저복지 상태인데 사실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되거든요.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서요.

그러면 결국 증세해야 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복지지출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한다고 하면 혜택 받는 사람과 세금 내는 사람이 달라요. 도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죠. 정책 저항이나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해서 말은 하지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증세하게 되면 모두 똑같이 혜택을 보는 데다가, 특히 경제 정책으로서 효과가 확실하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은 실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 경제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가 체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기술도 가지고 있고 자본도 시장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체계적으로 떨어지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공급 역량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공급이라는 바퀴와 수요라는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하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그런데 이 수요라는 쪽이 계속 위축됩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고 기술혁명 때문에 생산이 노동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성장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취해야 하느냐 하면 수요를 확장시켜 줘야 합니다. 수요는 결국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촉진하는 게 경제성장에 도움 된다는 얘깁니다. 이제는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게 경제성장에 훨씬 도움 되는 게 확실합니다. 이 점을 총리님께서 고민해 주시고요. 기본소득이 결국 수요를 확대시키는 가장 유용한 정책입니다.

**정세균** 우리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거든요. 그중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년 3차 추경까지 하면 거의 100조 가까운 부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을 강력하게 하기는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곳간 상황도, 재정건전성도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현재 정부 입장은 전 국민 고용 보험으로 해서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는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니까, 학계나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테니까 정부는 우선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것,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쪽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김경수**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는 덕분에 어떤 효과가 생겼느냐 하면, 국민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식 중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그동안 이런 사실을 정확히 국민이 인식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논란을 통해 많은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또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 그래서 복지 퍼주기, 엄청나게 퍼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2020.7.2 제10차 목요대화 | 김경수 도지사, 김호기 교수

세계적으로 보면 복지지출이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가 조금 전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부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3차 추경을 마치면 GDP 대비 43.5%가 됩니다. 그런데 OECD가 권고하는 건전재정이 60%예요. IMF는 85%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다 부채비율을 늘리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법으로 묶어 놓고 있는데 법을 풀면서까지 계속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이런 논의를 통해 국민이 국가부채에 대해 인식 전환을 한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두 지사님 사이에

본질적으로는 동의하시지만 시기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인식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차이는 아니고, 저도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굳이 경기도 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내년, 내후년에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소액으로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고, 총리님께 부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국 단위로 하기 어려우니까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방법은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서 각 시도 조례로, 예를 들면 토지보유세를 0.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지방세기본법을 수정해 주시고 각 시도에서 알아서 주민 설득이 되는 곳, 의회와 협의가 되는 곳은 먼저 시행해 볼 수 있게 지역적으로 먼저 부분적으로 시행해서 검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경기도민 다 동의 받아서, 압도적으로 동의 받아서 정착시킬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는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압도적 다수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요. 그게 원래 조세잖아요. 그런데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세금 내면 다른 데 쓴다, 낭비한다는 불신 때문인데 이 불신을 깨서 목적세로 이 세금은 100% 환급된다. 단, 골고루. 이렇게만 해 주면 내는 게 즐거울 것입니다.

**박혜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변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실제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호기 교수께서 한 언론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협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이중적 뉴노멀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사회변화의 전망을 해 주신 것인데,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 같고 변화해야 하는지요?

**김호기** 먼저 생태학적 측면인데요.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인간과 동물 접촉이 많아지며 생긴 병이거든요. 앞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비규칙적으로 계속 인류의 삶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과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첫 번째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학적 측면인데,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보통 케인즈주의의 복권,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귀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작은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유능한 정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정부와 국가상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정치학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은 개인의 자유 못지않게 공동체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일사불란한

관료제에 입각한 방역정책을 추진한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상당히 성공적인 방역정책을 펼쳤고 ‘K-방역’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율과 공동체 안전을 어떻게 잘 결합시킬 것인가, 이것입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공존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고요.

네 번째,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언택트’, 비대면 사회를 열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학기 ‘줌’으로 거의 강의를 했는데요. 온라인 쇼핑, 학습, 문화생활의 세계가 열렸는데, 문제는 비대면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직접 만나서 살아야 하거든요.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결합시킬 것인가, 공존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학 측면인데, 강경화 장관님도 계시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탈세계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저희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된 유일한 것은 코로나19다. 나머지 모든 것은 세계화로부터 후퇴되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세계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죠, 국제적인 협력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세계화된 바이러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역시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훼손된 ‘글로벌 거버넌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축해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역설적 과제를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코로나 이후라는 새로운 세계로 지금 막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혜진** 아까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를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미 코로나로 인해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를 일반적인 사회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총리님부터 두 지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세균** 디지털 전환,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불가피하게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라 보죠? 그러면서 환경을 중시하는 풍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 그리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디지털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론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본의 아니게 흑자도산을 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흑자도산을 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키기와 기업 살리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고용안전망 확충, 물론 방역과 국민 보전을 챙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챙겨야 할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과제, 이 일을 잘 실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2020.3.2 대구 생활치료센터 방문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비대면 사회가 되면, 장하준 교수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람 간 이동은 줄겠지만 거꾸로 물자의 이동은 많아질 거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나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 경남의 제조업 혁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비대면 사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관련 산업정책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적극적인 산업정책 측면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린 뉴딜’은 요즘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조차 자기들에게 납품하려면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제품만 가지고 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RE100’이라고 해서, 그런 글로벌 대기업에 우리나라 협력업체가 거래하는 것도 대단히 많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BMW가 선언을 해 버린 바람에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도 재생에너지 100%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그린 뉴딜’, ‘스마트 뉴딜’이 미래산업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조금 전 일자리 걱정을 하셨는데 일자리는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늘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가사노동, 코로나로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하는 가사노동이



2020.7.2 제10차 목요대화

늘어났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일종의 필수노동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 대우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일종의 기본소득이란 취지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연장선에서 대우와 보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개념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공익활동과 필수노동에 대해 일자리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여지, 사회적 합의와 국가적인 대책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는 앞으로 여러 논의를 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뉴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면 수도권에 경기도가 전체 묶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다른 지방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국가 차원의 발전 없이는 비대면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도권 밀집이 감염병에 얼마나 위험한지가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 차원의 새로운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재명** 모든 문제는 경제에서 출발하죠. 전쟁조차도 다 경제적인 게 크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특별한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것은 디지털 온라인 경제의 비중이 큰 세상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산물들을 과거에는 노동을 투입하면 더 생산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

노동의 필요성이 적어지는 거죠. 생산에 기여하는 노동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것은 공공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생산 또는 서비스 이런 것은 만들어 내는데 인간노동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분명해요.

디지털 온라인 경제는 사실 세계화와 직접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독점하게 되죠.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8%만 넘으면 엄청 훌륭한 기업이에요. 보통 3% 그러는데 온라인 디지털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40~60% 이렇게 됩니다. 매출이 다 이익이에요.

그런데 매출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버 비용만 늘어나요. 즉,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배당도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보니까 돈을 벌기 너무 쉬운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 어느 순간에는 시장이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본소득이 있어야 하겠더라, 이걸 절감한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신속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그렇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인간노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노동이란 생존을 위한 수단이죠.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슬픈

노동’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것을 한다는 게 노동인데, 이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계나 인공지능, 기술혁명을 통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노동은 자기실현의 과정이다. 그러면 그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죠. 생산성은 낮지만, 수입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 예컨대 문화예술 일자리나 귀농귀촌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길게 멀리 보고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디지털 기업’이 수익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셨는데, 잘 들여다보면 수익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접속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이 높아집니다. 결국 국민이 그런 데이터 기업이나 온라인 기업들의 수익에 자기 개인정보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들.

수익률 60, 80% 기업들, 이제는 그쪽 기업에 있는 인사들 만나면 그런 기여를 자기도 하겠다고 합니다. 생활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국민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사회적 합의고, 그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제 기본소득과도 논의의 맥락이 닿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김호기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가 얼마나 허약한가? 갈수록 국가 간 연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해지고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모순되게도 이런 바이러스 같은 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꽤 높아졌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강경화** 비대면이 가장 어려운 게 외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교는 민감한 사항이 많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어쨌든 화상회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최근에 외교 일정을 조금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비대면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대면, 대면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해나가야 할 과제가 외교부에겐 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불평등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더 심화되고 나라 안에서도 심화되면서, 반세계화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심화 되었죠. 각자 국경을 막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글로벌 연대 등은 제쳐두는 겁니다.

많은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상황인데,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우리나라만 안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를 “아,

이제는 극복했다”, 이래야만 우리도 안심하고 여러 제한조치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기존 다자체제가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큼니다.

그렇지만 기존 다자체제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UN이나 WHO가 국제사회에 기여한 바를 그것대로 평가해 주면서, 실현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 노선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질서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김호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능력 있는 정부’, 이번을 계기로 ‘저



2020.7.2 제10차 목요대화

나라는 능력 있다’, ‘위기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그중 우리가 탑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만 능력 있는 중견 국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러 가지 모임을 넘어서 새로운 국제적 모임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능력 있는 중견국이 국제사회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G7에 대통령께서 초청받으셨던 것도 이런 현상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공간을 계속 넓혀가겠습니다.

**박혜진** 목요대화 중 열 번째 순서가 가장 특별하고 가장 심도 있지 않았나. 그럼에도 시간이 조금 모자란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또 그 과제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10차 목요대화를 해 봤는데요.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세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강경화 장관님, 김호기 교수님, 김경수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고 지금으로서는 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잘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고, 특히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자세를 갖고 국민과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G20 국가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경제성장률이 양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기 극복도 앞서간다고 바라봐 주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시각도 감안해서, 지방정부와 힘을 합쳐 가면서 국민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반드시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고 정부를 믿고 잘 도와주십시오. 정부도 제대로 역할을 꼭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국민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소감

부록

## 목요대화 後

“코로나 방역의 핵심은 마스크와 검사이고, K-방역의 핵심은 혁신과 헌신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면, “협력”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협력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한 진정한 혁신으로 슬기롭게 크로나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권기태 칠곡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지난 7월 2일, 제10차 목요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값진 자리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정세균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과 복지, 사회보장, 조세 등 우리 사회 전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경제사회 구조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투명한 사회가 공정한 나라를 만듭니다. 총리님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지난 학기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실시된 온라인 수업 등에 의한 원격교육은 학교 교육의 공백을 메꾸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서처럼 학습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학생 간 학습격차가 확대되었다고 걱정합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습에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지원이 이전보다 더 필요합니다. 목요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사들에게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과제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학생 간 학습격차 해소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내가 코로나19로 인해 공멸하지 않고 함께 공생하려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바꾸고, 당대의 법칙과 질서를 바꾸고, 문명의 차원을 바꾸라는 이 강제적 지구 변화의 한복판에서 나는 무엇을 더 안 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없애야 하는지, 이 안 함과 없음에 적응하려는 내 준비는 얼마나 돼 있는지. 어떻게든 견디고 응원하고 보살피며 또 견디는 시간들.기도를 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김중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인류는 위협의 불확실성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이중적 뉴노멀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 이중적 뉴노멀이 부여하는 과제인 의학적 방역과 경제적 방역에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대응해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모범국가이자 선도국가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살다보면 갑자기 세상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하던 사물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소란스럽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요. 2020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코로나19는 이런 급변의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총리님께서 주재하신 목요일 대화는 코로나 시대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열띤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정확한 코멘트를 해 주시고 참석자들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총리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흥중 대외경제연구원장**

코로나19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더 이상 평범해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목요일 대화는 코로나19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정치권에 던져진 숙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고민해볼 수 있는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독감 예방 무상접종 확대’의 필요성을 알게 됐고,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거쳐 관련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목요일 대화의 목적인 전문가와 소통과 협력 통해 국회의원으로 국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고 머리를 맞대면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목요일 대화는 좋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세균 총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사회를 넘어서 온라인 연결로 이뤄지는 온택트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에 따라 디지털 기반 교육체제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유현준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에 대한 미래 전망에 공감하면서, 제기되는 문제 의식은 향후 디지털 공간과 학교 공간, 주거 공간, 도시 공간 등이 세대간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학교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간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한다면 지금의 물리적 학교공간은 환경 생태주의, 디지털 사고 공간, 사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 대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누리 교수는 교육혁명이 민주혁명의 시작이자 끝임을 강조하면서 해방 100년 이후 새로운 교육을 위해 4대 폐지(대학입시, 대학서열, 대학등록금, 특권 고등학교)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의제는 교육계의 오랜 쟁점이기도 하다. 다만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 교수의 4대 폐지 방안을 관통하는 정책 의제로서 정부의 학습투자 확대 의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방안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가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목요일 대화’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막힌 언로를 뚫고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찾아가는 열린 소통의 장이다. 무엇보다도 전문가와 시민들은 이런 대화의 기회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의 의제 설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스웨덴의 타게 엘란데르 전 총리가 추진한 ‘목요일클럽’처럼 사회적 갈등의 핵심 당사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지속하여 우리 사회의 노사갈등이나 기술혁신과 관련된 이해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진보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다. 총리께서 매주 목요일 시간을 내어 전문가와 시민들을 만나는 이런 귀중한 대화의 자리를 통해 한국사회의 공론을 조성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성경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Data Driven Decision Making)은 위기의 효율적인 대처와 미래 사회의 합리적 공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됨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자원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Data Driven Policy Making)의 문화와 제도를 사회에 더 확고히 뿌리내리는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목요대화를 통해 중요한 사회현안을 다루고, 정책의제화 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과 속도를 반영하기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총리실 차원의 정책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K-방역의 성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해온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도 강구되면 좋겠습니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전 세계가 정치적 격변을 겪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제가 한층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 총리께서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정열적으로 소통하시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쪼록 이 같은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

코로나는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 아젠다이므로 총리께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요대화의 형식을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빠르게 바뀌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미래에 대한 이해와 꿈을 공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목요대화’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대화가 그런 대화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모든 것이 요동치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정책이 유연하고 다양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대를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거나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없다면 잘못된 정책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규제와 통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위험하지만 시장을 활용하지 못하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문제를 낳을 때 또 다른 규제로 막다 보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정책만 복잡해집니다. 정책은 핵심만 건드려야 단순 간결해지고 역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로 우리의 이웃들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도감있게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오면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의 목소리로 위기를 함께 넘어가야 합니다. 코로나는 진보·보수, 여야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류 모두의 재앙 앞에서 분열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국민적 어려움과 사회 갈등을 함께 잘 넘길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변방의 진은 중국을 창조했고 후진국 반도국가였던 그리스는 서양 문명의 기원을 잉태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길목에 위치한 반도국가 한국이 디지털 문명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여야가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광재 국회의원**

이제 코로나19는 당분간 우리 인간과 함께 하는 바이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요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든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변종 바이러스 출현을 보면서, 모든 변종에 효과있는 백신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AC)를 기대했으나, 코로나와 함께(With Corona, WC) 하는 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과 국가경영도 이제 WC시대에 맞게, 장기전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총리와의 대화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대화만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멋진 책으로 나올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활자화 된 글들을 보니 좋은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참 유익한 대화를 했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만큼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좋은 의견을 나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정세균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본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에 수록된 의견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은 결과로 정부 의견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행** 국무총리비서실  
**제작** 국무총리비서실  
**편집** (주)태그엔  
**인쇄** 원프린팅  
**발행일** 2020년 9월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사회적 갈등해결과 미래 준비를 위한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제도입니다.

#### 제작에 도움 주신분들

(국무총리비서실) 강혜인, 권오중, 김현, 나제순, 나찬미, 박신, 박유리, 박재형, 박정용, 박태준, 변성주, 오정우, 윤순희, 이규빈, 이신혜, 이원철, 이윤정, 이정민, 정재훈, 정찬호, 최수일, (KTV) 나희철





사회적 갈등해결과  
미래 준비를 위한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비매품/무료  
93300



ISBN 978-89-94428-51-2